

북한사회변동 2015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사회변동 2015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장용석, 정은미, 박명규, 김경민 저

집필진

장용석
성균관대학교 정치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은미
서울대학교 사회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사

박명규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 통일평화연구원장

김경민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석사
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북한사회변동 2015

목차

제1장 / 연구 개요 11

- 1. 조사 목적 12
- 2. 조사방법 및 설문내용 14
- 3. 인구학적 배경변수들의 특징 18
- 4. 조사 의의와 시사점 27

제2장 / 주민의 생활과 정보화 31

- 1. 들어가며 32
- 2. 주민의 식의주 생활 35
- 3. 주민의 가계경제와 가족생활 64
- 4. 사회의 정보화 75
- 5. 계층별 생활의 불평등 80
- 6. 평가와 시사점 91

제3장 / 경제의 시장화와 95

소득, 연령대, 지역 분화

- 1. 서론 96
- 2. 경제의 시장화 98
- 3. 사회적 분화 132
- 4. 평가와 시사점 190

제4장 /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 195

표목차

〈표 1-1〉 조사의 표본	14	〈표 2-11〉 정보통신기기 이용 실태(2015년)	78
〈표 1-2〉 설문내용의 구성	17	〈표 2-12〉 계층별 주식 구성 비교(2015년)	84
〈표 1-3〉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18	〈표 2-13〉 계층별 고기섭취 횟수	86
〈표 1-4〉 응답자의 탈북 전 최종거주지	20	〈표 2-14〉 계층별 의류 구매횟수 비교	87
〈표 1-5〉 응답자의 재북 학력수준 분포	21	〈표 2-15〉 계층별 살림집 유형 비교	89
〈표 1-6〉 응답자의 재북 직업 분포	22	〈표 2-16〉 계층별 정보통신기기 보유율 비교	90
〈표 1-7〉 재북 당시 응답자의 당원 여부 분포	23	〈표 3-1〉 장사경험 여부	98
〈표 1-8〉 응답자의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24	〈표 3-2〉 전업장사 비중	99
〈표 1-9〉 응답자의 남한 친척의 유무 분포	25	〈표 3-3〉 성별 장사 경험	100
〈표 1-10〉 응답자의 결혼 상태 분포	25	〈표 3-4〉 공식 직업별 장사경험 비중	101
〈표 1-11〉 응답자의 자녀의 수 분포	26	〈표 3-5〉 교육수준별 장사 경험	102
〈표 2-1〉 하루 식사 횟수	37	〈표 3-6〉 대학교 졸업자 중 장사경험자 비중 추세	103
〈표 2-2〉 주식의 구성	39	〈표 3-7〉 당원 여부별 장사경험자 비중	104
〈표 2-3〉 고기 섭취 횟수	42	〈표 3-8〉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105
〈표 2-4〉 의류 구매 횟수	46	〈표 3-9〉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기간	106
〈표 2-5〉 의류의 원산지	49	〈표 3-10〉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원부자재와 상품 출처	107
〈표 2-6〉 의류의 주요 구입경로	51	〈표 3-11〉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별 원부자재·상품 출처	109
〈표 2-7〉 살림집 유형	56	〈표 3-12〉 장사나 부업으로 얻은 월평균 가구소득(5분위)별 원부자재·상품 출처	110
〈표 2-8〉 살림집 장만 경로	57	〈표 3-13〉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애로사항(1순위)	112
〈표 2-9〉 살림집 개조희망 사항	63	〈표 3-14〉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애로사항(2순위)	113
〈표 2-10〉 일상의 고민거리	72	〈표 3-15〉 전체 수입 중 뇌물 비중	114
		〈표 3-16〉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타인고용 여부	115
		〈표 3-17〉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타인 고용 규모	116
		〈표 3-18〉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타인 고용 기간	117

〈표 3-19〉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식(1순위)	119	〈표 3-43〉 경제적 계층 분화 이유(2순위)	148
〈표 3-20〉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식(2순위)	120	〈표 3-44〉 경제적 계층 분화 이유(3순위)	149
〈표 3-21〉 교육수준별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식(1순위)	122	〈표 3-45〉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10분위)별 경제적 계층분화 인식(1순위)	151
〈표 3-22〉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책임소재/1순위)	123	〈표 3-46〉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5분위)별 북한이 잘살기 위한 정책 인식(1순위)	153
〈표 3-23〉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책임소재/2순위)	124	〈표 3-47〉 국가지급 월평균 가구생활비 수준별 북한이 잘살기 위한 정책 인식(1순위)	154
〈표 3-24〉 당원 여부별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책임소재/1순위)	125	〈표 3-48〉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5분위)별 타지역 이동 빈도	156
〈표 3-25〉 당원 여부별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책임소재/2순위)	126	〈표 3-49〉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10분위)별 외부소득 득문 경로	157
〈표 3-26〉 북한이 잘 살기 위한 정책(1순위)	127	〈표 3-50〉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5분위)별 남한 문화 경험	158
〈표 3-27〉 북한이 잘 살기 위한 정책(2순위)	128	〈표 3-51〉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5분위)별 남한문화 친숙도	159
〈표 3-28〉 교육수준별 북한이 잘 살기 위한 정책 인식(1순위)	130	〈표 3-52〉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5분위)별 남한인식	160
〈표 3-29〉 대학교 학력자들의 북한이 잘 살기 위한 정책 인식(1순위)	131	〈표 3-53〉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5분위)별 남한의 대북무력도발 인식	161
〈표 3-30〉 국가지급 월평균 가구 생활비 총합	133	〈표 3-54〉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5분위)별 경제시스템 지지도	162
〈표 3-31〉 공식 직업별 국가지급 가구생활비 총합	134	〈표 3-55〉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10분위)별 통일방식 인식	163
〈표 3-32〉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	136	〈표 3-56〉 연령대 및 성별 구성	165
〈표 3-33〉 장사나 부업을 통한 가구소득(5분위)	137		
〈표 3-34〉 장사나 부업을 통한 가구소득(10분위)	137		
〈표 3-35〉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5분위)별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139		
〈표 3-36〉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직업(1순위)	140		
〈표 3-37〉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직업(2순위)	141		
〈표 3-38〉 북한에서 중간 정도 잘 사는 직업(1순위)	142		
〈표 3-39〉 북한에서 중간 정도 잘 사는 직업(2순위)	143		
〈표 3-40〉 북한에서 가장 못 사는 직업(1순위)	144		
〈표 3-41〉 북한에서 가장 못사는 직업(2순위)	145		
〈표 3-42〉 경제적 계층 분화 인식(1순위)	147		

〈표 3-57〉 연령대별 장사경험	166
〈표 3-58〉 연령대별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168
〈표 3-59〉 연령대별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기간	169
〈표 3-60〉 연령대별 (장사나 부업 등을 통한) 비공식수입	171
〈표 3-61〉 연령대별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 인식(1순위)	172
〈표 3-62〉 연령대별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식(1순위)	174
〈표 3-63〉 연령대별 북한이 잘 살기 위한 정책 인식(1순위)	175
〈표 3-64〉 연령대별 남한문화 경험	176
〈표 3-65〉 연령대별 남한에 대한 인식	177
〈표 3-66〉 연령대별 경제시스템 지지도	179
〈표 3-67〉 연령대별 김정은에 대한 주민 지지 정도 평가	180
〈표 3-68〉 연령대별 김정은 정권의 예상 유지 기간 인식	181
〈표 3-69〉 연령대별 핵무기 보유 인식	183
〈표 3-70〉 북한에서 가장 잘사는 지역(도)에 대한 인식	184
〈표 3-71〉 북한에서 중간 정도 사는 지역(도)에 대한 인식	185
〈표 3-72〉 북한에서 가장 못사는 지역(도)에 대한 인식	186
〈표 3-73〉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평양 제외)에 대한 인식	187
〈표 3-74〉 북한에서 중간 정도 사는 도시(평양 제외)에 대한 인식	188
〈표 3-75〉 북한에서 가장 못 사는 도시에 대한 인식	189

그림목차

〈그림 2-1〉 하루 식사 횟수	38
〈그림 2-2〉 주식의 구성(2015년)	40
〈그림 2-3〉 고기 섭취 횟수	43
〈그림 2-4〉 탈북 직전 1년간의 식생활 형편	44
〈그림 2-5〉 의류 구매 횟수	47
〈그림 2-6〉 의류의 원산지	49
〈그림 2-7〉 의류의 주요 구입경로	51
〈그림 2-8〉 살림집 유형	56
〈그림 2-9〉 살림집 장만 경로	58
〈그림 2-10〉 살림집 매입 시기	60
〈그림 2-11〉 살림집 개조희망 사항	64
〈그림 2-12〉 가계 소득의 주요 지출 내역(2015년)	66
〈그림 2-13〉 남한상품의 사용 경험과 주요 품목	68
〈그림 2-14〉 소비자 행동의 능동성(2015년)	69
〈그림 2-15〉 사교육 경험 유무와 주요 분야	71
〈그림 2-16〉 가족의 의사결정 유형	74
〈그림 2-17〉 인터넷 이용 경험	79
〈그림 2-18〉 인터넷 이용 장소	79



제1장
연구 개요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1장 연구 개요

1. 조사 목적

기존의 많은 북한 연구는 권력구조의 변화, 엘리트의 변동, 노선 및 정책의 변화 등과 같이 상부구조나 거시구조의 변화에 주로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연구경향에 대한 비판적 또는 대안적 접근으로 최근 북한의 일상생활의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대두하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 또는 기층 사회에서 지속되는 일상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구조 및 행위와 복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 연구는 사회 전체에 대한 평가와 개념화를 함축하고 있으며, 해당 사회를 알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분석하고 방향성을 전망하기 위해서 기층 사회에서 꿈틀대고 있는 수많은 작은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통해 사회구조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정치적인 변화를 포함해 북한의 점진적인 체제전환 가능성을 연구하며, 나아가 통일에 대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북한사회변동은 북한 사회구조들의 유의미한 변화로 정의할 수 있으며, 사회구조는 규범과 가치, 행위와 관계, 문화적 현상 등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변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치와 규범의 변화, 행위의 유형 및 관계 패턴의 변화, 새로운 문화적 현상의 등장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우리는 북한사회변동의 속도와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사회의 변동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 속도를 조절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또한 북한사회 변화가 어떤 미래를 향해 진행되고 있는가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결국 지금까지 언급했던 북한사회변동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이다. 북한 사회의 폐쇄성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그러나 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어렵다고 방치해서도 안 된다. 현재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2016년 6월 현재 약 3만 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용한 자원 중 하나일 수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사회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계적으로 활용가능하고 시계열적인 변화도 추적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를 설계하여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단편적으로 진행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하여 조사 직전 연도에 북한에서 나온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사회변동조사는 북한사회의 유의미한 구조적 변화를 측정하여 변동의 속도와 요인을 분석하고 변동의 방향을 전망할 수 있는 가시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내용은 북한주민의 식의주 생활, 지역별 생활수준, 정보화, 시장화의 양상, 경제행위의 다양성, 사회계층의 분화와 이동, 인

구사회학적 정보 등을 포함한다.¹

2. 조사방법 및 설문내용

북한사회변동조사는 북한의 사회변화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사용된 질문은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직전에 식사를 할 때 하루 몇 끼를 식사했습니까?” 또는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어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까?” 라는 형식의 질문을 활용하였다. 비록 북한이탈주민을 조사대상으로 하지만, 이러한 형식의 질문으로 북한에 거주할 당시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일반 북한주민의 삶의 양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표 1-1〉 조사의 표본

단위: 명

조사연도 탈북연도	2012	2013	2014	2015
	4/6-6/2	6/13-7/16	5/20-7/7	5/22-7/6
2011	127			
2012		133		
2013			149	
2014				146
총 계	127	133	149	146

1_ 2015년 북한사회변동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음을 밝힌다. (IRB No.1505/001-012)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조사하려면 탈북 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함께 2015년에 입국을 했더라도 2011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보다 2015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사회의 실태 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타당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탈북과 입국 사이의 기간이 길어지면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탈북과 입국 시기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기억과 의식의 변형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사회변동조사는 표본의 구성을 조사연도 직전 연도에 탈북하여 남한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로 제한하였다. 즉, 2015년 조사의 표본은 2014년 1월 1일 이후 탈북한 후 남한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다.

조사 표본의 탈북연도를 동일하게 제한하자 표집 과정과 방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모집단의 규모가 축소되어 동일한 탈북연도를 기준으로 표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통일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입국자는 2,401명, 2011년 입국자는 2,706명, 2012년 입국자는 1,502명, 2013년 입국자는 1,514명, 2014년 입국자는 1,397명, 2015년 입국자는 1,275명이다.²

이 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준수하며 조사 대상자들에게 조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2_ 통일부, “통계자료-북한이탈주민정책”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검색일: 2016년 7월 10일).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한 후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거나 조사 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통일부, 전국의 하나센터 등 유관기관들 외에도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연례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4년 동안 네 차례 실시된 북한사회변동조사는 시계열적 데이터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설문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시의성과 보완성을 고려하여 몇 개의 문항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설문 내용은 크게 북한주민의 식의주 생활실태, 정보·통신 환경 실태, 시장경제 활동과 소득 실태, 경제개혁에 대한 인식, 인구사회학적 배경으로 구분되며, 세부내용은 <표 1-2>와 같다.

2015년 조사에서는 소유한 정보통신 기기, 인터넷 이용 경험과 장소, 식생활 형편, 소비 행동, 가정 내 의사 결정권, 월 평균 지출비용 등의 항목들을 새롭게 추가 하였다. 반면, 2014년 조사에 포함되어 있던 생활 수준의 상대적 평가(이웃, 친척), 소비 영역 등과 같은 항목들을 2015년 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1-2> 설문내용의 구성

범주	설문내용
식의주, 정보·통신환경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루 식사횟수 주식의 구성 고기 섭취 횟수 의류 구매 횟수 의류원산지 의류 주요 구매처 인터넷 이용 경험 살림집 형태 살림집 장만경로 살림집 개조 희망사항 살림집 장만 시기 남한상품의 사용 경험과 품목 소유한 정보통신 기기 인터넷 이용 장소
빈부격차의 요인과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사회의 계층 구성 지역 간 빈부격차 직업 간 빈부격차 월 평균 지출비용 빈부격차의 발생요인 일상생활의 고민거리 시기별 소속 계층에 대한 주관적 평가 공식·비공식 수입 수입의 주요 지출내역 식생활 형편 사교육 경험과 분야 총지출에서 뇌물의 비중
시장경제 활동의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수입 원천 자재/원료의 원산지 시장경제 활동의 애로사항 고용노동의 실태 사유화의 대상 경제침체의 이유 경제발전 정책 방향 소비 행동

3. 인구학적 배경변수들의 특징

1) 성별, 연령별, 탈북-입국기간의 특징

먼저 성별 구성을 보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현황 통계에서 북한이탈주민들 중 여성의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 조사에서 여성의 비율은 그보다 낮다. 조사대상 중 여성의 비율이 2015년 61%로, 2014년 65%, 2012년과 2013년에는 약 56%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연령대별 입국 현황에서 20~4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될 수 있다.

〈표 1-3〉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명, %

연령	2012		2013		2014		2015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대	22 (17.3)	21 (16.5)	24 (18.1)	22 (16.5)	17 (11.4)	31 (20.8)	16 (11.0)	29 (19.9)
30대	11 (8.7)	12 (9.4)	17 (12.8)	12 (9.0)	13 (8.7)	15 (10.1)	20 (13.7)	25 (17.1)
40대	10 (7.9)	21 (16.5)	11 (8.3)	27 (20.3)	12 (8.1)	27 (18.1)	13 (8.9)	24 (16.4)
50대	6 (4.7)	11 (8.7)	7 (5.3)	9 (6.8)	6 (4.0)	13 (8.7)	6 (4.1)	10 (6.8)
60대 이상	7 (5.5)	6 (4.7)	0 (0.0)	4 (3.1)	2 (1.4)	13 (8.7)	2 (1.4)	1 (0.7)
합계	56 (44.1)	71 (55.9)	59 (44.4)	74 (55.6)	50 (33.6)	99 (66.4)	57 (39.0)	89 (61.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연령별 그리고 전체 남녀의 성비를 나타내며, 합이 100이 넘는 경우는 반올림 오차 (rounding-error)에 해당한다. 2011년과 2012년 조사의 연령대에 대한 코딩 오류 정정으로 연령대별로 일부 차이가 발생하였다.

응답자의 탈북연도와 입국연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조사 대상자 전체는 2011년에 탈북하여 2011년에 입국하였다. 2013년 조사에서는 131명이 2012년에 탈북하여 2012년에 입국하였으며 2명은 2013년에 입국하였다. 2014년 조사에서는 149명 전원이 2013년에 탈북하여 이중 141명이 2013년에 입국하였고, 나머지 8명은 2014년에 입국하였다. 2015년 조사에는 전원이 2014년에 탈북하여 이중 129명이 2014년에 입국하였고 나머지 17명이 2015년에 입국하였다.

또한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리는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2013년, 2014년의 응답자들이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57개월(표준편차=1.74), 3.37개월(표준편차=1.72), 2.34개월(표준편차=1.61)이었다. 2015년 조사대상자들의 평균적인 탈북-입국 기간은 2.49개월이었고 표준편차는 1.99였다. 달리 말하면 2012년 조사대상자의 68% 이상이 탈북 후 입국까지 4개월이 걸리지 않았으며 2013년, 2014년과 2015년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각각 76.7%, 86.1%, 84.2%가 4개월이 걸리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주민들이 탈북을 결심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남한으로 입국하는 것이 최근 추세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고향, 학력, 직업별 특징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하기 전 최종거주지는 지역적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양강도와 함경북도 출신으로, 2015년도의 경우 이들 지역 출신은 84.9%에 이른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6월말 현재 함경북도 출신이 63.2%, 양강도 출신이 12.8%, 함경남도 출신이 9.0%이다. 모집단 자체에서 함경북도 출신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많으며 최근에는 양강도 출신의 북한탈주민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지역 편중 현상은 최근의 탈북 행위가 구조적 여건이 수월한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4〉 응답자의 탈북 전 최종거주지

단위: 명

북한의 출신지	조사연도			
	2012	2013	2014	2015
평양	0	1	3	3
개성	0	0	0	0
남포	1	0	2	1
평안남도	0	2	4	3
평안북도	1	6	0	3
함경남도	14	11	9	5
함경북도	65	51	53	64
자강도	0	0	1	0
양강도	39	58	72	60
황해남도	3	0	1	1
황해북도	3	1	2	4
강원도	1	2	2	2
무응답	-	-	-	-
합계	127	133	149	146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등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가장 많았다. 2012년 조사부터 응답자의 65.4%, 71.4%, 61.7%, 61.0%가 고등중학교 출신들이며,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도 약 10.2%, 16.5%, 13.4%, 19.9%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6월말 입국자 기준으로 재북 학력 현황을 보면 고등중학교가 70.0%, 전문대 9.4%, 대학 이상 6.9% 등으로 나타난다. 반면 북한사회변동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모집단에 비해 높은 학력수준의 분포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2015년 조사에서 대학교 출신 응답자 비율이 2014년 조사에 비해 6.5% 증가하여 19.9%를 기록하였다.

〈표 1-5〉 응답자의 재북 학력수준 분포

단위: %

교육수준	조사연도			
	2012	2013	2014	2015
대학교	10.2	16.5	13.4	19.9
전문학교	18.1	11.3	21.5	16.4
고등중학교	65.4	71.4	61.7	61.0
인민학교	3.2	0.0	2.0	2.1
무학	1.6	0.8	0.0	0.7
무응답	1.6	-	1.3	-
합계(N)	125	133	149	146

응답자들 중 노동자 출신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많았다. 재북 직업이 노동자였다는 응답자들은 2012년 이후 각각 37.0%, 31.6%, 30.9%, 26.2%를 기록하였다. 일반적으로 노동자, 농민, 가정부인, 장사, 사무원

의 비율은 매년 73.6%, 75.2%, 74.3%, 72.4%였다. 전문가나 외화벌이 일
군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1-6〉 응답자의 재북 직업 분포

단위: %

북한에서의 직업	조사연도			
	2012	2013	2014	2015
노동자	37.0	31.6	30.9	26.0
농민	8.7	3.8	7.4	4.8
사무원	4.7	9.8	12.1	8.9
전문가*	7.1	8.3	3.4	5.5
학생	6.3	6.0	7.4	4.8
군인	3.9	4.5	4.7	4.8
외화벌이 일군	2.4	2.3	0.0	4.1
장사	11.1	13.5	4.7	20.5
가정부인	11.1	16.5	18.8	11.6
무직 및 기타	6.3	3.8	10.1	8.2
무응답	1.6	-	0.7	0.7
합계(N)	127	133	149	146

* 전문가에는 교원, 의사, 기술자 등이 포함됨

2012년 조사에서 노동당 당원이 아니었다는 응답자들은 84.3%였
다. 당원이라고 응답한 18명의 직업은 노동자(7명), 사무원(2명), 군인(3
명), 그 외 전문가, 학생, 외화벌이 일군, 가정부인 등이 각 1명씩이었고
무직 혹은 기타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1명이었다. 2013년 조사 대상자 중
당원 19명을 직업별로 분류 해보면 사무원 6명, 노동자 5명, 전문가 2명

, 군인 2명, 농민, 학생, 장사, 가정부인 등이 각 1명씩이었다. 2014년에는
노동자 7명, 사무원 4명, 군인 3명, 학생 2명, 농민, 전문가, 장사, 가정부
인 등 각 1명씩 총 20명이 당원이었다. 2015년에는 노동자 10명, 사무원
5명, 전문가 4명, 군인 2명, 외화벌이 일군 1명, 장사 2명, 가정부인 2명 총
26명이 당원이었다.

〈표 1-7〉 재북 당시 응답자의 당원 여부 분포

단위: %

당원여부	조사연도			
	2012	2013	2014	2015
당원	14.4	14.3	13.4	17.9
후보당원	0.0	0.0	0.7	0.7
비당원	84.3	85.7	85.2	81.4
무응답	1.6	-	0.7	0.7
합계(N)	127	133	149	146

3) 탈북 후 북한소식 인지 및 남한 친척의 유무

탈북 후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 소식에 대한 접근성은 이동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2015년
조사에서는 이전과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표 1-8〉에 의하면 탈북 후 북
한 소식을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2012년 조사 이후 계속
하여 증가하다가 2015년 조사에서 다소 감소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거
의 접할 수 없었다는 응답은 2012년 조사 이후 계속하여 감소하다가

2015년 조사에서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이 2012~2014년 추세의 역전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19.7%, 2013년 22.6%, 2014년 24.8%, 2015년 19.3%였다. 반면에, “거의 접할 수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21.3%, 2013년 20.3%, 2014년 17.4%, 2015년 25.5%였다.

〈표 1-8〉 응답자의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단위: %

북한소식	조사연도			
	2012	2013	2014	2015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9.7	22.6	24.8	19.3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9.1	57.1	57.7	55.2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1.3	20.3	17.4	25.5
무응답	-	-	-	-
합계(N)	127	133	149	146

일반적으로 남한에 먼저 이주한 가족이나 혹은 남한에 있는 친척들이 탈북자들의 이동을 도와주는 흡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탈북하기 전 남한에 거주하는 친척이 있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들은 2012년 62.2%, 2013년 65.4%, 2014년 69.1%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41.8%로 감소하였다. 앞의 북한소식 인지여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화가 추세로 자리 잡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표 1-9〉 응답자의 남한 친척의 유무 분포

단위: %

남한 친척	조사연도			
	2012	2013	2014	2015
없다	37.8	34.6	30.9	58.2
있다	62.2	65.4	69.1	41.8
무응답	-	-	-	-
합계(N)	127	133	149	146

응답자의 결혼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1-10〉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현재의 결혼 상태를 묻는 항목에는 결혼(동거 포함), 미혼, 이혼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3년 조사에서 미혼의 응답자들은 2012년보다 8.1% 감소한 37.6%였으며, 결혼은 9.3% 증가한 53.4%였다. 이혼한 북한 이탈주민들도 9.0%에 이르렀다. 2014년에는 미혼이 30.9%, 결혼이 55.0%였다. 2015년에는 미혼이 더욱 증가하여 39.0%였으며, 결혼은 42.5%로 감소한 반면 이혼은 17.8%로 증가하였다.

〈표 1-10〉 응답자의 결혼 상태 분포

단위: %

결혼 상태	조사연도			
	2012	2013	2014	2015
미혼	45.7	37.6	30.9	39.0
결혼(동거포함)	44.1	53.4	55.0	42.5
이혼	9.5	9.0	14.1	17.8
무응답	0.8	-	-	0.7
합계(N)	127	133	149	146

응답자들이 자녀가 있는 경우 남과 북에 있는 모든 자녀의 수를 조사하였다. <표 1-11>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2012년 47.3%, 2013년 56.4%, 2014년 57.0%, 2015년 56.8%의 응답자들이 1명 내지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2012년과 2013년 조사에서 이혼 혹은 사별에 의한 편부모 가구 수는 각기 12가구이며, 2014년 조사에서는 19가구였다. 2015년 조사에서는 이혼 혹은 사별에 의한 편부모 가구 수가 26가구였다.

<표 1-11> 응답자의 자녀의 수 분포

단위: %

자녀의 수	조사연도			
	2012	2013	2014	2015
0명	24.4	38.4	34.2	39.7
1명	27.6	32.3	27.5	35.6
2명	19.7	24.1	29.5	21.2
3명	7.1	4.5	6.7	2.1
4명	1.6	0.8	1.3	1.4
무응답	19.7	-	0.7	-
합계(N)	127	133	149	146

4. 조사 의의와 시사점

북한사회변동조사는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에 거주할 당시 주민들의 삶과 북한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네 차례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년 조사를 진행하여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고, 변화와 지속성을 찾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사회를 이해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들의 고향이 일부 국경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다. 북한 내륙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시각과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시각에는 다소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해석할 때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조사를 통하여 제시되는 결과를 북한사회 전체의 변화인양 성급하게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외부 정보를 용이하게 접하고 국경을 건너기 수월한 지역의 주민일수록 국내외 환경 변화에 민감할 것이며, 이들의 가치 판단과 행동양식은 다른 지역 주민의 것과 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제한점들은 오히려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대응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참조 사항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조사가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한계로 시간의 경과에 의한 표본의 의식변형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로 인한 영향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이 조사에 참여하는 표본은 탈북연도를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구성된다. 매년 북한사회의 미시적 변화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입국연도가 아닌 탈북연도를 기준으로 동일연도에 탈북한 사람들을 표본으로 표집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매년 북한사회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북과 입국 사이 시간의 경과로 발생하는 의식의 변형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의식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으로 설문지의 질문을 재북 시기로 회귀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러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최선의 분석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연구 설계가 필요하며, 그 결과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북한사회의 변화를 읽어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적절한 분석들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최대한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제2장
주민의 생활과
정보화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2장 주민의 생활과 정보화

1. 들어가며

이 장에서는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과 정보화 환경을 파악함으로써 북한의 사회변동을 이해하려 한다. 사회변동은 사회구조들의 유의미한 변화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때 사회구조는 규범과 가치, 행위와 관계, 문화적 현상 등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가치와 규범의 변화, 행위의 유형 및 관계패턴의 변화, 새로운 문화적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³ 사회변동은 내재적인 원인과 한계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으며, 변동의 내재적인 원인은 사회 체계 자체 안에 본래 있는 것으로, 사회 체계는 그 자체 안에 끊임없는 변동의 씨앗을 품고 있다.⁴ 따라서 북한사회의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이 영위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구성 요소들과 환경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식주는 사회구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또한 개인이 영위하는 의식주 생활의 수준은 그 사회에서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모

3_ 박명규 외 공저, 『북한사회변동 2012-2013: 시장화, 소득분화, 불평등』(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p. 15.

4_ Sorokin, Pitirim A, *Society, Culture, and Personality*(New York: Harper & Row, 1947).

든 자원들(정치, 경제, 사회적 자원을 포함)이 결합된 복합체로서 그 개인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부르디외(P. Bourdieu)는 “음식, 의복, 미용에 관한 선호의 공간은 자본의 총량과 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공간의 구조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⁵고 언급한 바 있으며, 엘리아스(N. Elias) 역시 주거방식을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로 보았다.⁶ 또한 독일의 분단 이전, 분단, 그리고 통일 이후의 주거 변동을 분석한 호이썬만(H. Häußermann)과 지벨(W. Siebel) 역시 사회변동이 주거문화의 변동에 반영된다고 주장했다.⁷

따라서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은 북한의 사회적 관계 및 변화의 방향을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지표이다. 특히, 사회주의적 요소와 시장경제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북한사회에서 한 개인의 의식주 생활은 공식적인 제도와 규범의 영역을 넘어 비공식적인 제도와 규범의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에 대한 이해는 시장화, 소득 및 계층의 분화, 부패구조, 사유화 등과 같은 사회구조 전반의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요구한다. 여기에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는 정보환경으로, 우리사회와 마찬가지로 정보화는 북한사회의 소통체계는 물론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5_ 베에르 부르디외 저,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上)』(서울: 새물결출판사, 2006), p. 374.

6_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저, 박여성 옮김, 『궁정사회』(파주: 한길사, 2003), p. 118.

7_ 호이썬만 · 지벨 저, 서봉원 옮김, 『주거사회학: 주거의 변동과 세분화에 관한 개론』(서울: 백산서당, 2014), p. 76.

이 장에서는 2012년~2015년 조사에서 나타난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과 정보화 수준을 분석한다. 이 4년간의 시기에는 최고지도자의 교체라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발생했다. 4년간에 포착된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의 변화는 최고지도자의 교체가 북한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북한체제의 내구력을 평가하고 변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은 북한주민의 의식주와 소비 생활의 실태를, 3절은 북한주민의 가계경제와 가족생활을, 4절은 북한사회의 정보화를,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계층별 생활의 불평등 실태를 다룬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분석내용의 기술이 의식주가 아닌 식의주 순서로 되어있다. 그것은 북한당국의 정책적 연유로 인해 북한주민에게는 의식주 보다는 식의주의 용어가 더 익숙하기 때문으로, 설문지 구성뿐만 아니라 결과분석의 순서도 식의주 순서로 배열하였다.⁸

2절에서 다룬 북한주민의 의식주와 소비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은 하루식사 횟수, 주식의 구성(입쌀과 강냉이의 비율), 고기의 섭취 횟수, 탈북직전 1년간의 식생활 형편, 의류 원산지, 의류 획득 경로, 살림집(주거시설) 형태, 살림집 장만 경로, 살림집 개조 희망사항, 살림집 구입 시기, 남한상품 사용 경험, 소비자 행동의 능동성 등이 포함된다. 3절

8_ 북한에서 의식주를 식의주로 바꿔 부르기 시작한 것은 1984년경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김일성은 먹는 문제가 입는 문제에 우선함을 지적하며 의식주 대신 식의주 용어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김일성이 인민들에게 제시했던 자상낙원으로서 북한의 미래 모습은 '이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 사는 것'으로 식의주 순서였다. 하지만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가 2005년에 발간한 문헌에 의하면 2002년 9월 28일 김정일이 기존의 식의주 용어를 다시 의식주로 고쳐 부르도록 지시했다고 한다(서재영 2005, 186). 그럼에도 많은 탈북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바 북한주민들의 삶에서 여전히 입는 문제보다는 먹는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설문지 구성에서도 먹는 문제를 입는 문제보다 앞서 배치하였다.

에서 다룬 가계 경제와 가족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은 가계소득의 지출 구조, 자녀 사교육 경험, 일상의 고민, 가족 의사결정 구조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 다룬 정보화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은 정보통신기기 이용 실태, 인터넷 이용 실태, 남한문화 콘텐츠 경험 실태, 남한 소식 인지 수준, 외부정보의 습득 경로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2절의 탈북직전 1년간의 식생활 형편과 소비자 행동의 능동성, 3절의 가족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4절의 정보통신기기 및 인터넷 이용 실태 등의 설문내용은 2015년 조사에 처음 포함되었다.

2. 주민의 식의주 생활

1) 식생활

한 사회의 생활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식생활의 수준일 것이다. 북한 당국 역시 먹는 문제 해결을 경제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많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 식생활은 수많은 인류 사회에서 계급 또는 계층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알려져 있다.⁹

9_ 넬슨(Nelson)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까지의 방대한 시계열 자료를 근거로 계급에 따른 음식물 섭취의 변화에 관한 유용한 사례연구를 한 바 있으며, 부르디외 역시 사회계급들 사이의 음식물 차이에 그들의 경제적·문화적 불평등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Nelson, M. "Social-class trends in British Diet, 1860~1980", in Catherine Geissler and Derek J. Oddy(eds.), *Food, Diet and Economic Change Past and Present*(Leicester: Leicester Press, 1993), 뵈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上)』, p. 327~331.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던 시기에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특권층을 제외하면 거의 동질적인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급수(1급~9급)에 따라 1일 식량 공급량이 정해졌는데, 가장 많은 식량을 공급받는 1급의 경우 유해직종 종사자나 중노동자에 해당되며 1일 900g의 식량을 공급받았다. 일반노동자의 경우는 3급에 해당되어 1일 700g의 식량을 공급받았고, 전업주부(북한에서는 가두여성이라고 부름)나 은퇴고령자들의 경우는 7급에 해당되어 1일 300g의 식량을 공급받았다. 가장 낮은 9급은 1세 미만의 영아가 해당되며 1일 100g의 식량을 공급받았다. 이밖에도 장류나 조미료, 식용유 등 기본 식자재들 역시 배급의 대상이었다. 또한 배급제가 유지되던 시기에는 식량의 매매가 전면 금지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주민들 간에 식생활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보편적 배급제가 중단되고 시장을 통해 식량이나 식료품을 구입하게 됨으로써 북한사회에서도 경제적 지위에 따라 식생활의 차이가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는 3년간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된다.

(1) 하루 식사 횟수

하루의 식사 횟수는 식생활의 풍족함을 측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식생활이 충족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1차적 지표이다. 연구 참여자인 북한이탈주민에게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직전에 하루 몇끼를 식사했습니까?”를 질문한 결과, “하루 세끼”를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75.4%, 2013년 81.2%, 2014년 74.5%, 2015년 86.9%로 나타나

비교적 식생활 상태가 양호함을 알 수 있다. 특히, 2014년 대비 2015년 응답률이 12.4% 증가한 것이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반면에 “하루 두 끼”를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16.4%, 2013년 12.0%, 2014년 11.4%, 2015년 9.0%로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하루 한 끼”를 먹었다는 응답률 역시 2014년 12.8%에서 2015년 3.4%로 크게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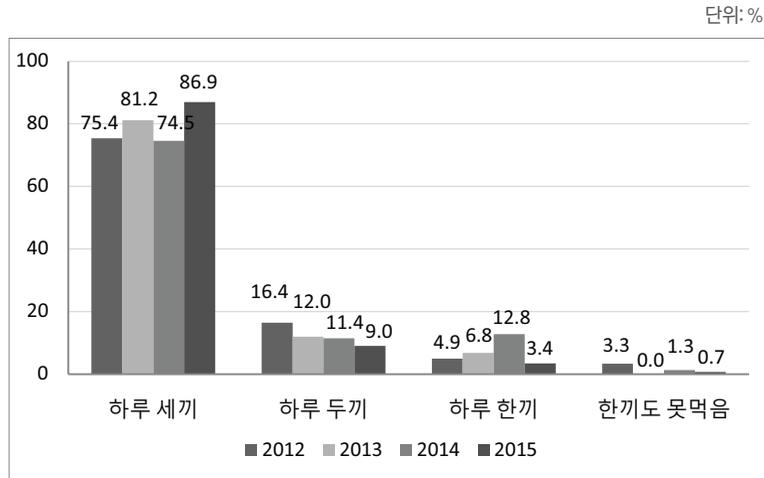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전년대비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2015.7.7.)에 의하면, 농림어업 분야 성장률이 2012년 5.3%, 2013년 3.9%, 2014년 1.9%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북한주민의 식생활에서의 양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표 2-1〉 하루 식사 횟수

단위: 명, %

조사연도 식사 횟수	2012	2013	2014	2015
하루 세끼	92(75.4)	108(81.2)	111(74.5)	126(86.9)
하루 두끼	20(16.4)	16(12.0)	17(11.4)	13(9.0)
하루 한끼	6(4.9)	9(6.8)	19(12.8)	5(3.4)
한끼도 못먹음	4(3.3)	0(0.0)	2(1.3)	1(0.7)
합계	122(100.0)	133(100.0)	149(100.0)	145(100.0)

〈그림 2-1〉 하루 식사 횟수



(2) 주식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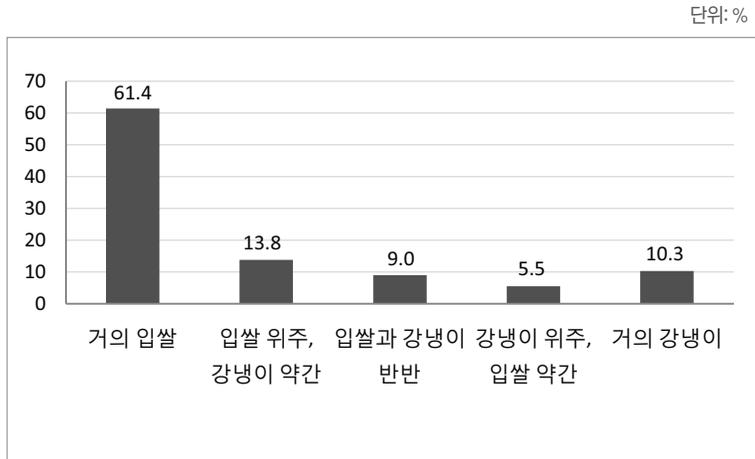
북한주민의 식생활 수준을 평가하는데 하루 식사 횟수도 중요하지
만 식사의 질 문제를 평가하는 것은 북한주민의 삶의 질 수준뿐만 아니
라 북한사회의 변동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이다. 2015년 조사에서
는 기존 3년간의 조사에서 사용했던 척도의 용어에 약간의 변경이 있었
다. 기존의 조사에서는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직전에 식사를 할 때 입쌀
과 강냉이를 어떤 비율로 섞어 드셨습니까?”를 질문한 후 선택 항목으로
4개의 척도, 즉 “거의 입쌀”, “입쌀과 강냉이 반반”, “입쌀과 강냉이 3:7”,
“거의 강냉이”를 제시했으나, 2015년 조사에서는 동일 질문에 대한 선택
항목으로 5개의 척도, 즉 “거의 입쌀”, “입쌀 위주, 강냉이 섞음”, “입쌀과
강냉이 반반”, “강냉이 위주, 입쌀 섞음”, “거의 강냉이”를 제시했다.

응답 결과를 보면, “거의 입쌀”로 먹었다는 응답률이 2012년 35.7%,
2013년 36.8%, 2014년 41.5%, 2015년 61.4%로 4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14년 대비 2015년 응답률은 19.9%가 증가해 질적인 측면에서도
식생활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쌀 위주로 강냉이를 섞어 먹
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8%로 나타났으며, “입쌀과 강냉이를 반반 섞
어 먹었다”는 응답률은 2012년 24.6%, 2013년 25.6%, 2014년 16.3%,
2015년 9.0%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강냉이 위주로 입쌀을 섞
어 먹었다”는 응답률과 “거의 강냉이로만 먹었다”는 응답률이 각각
5.5%와 10.3%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의
강냉이로만 먹었다”는 응답률이 2014년 대비 2015년에 1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14년에 식생활의 질적 측면에서 보인 양극화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주식의 구성

조사연도 곡물 비율	2012	2013	2014	2015
거의 입쌀	45 (35.7)	49 (36.8)	61 (41.5)	89 (61.4)
입쌀 위주, 강냉이 섞음	-	-	-	20 (13.8)
입쌀과 강냉이 반반	31 (24.6)	34 (25.6)	24 (16.3)	13 (9.0)
강냉이 위주, 입쌀 섞음	17 (13.5)	20 (15.0)	18 (12.2)	8 (5.5)
거의 강냉이	33 (26.2)	30 (22.6)	44 (29.9)	15 (10.3)
합계	126 (100.0)	133 (100.0)	147 (100.0)	145 (100.0)

〈그림 2-2〉 주식의 구성(2015년)



(3) 고기의 섭취 횟수

식생활 수준을 평가하는 데 주식의 구성성분 못지않게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단백질 섭취량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칼로리의 급원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해 인구집단의 평균적인 섭취수준을 각각 총칼로리의 55~77%, 10~15%, 15~30%의 범위가 바람직하다고 권장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자료에 따르면, 1986~1988년 동안 선진국에서는 평균적으로 각 개인은 일일 칼로리의 30.8%를 동물성 식품에서 섭취하고, 고기에서만 13.1%를 섭취한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수치가 각각 8.9%와 4.3%밖에 안된다. 실제로 일인당 국내총생산(GDP)과 일인당 일일 축산제품의 칼로리 소비량 사이에는 일관된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다. 요컨대, 고기 섭취는 부(富)와 분명하게 연관되어 있다.¹⁰

이연숙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인구의 과반수가 탄수화물의 섭취비율은 기준보다 초과하고, 반면에 단백질과 지방은 기준보다 적다.¹¹ 통계청에서 매해 발표하는 북한통계 가운데 북한 주민의 1인 1일당 영양공급량을 보면, 2012년 기준으로 1일 단백질 섭취량 56.5g 중 식물성이 46.5g, 동물성이 10g으로 구성되며, 지방질 섭취량 역시 총 34g 중 식물성이 24.8g, 동물성이 9.2g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질의 섭취량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 따라서 북한 주민의 식생활의 질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인 고기의 섭취량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3년 간의 조사를 통해 북한주민의 단백질 섭취, 특히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5년 조사에서는 고기 섭취 횟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2-3〉에서 보듯, 고기(육고기와 물고기 포함)를 “거의 매일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3.2%, 2013년 4.5%, 2014년 3.4%, 2015년 22.6%로 나타나 2014년 대비 2015년에 19.2%가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2012년 21.6%, 2013년 23.3%, 2014년 24.8%, 2015년 30.8%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달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46.4%, 2013년 45.1%, 2014년 43%, 2015년 35.6%로 4년 연속 감소세

10_ 앨런 비어즈워스·테레사 케일 저, 박형신·정현주 옮김, 『메뉴의 사회학: 음식과 먹기 연구로의 초대』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0), p. 343.

11_ 이연숙, 『통일한국의 어린이 영양』(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p. 27.

12_ 통계청, 『2014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대전: 통계청, 2014), p. 122.

를 나타냈다. “일년에 한두번 정도 먹었다”는 응답 비율 역시 2012년 27.2%, 2013년 27.1%, 2014년 27.5%, 2015년 10.3%로 나타나 2014년 대비 2015년에 17.2%가 감소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2014년 조사 대비 2015년 조사에서 북한주민의 고기 섭취량은 매우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북한의 축산업 현황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한국은행(2015.7.7.)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북한의 축산업에서 양돈 생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돈 생산의 증가가 북한주민의 고기 섭취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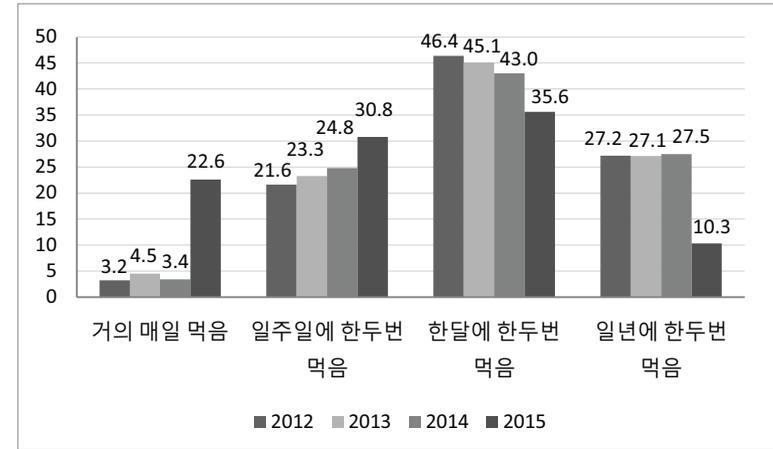
〈표2-3〉 고기 섭취 횟수

단위: 명, %

조사연도 섭취 횟수	2012	2013	2014	2015
거의 매일 먹음	4 (3.2)	6 (4.5)	5 (3.4)	33 (22.6)
일주일에 한두번 먹음	27 (21.6)	31 (23.3)	37 (24.8)	45 (30.8)
한달에 한두번 먹음	58 (46.4)	60 (45.1)	64 (43.0)	52 (35.6)
일년에 한두번 먹음	34 (27.2)	36 (27.1)	41 (27.5)	15 (10.3)
먹어본 적 없음	2 (1.6)	0 (0.0)	2 (0.7)	1 (0.7)
합계	125 (100.0)	133 (100.0)	149 (100.0)	146 (100.0)

〈그림 2-3〉 고기 섭취 횟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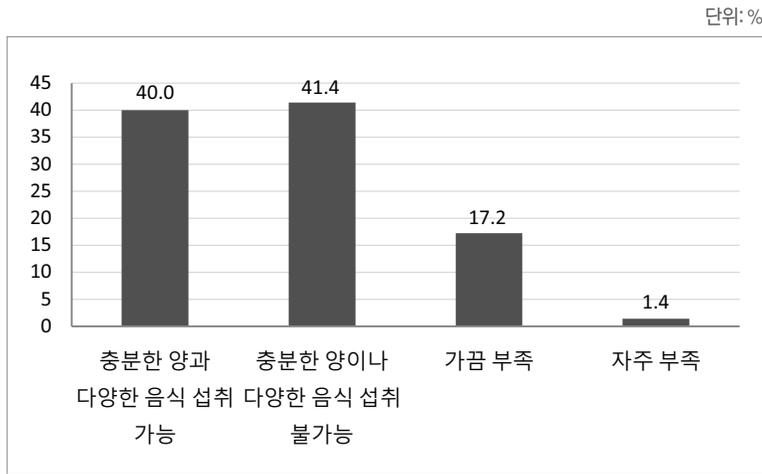


(4) 탈북 직전 1년간의 식생활 형편

이제까지는 북한주민 개인의 식생활을 식사 횟수, 주식 구성, 고기 섭취 횟수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2015년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가구 단위의 식생활 형편을 파악하는 질문을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북한을 떠나기 전 1년 동안 가족의 식생활 형편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지 못했다”라는 응답의 비중이 4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응답한 비중 또한 40.0%로 나타났다.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나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는 응답의 비중은 각각 17.2%, 1.4%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북한사회에서

가구 단위의 식생활 형편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도 만족스러운 식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민은 10명 중 4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4〉 탈북 직전 1년간의 식생활 형편



2) 의생활

사회학자 베블런(Veblen)은 그의 저서 『유한계급론』에서 의복이 갖고 있는 ‘과시효과’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¹³ 부르디외 역시 의복에 대한 관심을 신분(또는 사회적 지위)의 상승지향의 원천으로 보았다. 그에 의

13_ 소스타인 베블런 저, 김성균 옮김, 『유한계급론』(서울: 우물이 있는 집, 2013), pp. 207-208.

하면, “이 상승지향은 ‘외양’을 통해 ‘실제적인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외양이 현실성을 갖도록 하고, 명목이 실재를 갖도록 하며 분류나 그 원리 안에서 제시되는 서열의 표상을 수정함으로써 객관적 분류체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변경시키려는 일종의 허세나 사회적 정체성을 횡령하려는 영구적 성향의 원천”이기도 하다.¹⁴

배급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던 시기에 식량뿐만 아니라 의복도 배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인민반을 통하여 공급카드를 발급받은 뒤 각자 상점에 가서 카드를 제시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옷감과 의복을 국정가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¹⁵. 식량과 마찬가지로 의복 배급 역시 급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져 의복이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적 기능을 했다. 하지만 배급제가 붕괴된 이후에 북한사회에서 의복은 권력이나 부의 과시, 치장, 체면 유지, 개성 표현 등 다원적인 사회적 기능을 갖는다.

(1) 의류의 구매 횟수

먼저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직전에 옷을 얼마나 자주 사 입었습니까” 질문에서 지난 3년간의 조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응답은 “일년에 한두벌 정도 사 입었다”였으나, 2015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계절마다 한두벌 정도 사 입었다”의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응답률 변화를 보면, 2012년 32.5%,

14_ 베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上)』, p. 456.

15_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북한 이해』(서울: 통일부), p. 310.

2013년 36.8%, 2014년 33.1%, 2015년 52.1%로 나타나 2014년 대비 2015년에 19% 증가했다. 반면에 “일년에 한두벌 정도 사 입었다”의 응답률은 2012년 34.9%, 2013년 43.6%, 2014년 33.8%, 2015년 35.6%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몇 년에 한두벌 정도 사 입었다”는 응답률은 2014년 22.3%에서 2015년 7.5%로 14.8% 감소했다. “직접 사 입지 못하고 남이 입던 옷을 얻어 입었다”는 응답 비율 역시 2014년 10.1%에서 2015년 2.7%로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2014년 대비 2015년에 북한주민의 의생활에서 양적 개선이 눈에 띄게 진행되었다. 2014년에는 10명 중 3명 정도가 계절마다 한두벌의 옷을 구매한 것에 비해, 2015년에는 10명 중 5명 이상이 계절마다 한두벌의 옷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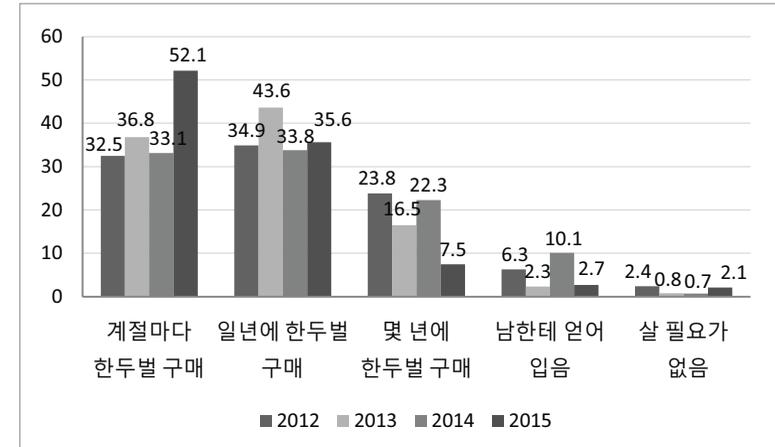
〈표 2-4〉 의류 구매 횟수

단위: 명, %

조사 연도 구매 횟수	2012	2013	2014	2015
계절마다 한두벌 구매	41 (32.5)	49 (36.8)	49 (33.1)	76 (52.1)
일년에 한두벌 구매	44 (34.9)	58 (43.6)	50 (33.8)	52 (35.6)
몇 년에 한두벌 구매	30 (23.8)	22 (16.5)	33 (22.3)	11 (7.5)
남한테 얻어 입음	8 (6.3)	3 (2.3)	15 (10.1)	4 (2.7)
살 필요가 없었음	3 (2.4)	1 (0.8)	1 (0.7)	3 (2.1)
합계	126 (100.0)	133 (100.0)	148 (100.0)	146 (100.0)

〈그림 2-5〉 의류 구매 횟수

단위: %



(2) 의류의 원산지

1990년대 중반 이후 배급제가 중단되고 소비재를 생산하는 경공업의 심각한 침체로 인해 북한사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소비재의 구입은 기존의 국영상점에서 시장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의 대부분은 국내산보다는 중국, 러시아, 일본, 남한 등 국외산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장기화되고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5.24방침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크게 위축되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의존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부의 북한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북한 대외무역 통계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대중무역의 비중(남북경협을 제외한 비중)은 90.1%에 이른다.¹⁶ 이러한 북한의 대외무

역구조는 국내 소비재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본 조사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입는 옷의 원산지를 묻는 질문에 “중국산”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12년 87.7%, 2013년 92.5%, 2014년 85.5%, 2015년 80.0%로 4년 연속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산”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7.0%, 2013년 3.0%, 2014년 9.0%, 2015년 3.6%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15년 조사에서는 중국산과 북한산의 비중이 모두 줄어든 가운데 남한산과 일본산의 비중이 동시에 증가한 특성을 보인다. 남한산의 경우 2014년 2.8%에서 2015년 9.3%로 증가했고, 일본산의 경우 2014년 2.1%에서 2015년 5.7%로 증가했다.

남한산과 일본산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북한주민의 소득 수준의 향상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주관적 계층의식에서 ‘상층’에 속하는 응답자의 경우는 남한산 25.0%, 일본산 16.7%로 나타난 반면에, ‘중층’의 경우는 남한산 8.2%, 일본산 4.1%로, ‘하층’의 경우는 남한산 6.7%, 일본산 6.7%로 나타나 계층간 격차를 보였다.¹⁷ 다시 말해서, 고소득자의 경우 중국산 의류의 소비는 줄어들고, 대신 남한산과 일본산의 의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사회에서는 남한산과 일본산 의류는 중국산 의류보다 질이 좋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¹⁸

16_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대중무역의 비중은 2000년 24.8%에서 2005년 52.6%, 2010년 83%, 2014년 90.1%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

17_ 2015년 조사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의 응답률은 ‘상층’ 6%, ‘중층’ 64.4%, ‘하층’ 29.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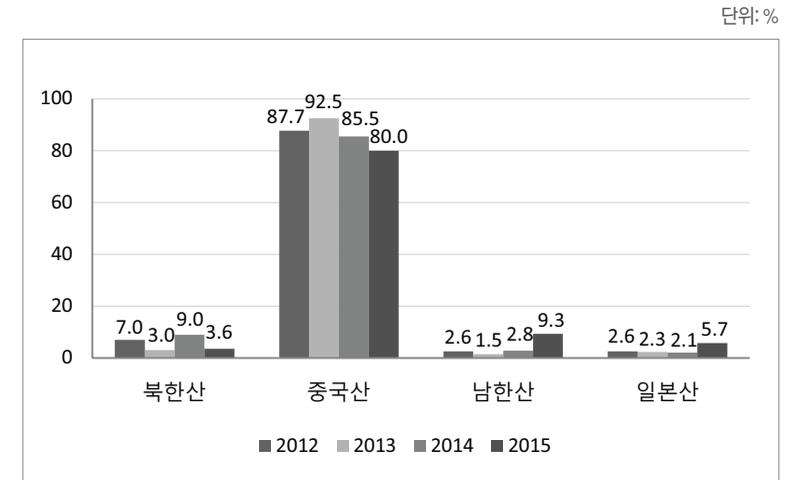
18_ 북한사회에서 의류의 원산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수암 외,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85-89.를 참조할 것.

〈표 2-5〉 의류의 원산지

단위: 명, %

조사 연도 원산지	2012	2013	2014	2015
북한산	8 (7.0)	4 (3.0)	13 (9.0)	5 (3.6)
중국산	100 (87.7)	123 (92.5)	124 (85.5)	112 (80.0)
남한산	3 (2.6)	2 (1.5)	4 (2.8)	13 (9.3)
일본산	3 (2.6)	3 (2.3)	3 (2.1)	8 (5.7)
기타	0 (0.0)	1 (0.7)	1 (0.7)	2 (1.4)
합계	114 (100.0)	133 (100.0)	145 (100.0)	140 (100.0)

〈그림 2-6〉 의류의 원산지



(3) 의류의 구입 경로

다음으로 북한주민들이 대체로 어떤 경로를 통해 의류를 구입하는지 살펴보았다. 위에서 의류의 원산지가 대부분 중국산이라고 응답했던 결과를 통해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귀하가 주로 입는 옷은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시장(또는 장마당)에서 구매했다는 응답률은 2012년 91.9%, 2013년 94.7%, 2014년 94.4%, 2015년 90.3%로 나타났다. 4년의 조사 결과는 북한주민이 생활에서 시장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반면에 과거의 사회주의 상업망의 상징이었던 국영상점에서 구입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존의 소비재 유통의 거점이었던 국영상점의 몰락을 의미한다. 또한 국영상점의 몰락 이면에는 국내 소비재 산업의 침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보편적 배급제가 작동하던 시기에는 주문제를 기반으로 국영상점이 공산품 위주의 소비재 유통의 거점이었다면, 이제는 시장을 거점으로 한 수입산 위주의 소비재 유통이 지배적인 구조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기존 조사와 달리 2015년 조사에서 나타난 변화는 시장(또는 장마당)의 비중은 줄어들고, 백화점이나 해외 직접 구입의 비중이 늘어났다. <표 2-6>에서 보이듯, 2014년 대비 2015년에 시장의 비중은 94.4%에서 90.3%로 감소한 반면에, 백화점의 비중은 0.0%에서 3.5%로 증가했고, 외국에서 직접 구입의 비중 역시 4.2%에서 6.3%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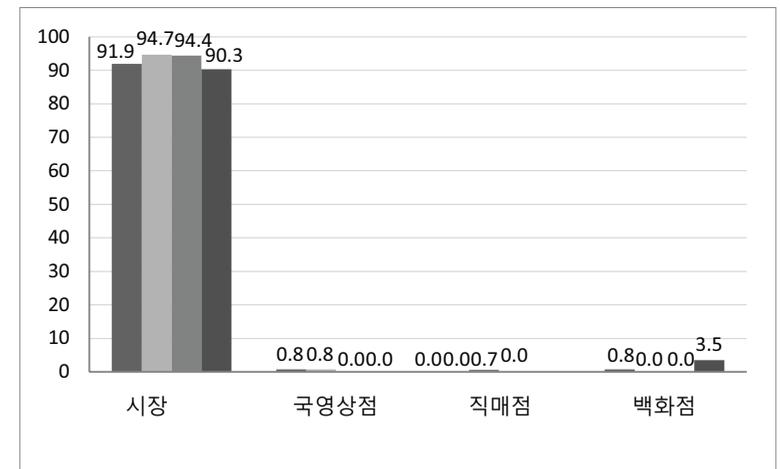
<표 2-6> 의류의 주요 구입경로

단위: 명, %

구매처 \ 조사 연도	2012	2013	2014	2015
시장(또는 장마당)	113(91.9)	126(94.7)	135(94.4)	130(90.3)
국영상점	1(0.8)	1(0.8)	0(0.0)	0(0.0)
직매점	0(0.0)	0(0.0)	1(0.7)	0(0.0)
백화점	1(0.8)	0(0.0)	0(0.0)	5(3.5)
외국에서 직접 구입	8(6.5)	6(4.5)	6(4.2)	9(6.3)
합계	123(100.0)	133(100.0)	143(100.0)	144(100.0)

<그림 2-7> 의류의 주요 구입경로

단위: %



3) 주거생활

‘사회주의’에서 주택은 정치적으로(또는 관료주의적으로) 분배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주택정책은 소득계급, 직업신분 또는 다른 차이들에 따라 주민들을 차별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무차별’ 원칙이 적용되었으나, 실제로 주택보급에서 어느 정도의 차별이 있었다. 동독의 경우, 도심 근처, 입지 조건이 좋고, 수요가 많은 신 건설지역에는 국가기관 또는 정당기관에서 영향력이 큰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우대를 받으며 주거했다. 거꾸로 사회적 효용이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분류된 주민들(노인, 부적응자, 하찮은 분야의 미숙련 노동자)은 낡은 구 건설주택에서 벗어날 기회가 없었다.¹⁹⁾

북한에서는 주거단위 또는 주택을 ‘살림집’이라고 부른다. 북한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살림집을 배정받아 매달 사용료를 내는 임대 형식으로 거주한다. 북한 주택의 규모와 구조는 입주자의 직장과 직위를 기준으로 1~4호, 특호 등 모두 5개의 유형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평등적 분배보다는 정치적 조정에 의해 분배되었다.²⁰⁾ 일반적으로 북한주민의 주택보급률은 50~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

택을 신청하고 ‘입사증’을 받기까지 4~5년이 걸리며 최근에는 10년을 기다려도 주택을 배정받기 힘들다고 한다. 따라서 하나의 주택에 여러 세대(가구)가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한 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보고서에 의하면, 총 가구수는 약 588.7만이며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수 역시 약 588.7만으로 동일해 북한의 주택보급률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가구 중 원거가구는 99%에 이르고, 동거가구는 1%에 불과하다.²¹⁾ 따라서 탈북자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북한의 주거생활 실태와 유엔에 보고된 북한의 인구센서스 보고서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사회에는 시장화의 진전과 함께 도시화도 진행되었다. 유럽사회에서 18세기부터 상업도시와 자영업도시에서 원시적 형태의 주택시장 같은 것이 생성·발전했던 것처럼, 북한사회에서 시장화의 진전과 함께 주택이 사고파는 대상이 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이미 오래된 일이다. 후술하겠지만, 조사 결과 북한주민의 살림집 장만경로 중 ‘내돈 주고 샀다’는 응답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주택 매매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주거생활과 관련한 설문 문항 중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살림집을 개조한다면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질문은 북한의 주거문화의 변화를 읽는 데 유용하다. 주거방식과 주거문화는 사회적 소속, 사회의 규범 그리고 물질적, 문화적 자원에 대한 처분을 나타낸다.²²⁾ 북한사회에서도 시장에 대한 적응력과 시장을

19_ 호이씨만·지벨, 『주거사회학: 주거의 변동과 세분화에 관한 개론』, p. 232.

20_ 예를 들어, 1호는 방 1~2개와 부엌이 딸린 집단 공영주택 혹은 방 2개에 부엌과 창고가 딸린 농촌 문화주택으로 말단 노동자 및 사무원, 그리고 협동농장원에게 배정된다. 2호는 방 1~2개에 마루방과 부엌이 딸린 일반 아파트로 학교 교원이나 일반 노동자에게 배정된다. 3호는 기업소 부장, 중앙기관 지도원, 도단위 부부장에게 배정되는데 방 2개에 부엌과 창고가 딸린 중급 단독주택이다. 4호는 중앙당 과장급, 내각 국장급, 대학교수, 기업소 지배인 등에 배정되는데 방 2개 이상에 목욕탕, 수세식 변소, 냉온방, 배란다 시설이 딸린 아파트이다. 마지막으로 특호는 독립식 다층 주택으로 정원, 수세식 변소, 냉온방 시설이 갖춰진 고급주택으로 중앙당 부부장 이상, 내각 부상 이상, 인민군 소장급 이상이 배정받는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북한 이해』, pp. 312-313.

21_ 김두섭 외,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대전: 통계청, 2011), p. 234.

22_ 호이씨만·지벨, 『주거사회학: 주거의 변동과 세분화에 관한 개론』, p. 59.

통해 획득한 부의 축적의 차이에 따라서 살림집에 대한 점유와 처분이 달라지고 있다. 나아가 살림집이 갖고 있는 문화자본 또는 상징자본의 기능이 형성되면서 살림집 개조를 통한 '사회적 구별짓기'의 행태들이 발생하고 있다.

(1) 살림집의 유형

유엔인구기금(UNFPA)과 북한 통계국이 공동으로 2015년에 발간한 「2014년 북한의 사회경제, 인구통계, 보건 조사」 보고서(원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비중은 32.8%, 연립주택 41.7%, 아파트 25.0%로 나타났다.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에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비중이 각각 33.8%와 43.9%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했을 때 6년 기간 동안 모두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에 아파트는 2008년에 21.4%에서 2015년 25.0%로 증가했다.²³ 같은 기간 동안 북한의 살림집 건설이 아파트 중심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주택유형의 분포는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평양의 경우는 아파트 비율이 62.9%에 달하는 반면에, 황해남북도와 양강도 지역의 경우는 아파트 비율이 11.0~13.0% 수준으로 매우 큰 격차를 보인다.²⁴ 따라서 일 반적인 현대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아파트가 도시화의 상징적 주택임을 알 수 있다.

23_ UNFPA and Central Bureau of Statistic Pyongyang,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Pyongyang: United Nations in DPR Korea, 2015), pp. 12-13.

24_ 위의글, p. 12.

북한에서 탈북직전 거주한 살림집의 유형이 아파트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19.8%, 2013년 24.8%, 2014년 17.4%, 2015년 33.6%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2015년에 아파트라고 응답한 비율이 16.2%나 증가했다. 반대로 연립주택의 경우는 2012년 49.2%, 2013년 48.9%, 2014년 63.8%, 2015년 34.9%로 나타나 2014년에 비해 2015년의 응답률이 무려 28.9%가 감소했다. 따라서 예년과 달리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응답률 격차가 크게 줄어 2015년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2012년 25.4%, 2013년 19.5%, 2014년 15.4%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는 24.0%로 증가했다.

이상에서 기술한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연립주택의 비중은 점차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사회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비중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앞서 언급한 UN 북한센서스 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여전히 북한사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연립주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반대로 연립주택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원인은 응답자의 소득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응답자의 월평균 비공식 수입 중에서 50만원 이상인 경우가 2014년에는 22.2%, 2015년에는 47.9%로 나타나 1년 사이에 응답자의 소득 수준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고소득자들이 증가하면서 연립주택에 거주하기보다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북한주민들이 많아졌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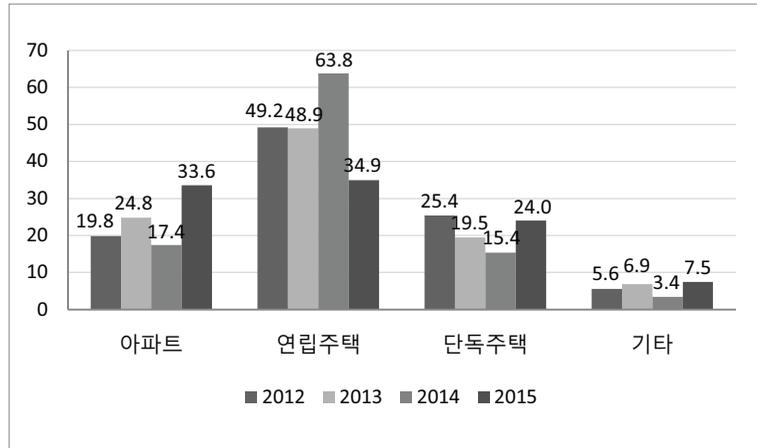
〈표 2-7〉 살림집 유형

단위: 명, %

유형 \ 조사 연도	2012	2013	2014	2015
아파트	25(19.8)	33(24.8)	26(17.4)	49(33.6)
연립주택(하모니카집)	62(49.2)	65(48.9)	95(63.8)	51(34.9)
단독주택(독집)	32(25.4)	26(19.5)	23(15.4)	35(24.0)
기타	7(5.6)	9(6.9)	5(3.4)	11(7.5)
합계	126(100.0)	133(100.0)	149(100.0)	146(100.0)

〈그림 2-8〉 살림집 유형

단위: %



(2) 살림집의 장만 경로

살림집 유형과 달리 북한주민들이 주택을 어떤 경로로 장만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북한사회의 변동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

다. 기존에 국유의 대상이었던 주택이 개인이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은 일반 시장경제체제에서와 같이 주택 매매시장이 형성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주택 매매시장의 존재 유무는 북한사회의 사적 소유제의 부활 여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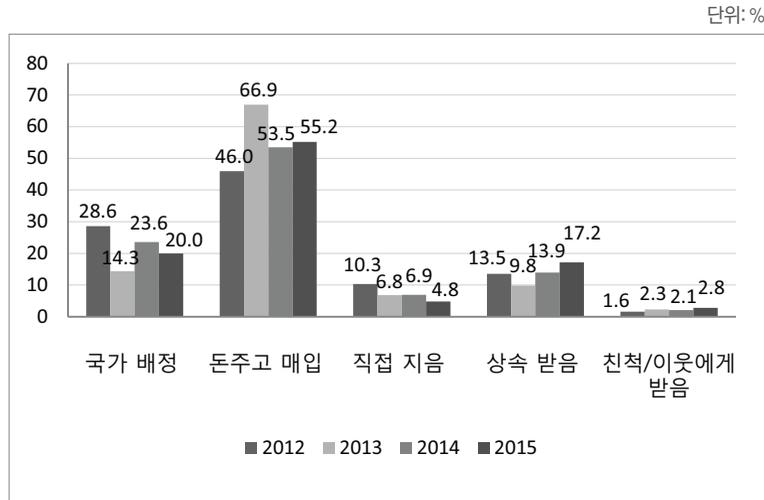
조사 결과, 〈표 2-8〉에서 보이듯 “국가에서 배정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28.6%, 2013년 14.3%, 2014년 23.6%, 2015년 20%로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에 “내가 돈을 주고 샀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46.0%, 2013년 66.9%, 2014년 53.5%, 2015년 55.2%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상반된 결과는 이제 북한주민들 가운데 국가에서 배정받은 집에서 사는 사람보다 돈을 주고 산 집에서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제 북한사회도 자본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국가 주도의 주택 분배가 아닌 시장 주도의 주택 분배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밖에 “조상 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응답률은 2012년 13.5%, 2013년 9.8%, 2014년 13.9%, 2015년 17.2%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가 직접 지었다”는 응답률은 2012년 10.3%, 2013년 6.8%, 2014년 6.9%, 2014년 4.8%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표 2-8〉 살림집 장만 경로

단위: 명, %

장만 경로 \ 조사 연도	2012	2013	2014	2015
국가에서 배정받음	36(28.6)	19(14.3)	34(23.6)	29(20.0)
내가 돈주고 샀음	58(46.0)	89(66.9)	77(53.5)	80(55.2)
내가 직접 지었음	13(10.3)	9(6.8)	10(6.9)	7(4.8)
조상/부모로부터 물려받음	17(13.5)	13(9.8)	20(13.9)	25(17.2)
친척/주변사람한테 받음	2(1.6)	3(2.3)	3(2.1)	4(2.8)
합계	126(100.0)	133(100.0)	144(100.0)	145(100.0)

〈그림 2-9〉 살림집 장만 경로



한편, 북한주민들은 대체로 돈을 주고 어떤 살림집을 살까. 전체적인 비중은 연립주택의 비중이 가장 크다. 하지만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아파트의 구매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구매한 살림집 가운데 아파트의 비중은 2014년 19.5%에서 2015년 37.5%로 크게 증가한 반면에, 연립주택의 비중은 2014년 68.8%에서 2015년 41.3%로 크게 감소했다. 단독주택의 비중은 2014년 11.7%에서 2015년 20.0%로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주민의 소득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 사회에서도 연립주택에 비해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선호도가 더 높다. 따라서 소득 증가와 함께 주택 매매시장에서도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비중이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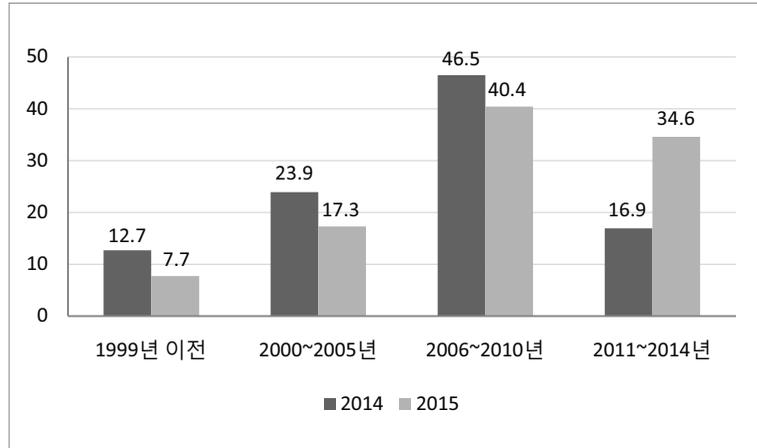
후술하겠지만, 주관적 계층의식에서 중층이나 하층에 비해 상층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는 점은 소득 분화와 주택 매매시장 변화 간의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홍민의 연구에서 주장한 것처럼, 현재의 북한사회는 경제적 부와 정치적 힘이 결합되어 주택시장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어디에서 거주하느냐 하는 것이 자신의 계급적 위치를 드러내고 확인해주는 징표가 되는 사회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²⁵

그렇다면, 북한사회에서 주택 매매시장은 언제부터 활성화된 것일까. 2014년 조사부터 살림집 매입 시기에 대한 설문 문항이 추가되었다. 〈그림 2-10〉에서 보이듯, 돈을 주고 살림집을 장만했다고 응답한 80명 가운데 40.4%가 2006년~2010년 시기에 살림집을 매입했다고 응답했고, 34.6%의 응답자들은 2011년~2014년 시기에 살림집을 매입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25.0%는 2005년 이전에 매입했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를 종합해보면, 북한에서 주택 매매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2005년 이후로 추정된다.

25_ 홍민, "북한의 아파트 건설시장과 도시정치," 『KDI북한경제리뷰』, Vol. 16 No. 8 (2014), p. 60.

〈그림 2-10〉 살림집 매입 시기

단위: %



(3) 살림집 개조의 희망사항

주거 생활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주택유형보다는 상수도, 화장실, 난방, 취사 등과 같은 주택의 인프라 시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에 보고된 2008년 북한인구센서스 보고서에는 상수도, 화장실 유형, 난방 및 취사 방식 등과 같은 주거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동보고서에 의하면, 전반적인 북한사회의 주거 인프라 시설은 낙후되었고 전력이 부족한 매우 열악한 상태로 나타났다.

센서스 보고서에 의하면, 집안에 개별 수도가 있는 비중은 85.0%에 달하나 실제로는 전력부족으로 인해 하루에 2~3시간 제한적으로 식수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화장실 시설의 경우 보고서에 의하면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은 59.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재래식 화장실 형태이다. 물론 평양시의 경우는 76.1%가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나, 농촌과 지방도시로 내려갈수록 더 낮아져 황해남도의 경우 55.1%만이 수세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다.²⁶ 게다가 아무리 수세식 화장실 시설을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전력부족으로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수세식 화장실의 이용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난방 시설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인구센서스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난방 방식은 석탄(연탄)과 목탄 난방이 각각 47.1%와 45.1%로 주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취사 연료 역시 석탄이 46.1%, 나무땃감이 46.9%를 차지하고 있다.²⁷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주민의 주거생활의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먹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면 주거환경을 변경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참여자들에게 “돈이 많이 있다면 제일 먼저 살림집의 무엇을 바꾸고 싶었습니까?”를 질문했다. 그 결과, 〈표 2-9〉에서 보이듯 위생실, 난방, 수도시설과 같이 인프라 시설과 관련된 문항보

26_ 유엔인구기금과 북한통계국이 공동으로 2015년에 발간한 「2014년 북한의 사회경제, 인구통계, 보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사회의 주거 인프라는 2008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도 보급률은 82.1%로 나타났으며,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 63.2%, 난방시설 중 석탄과 나무땃감 난방은 각각 56.5%, 48.8%, 취사 연료 중 석탄과 나무땃감의 비중이 각각 56%, 52.6%로 나타났다. 수세식 화장실의 경우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들 모두에서 2008년에 비해 후퇴된 결과를 보였다. UNFPA and Central Bureau of Statistic Pyongyang,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pp. 14-17.

27_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DPRK, *DPRK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yongyang: United Nations in DPR Korea, 2008), pp. 252-262.

다는 “살림집의 크기나 방의 수를 늘리고 싶었다”와 “가구, 벽지, 장판 등 살림집 내부를 좋게 바꾸고 싶었다”의 문항 선택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살림집의 크기나 방의 수를 늘리고 싶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34.4%, 2013년 34.6%, 2014년 25.2%, 2015년 3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응답률이 11.6% 증가했다.²⁸ 앞서 언급했던 2008 북한 인구센서스 보고서에서도 대체로 주택의 규모가 작고 방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주택 환경에 대한 불만이 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싶다는 응답으로,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2년 32.8%, 2013년 19.5%, 2014년 36.7%, 2015년 22.2%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싶다는 응답이 살림집의 크기나 방의 수를 늘리고 싶다는 응답 비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크게 감소했다.

집의 크기나 방의 수를 늘리고 싶어 하는 수요는 사적 영역의 확보라는 욕구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이다. 또한 북한주민들이 집의 크기를 늘리거나 집안을 화려하게 꾸미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들에게 일종의 문화자본의 획득 욕구로서 ‘과시하기 위한’ 생활양식의 욕구가 있음을 시사한다. 시장화와 도시화의 진전은 공공영역과 함께 사생활영역을 창출한다. 그리고 엘리아스가 말한 것처럼 주택은

28_ 동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규모의 비중이 15평 미만 17%, 15~22.4평 73.5%, 22.5~29.9평 7.6%, 30평 이상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당 보유하고 있는 방의 수 역시 1개 17.2%, 2개 64.7%, 3개 17%, 4개 이상 1.1%로 나타났다. *Ibid.* pp. 238~251.

사회적 서열에 걸맞는 ‘치장’을 요구한다.²⁹ 자본주의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사회에서도 주택의 크기와 인테리어는 자신의 부(富) 또는 권력을 과시하는 문화자본이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과시적 문화자본의 획득 행위는 중간계급이나 민중계급 출신의 신흥 부르주아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³⁰ 실제로 비공식 가구총수입과 살림집 개조 희망사항을 교차분석해 본 결과, 가구의 월수입이 많을수록 집 크기 혹은 방의 수를 늘리거나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자본의 획득 욕구의 형성은 시장을 통해 상당한 부(富)를 축적한 신흥 계층이 북한사회에서 등장하는 현상과 무관해보이지 않는다.

〈표 2-9〉 살림집 개조희망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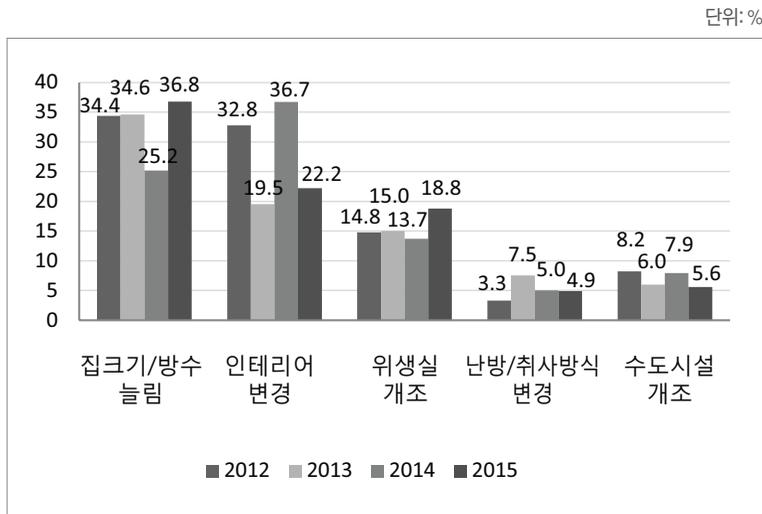
단위: 명, %

조사 연도	2012	2013	2014	2015
집크기나 방의 수를 늘림	42(34.4)	46(34.6)	35(25.2)	53(36.8)
인테리어 변경	40(32.8)	25(19.5)	51(36.7)	32(22.2)
위생실(화장실) 개조	18(14.8)	20(15.0)	19(13.7)	27(18.8)
난방/취사방식 변경	4(3.3)	10(7.5)	7(5.0)	7(4.9)
수도시설 개조	10(8.2)	8(6.0)	11(7.9)	8(5.6)
생각해본 적 없음	8(6.6)	23(17.3)	16(11.5)	17(11.8)
합계	122(100.0)	133(100.0)	139(100.0)	144(100.0)

29_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공정사회』, p. 133.

30_ 베에를 부르디외,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上)』, pp. 156-157.

〈그림 2-11〉 살림집 개조희망 사항



3. 주민의 가계경제와 가족생활

1) 가계소득의 지출 구조

가계 소득의 지출 내역을 통해 북한주민의 소비생활의 패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주민의 가계 소득의 지출 내역은 그들의 소비생활의 패턴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북한사회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사회적 지표가 된다. 경제생활에서 시장의 비중이 커지면서 소득불균등 현상이 심해지고 이에 따라 개인의 소비생활 역시 빠르게 분화하고 있다.³¹

지난 3년간의 조사에서는 가계지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로 식의주 문제해결, 장사 또는 사업 밀친, 자녀교육, 뇌물, 저축 등을 제시하고 비중의 크기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측정했다. 하지만 2015년 조사부터는 척도로 먹는 것, 입는 것, 살림집, 자녀교육, 저축, 문화생활 등을 제시하고, 월평균 수입 중에서 지출한 비중을 응답자가 직접 %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측정방법을 변경했다. 이와 같이 측정방법을 변경한 이유는 일반적인 분류기준을 통해 북한의 가계지출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가족 경제활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가치관 변화를 분석하는 동시에 남한을 비롯하여 세계 다른 국가들과의 가계지출 구조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보고자 한 데 있다.

먼저, 북한주민이 가계소득에서 가장 많이 지출한 것은 〈그림 2-12〉에서 보이듯 ‘먹는 것’으로 41.4%를 차지했다. 남한의 경우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2014년 월평균 가계 소비지출 가운데 식료품(주류 미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8%인 것과 비교했을 때 북한주민의 가계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³²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입는 것’으로 19.0%로, 남한의 경우 위와 동일한 조건에서 의류 및 신발에 지출한 비중은 5.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북한주민이 의류 구매에 지출하는 금액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에 비해 의류나 신발을 더 자주 구매한다기보다는 높은 물가 때문에 지출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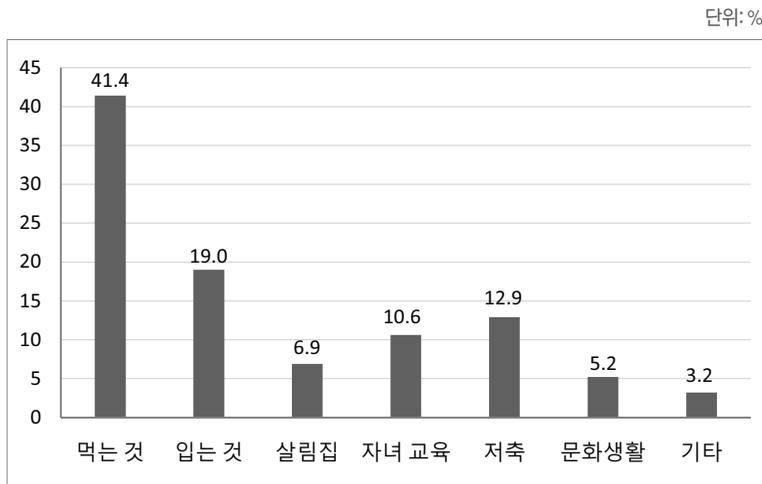
31_ 박명규 외 공저, 『북한사회변동 2012-2013: 시장화, 소득분화, 불평등』, p. 61.

32_ 통계청, 『2014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2015);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저축'(12.9%)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가계저축률이 7.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북한주민의 가계저축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³³ 북한주민에게 저축의 의미는 공식 금융기관을 이용한 저금의 개념이 아니라 개인적 축장(蓄藏)의 의미에 가깝다. 그밖에 자녀교육의 비중이 10.6%로 네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2014년 남한의 가계 교육비 비중 11.2%와 비슷한 수준이다.

남한주민들에 비해 북한 주민들의 가계지출에서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북한사회의 높은 물가를 방증한다. 하지만 저축이나 자녀교육에 지출하는 비중이 남한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것은 북한주민들이 현상유지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사회의 역동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림 2-12〉 가계 소득의 주요 지출 내역(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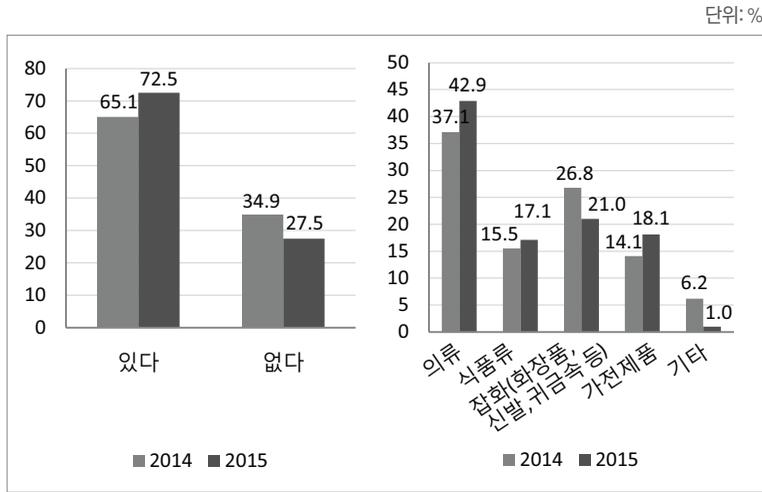
2) 남한상품의 사용 경험과 품목

이제 북한주민들이 시장을 통해 다양한 해외 상품을 경험하는 것은 낮은 풍경이 아니다. 오히려 국내 소비재 산업의 침체로 인해 국산품보다 수입품에 대한 소비의존도가 크다. 수입품에는 남한 상품도 포함되어 있다.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북한 한류에 대한 관심이 문화 영역에 집중되어 경제 영역에서는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는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2014년 조사부터 북한에 거주하던 시기에 남한물건을 사용한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먼저, 〈그림 2-13〉에서 보듯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북한에 거주하던 시기에 남한물건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5%로 2014년 대비 7.4%가 증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주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남한물건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남한물건의 품목을 조사한 결과, 1위는 의류(42.9%)이고, 2위는 화장품·신발·악세사리 등 잡화(21.0%)이며, 3위는 가전제품(18.1%)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의류는 5.8% 증가했으나 반대로 잡화류는 5.8% 감소했다. 2014년 조사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품목이 식료품이었으나 2015년 조사에서는 가전제품으로 나타났다. 소득증가로 인해 한국산 가전제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33_한국은행, 『2014 국민계정』(2016): <<http://www.bok.or.kr>>.

〈그림 2-13〉 남한상품의 사용 경험과 주요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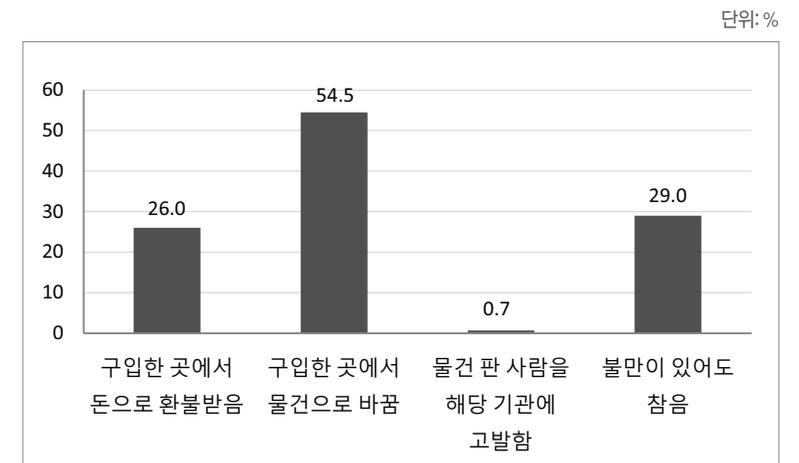
3) 소비자 행동의 능동성

어느 사회에서든 소비자는 구매하는 제품의 구매 과정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공급 중심의 사회에 비해 수요 중심의 사회에서 소비자가 더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시장의 발달은 북한주민을 배급제에 의존하던 수동적인 수혜자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소비자로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물건에 대한 구매 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주민이 소비자로서 행동의식을 얼마나 체화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2015년 조사에는 “귀하가 북한에 살 때, 물건을 구입한 후 물건에 불만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조사 결과, 물건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구입한 곳에서 다른 물건으로 바꾼 적이 있다’는 응답이 5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불만이 있어도 참았다’로 29.0%를 나타냈다.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응답은 ‘구입한 곳에 가서 돈으로 돌려 받은 적이 있다’로 26.0%를 차지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북한주민 10명 중 8명은 구입한 제품에 불만이 있을 때 교환 또는 환불을 받고 있어 비교적 소비자로서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환불보다는 교환이 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스템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매처와 금액이 표기된 영수증이 있을 때 환불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시장에서 영수증 발급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영수증 발급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미비한 점도 환불을 어렵게 하는 환경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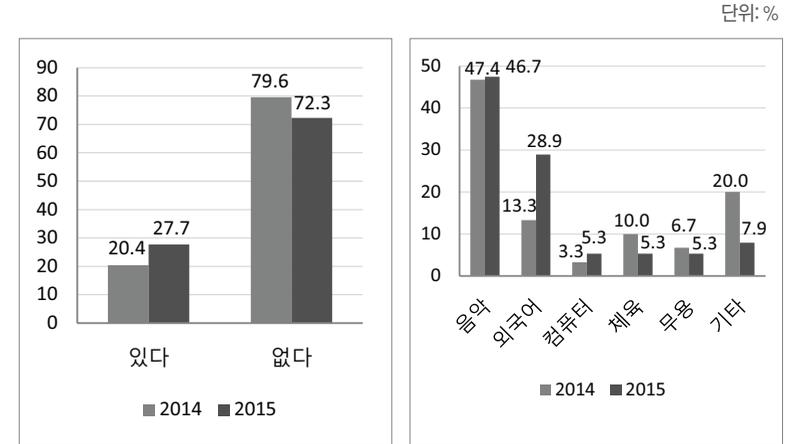
〈그림 2-14〉 소비자 행동의 능동성(2015년)



4) 자녀 사교육 실태

앞서 가계 지출내역에서 살펴본 결과 북한주민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2014년 조사부터는 북한사회에서 자녀교육을 위해 공교육 이외에 사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어떤 분야에서 사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문항들을 새롭게 추가했다. 조사 결과, <그림 2-15>에서 보이듯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2014년 20.4%에서 2015년 27.7%로 증가했다. 또한 사교육의 분야로는 음악(46.7%)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외국어(28.9%)는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나타냈다. 특히 전년 대비 외국어의 사교육 비율이 15.6%나 증가해, 남한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사회에서도 외국어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년 대비 컴퓨터 사교육의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이 흥미롭다. 반면에 체육이나 무용과 같은 분야의 사교육 비율은 감소했다. 이처럼 북한사회에서 사교육 분야의 변화는 북한사회가 어떠한 인재를 필요로 하고 훌륭한 인재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갖춰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인류문명 사회의 변화를 대표하는 두 가지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을 북한사회 역시 피할 수 없음을 사교육의 실태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5> 사교육 경험 유무와 주요 분야



5) 일상의 고민

북한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고민거리일까. 일상의 고민거리는 북한주민의 가치관 및 삶의 조직화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응답 결과, <표 2-10>에서 보이듯, 돈벌이와 각종 단속이 일상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는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북한에서는 주민 개개인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적 경제활동에 참여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사회에서 사적 경제활동은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늘 여러 가지 단속들을 경계하고 그에 대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상의 현실이 응

답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일상의 고민거리 중 돈벌이와 단속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평균 47.6%, 32.4%로 4년 연속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 대비 2015년에는 돈벌이와 뇌물제공에 대한 고민은 감소한 반면에 단속과 조직생활에 대한 고민은 증가했다. 단속과 조직생활에 대한 고민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의 사회통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金正은 정권의 안정성과 내구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변화이다.

〈표 2-10〉 일상의 고민거리

단위: 명, %

조사연도 고민거리	2012	2013	2014	2015
돈벌이	72(59.5)	66(49.6)	76(53.5)	69(47.6)
뇌물제공	1(0.8)	5(3.8)	6(4.2)	3(2.1)
단속	28(23.1)	40(30.1)	42(29.6)	47(32.4)
조직생활	8(6.6)	9(6.8)	6(4.2)	12(8.3)
출세	3(2.5)	6(4.5)	4(2.8)	6(4.1)
자녀교육	6(5.0)	4(3.0)	7(4.9)	7(4.8)
기타	3(2.5)	3(2.3)	1(0.7)	1(0.7)
합계	121(100)	133(100)	142(100)	145(100)

6) 가족 의사결정 구조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북한의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 대해 분석됐다. 북한의 가부장제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공식 국가이데올로기를 통해 국가에서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에까지 촘촘하게 뿌리내려져 있다.³⁴ 최근에는 경제위기 이후 시장의 발달과 비공식 경제활동의 증가라는 사회변화의 흐름 속에서 북한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한 변화를 주목하는 연구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의 관점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나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사회와 가정에서의 지위도 향상되고 있다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는 변하지 않은 채 기존에 남성이 책임졌던 생계까지 여성이 부담하게 되어 더 열악한 지위에 처했다는 관점이다.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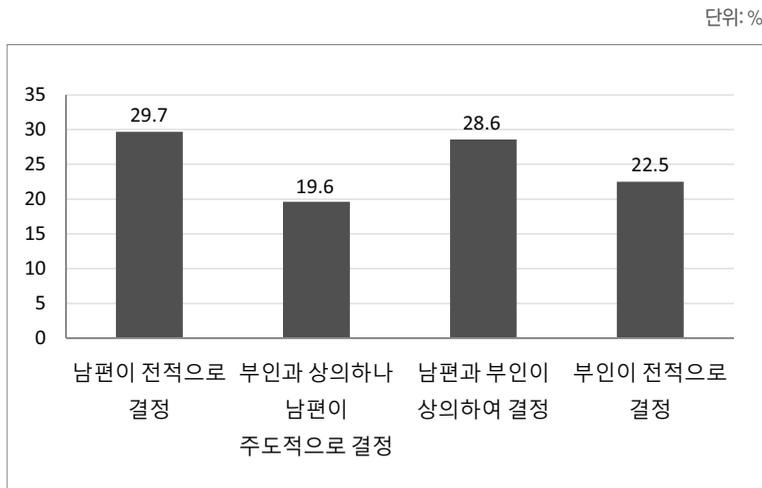
사회적 구조적 변화가 가족 단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2015년 설문조사에 처음으로 가족 내에서 주요 의사결정권이 남편(아버지)과 부인(어머니) 중 누구에게 있는가를 질문하는 문항이 포함됐다.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가정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남편(아버지)과 부인(어머니) 중 누가 주로 결정했습니까?”를 질문

34_ 북한의 가부장적인 국가권력과 사회조직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경숙, “북한사회의 국가, 가부장제, 여성의 관계에 대한 시론,” 『사회와이론』, 21권 (2010); 오유석,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가부장제,” 『경제와사회』, 49권 (2001) 참조.

35_ 경제 환경의 변화에 의한 북한 여성의 지위 및 역할의 변화를 다룬 연구들로는 문장순, “북한 여성의 역할 변화의 그 요인: 19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남북문화예술연구』, 4권 (2009); 배영애,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 이후 여성의 역할과 의식 변화,” 『통일전략』, 10권 2호 (2010); 이승윤·황은주·김유휘, “북한 공식-비공식 노동시장의 형성과 여성,” 『비판사회정책』, 48권 (2015) 참조.

한 결과, <그림 2-16>에 나타나듯 “남편(아버지)이 전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응답률이 29.7%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편(아버지)과 부인(어머니)이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응답률은 28.3%, “부인(어머니)이 전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응답률은 22.5%로 나타나 가족의 의사결정권을 일방적으로 남편 또는 아버지가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과가 북한의 경제환경의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추가 연구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통계적으로 가족의 의사결정에 대한 응답은 직업, 교육수준, 소득수준, 연령, 거주지역 변수와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6> 가족의 의사결정 유형



4. 사회의 정보화

1) 정보통신기기 이용 실태

사회변화의 속도만큼이나 북한주민의 생활양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인류 문명발전에서 ‘제3의 물결’이라고 불리는 정보화가 북한사회에서도 빠르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4년에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와 미국의 소리가 공동으로 조사 연구하여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Orascom)과 북한 체신성 산하 조선체신회사의 합작회사인 고려링크의 가입자 수는 2008년에 1,694명에서 2013년 5월 현재 2백만명으로 급증했다.³⁶ 동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휴대전화를 통해 단순 문자서비스(SMS)는 물론 영상통화까지 가능하다. 심지어 휴대폰의 문자서비스는 정부와 당의 체제 선전과 뉴스 전달에 활용되고 있다. 동 보고서는 한 탈북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북한에서 휴대전화의 소유여부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전한다.³⁷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정보통신기기의 소유 여부가 새로운 사회계층의 지표로 기능하고 있음을 말해 주며, 향후 정치경제적 지위에 따라 정보 불평등 현상이 북한사회에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6_ 김연호,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 실태: 북한의 통신혁명은 시작됐는가?』(Washington: US-Korea Institute at SAIS and Voice of America, 2014), p. 11.

37_ 위의 글, p. 23.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15년에 북한주민의 정보통신기기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2-11>과 같이 나타났다. 정보통신기기 보유 여부에 대한 전체 응답분포를 보면, 집전화 47.3%, 손전화(휴대전화) 55.5%, 컴퓨터 27.4%, 노트북 41.8%, 녹화기 66.4%, DVD 플레이어 45.2%로 나타났다. 우선, 이 조사를 통해 집계된 집전화의 응답률은 다른 자료와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를 보인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주민의 전화가입자수는 2014년 기준으로 118만명으로 같은 해 총인구(약2,460만명) 대비 4.8%의 가입률로 알려져 있다.³⁸ 그러나 최근 유엔인구기금(UNFPA)과 북한 통계국이 공동으로 발간한 「사회경제, 인구통계, 보건 조사 2014」(원제: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보고서에 의하면, 가구 유선전화 전체 보급률은 42.0%로 도시 지역은 60.7%, 농촌지역은 11.8%로 나타났다.³⁹ 따라서 북한사회변동조사에 의해 집계된 집전화 보유율과 유엔인구기금과 북한 통계국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나타난 가구 유선전화 보급률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해서 볼 항목은 손전화(휴대전화)의 응답률로 위에서 언급했던 고려링크의 가입자수와 비교했을 때 이 조사에서 파악된 휴대전화 보유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표본에서 나타나는 특성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공식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비공식 휴대전화 사용자가 북한사회에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

38_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

39_ UNFPA and Central Bureau of Statistic Pyongyang,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p. 17.

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많은 연구참여자들(북한이탈주민)이 공식 등록된 휴대전화가 아닌 경우도 해당되는가를 조사원에게 질문하였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영상기기의 보유율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이 나타나는 것은 북한 내 한류 현상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는 남한 영화나 드라마의 시청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 소비 행위는 비공식적이거나 비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주로 소비하고 있는 남한 영상물들은 CD, DVD, USB와 같은 저장매체를 통해 거래되거나 공유되기 때문에 이러한 저장매체들의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영상기기들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사회에서 나타나는 남한 영상물의 소비 행태와 확산 양상은 '디지털화된'(digitalized) 문화소비 양식의 특성을 갖는다. 모든 문화의 속성이 다른 문화와 교류하고 또 경쟁하는 가운데 선별적으로 걸러지고 굳어진 역사적 가공물이라고 한다면,⁴⁰ 북한 한류 역시 하나의 문화 양식으로 그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영상정보기기의 광범위한 보급과 달리 컴퓨터의 보급은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의 북한 반입은 국제사회의 제재 품목으로서 다른 정보통신기기에 비해 보다 더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어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도 컴퓨터의 보급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의 보급이 낮기 때문에 사이버 의사소통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40_ 류웅재, "한국 문화연구의 정치경제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모색: 한류의 혼종성 논의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6권 4호 (2008), p. 10.

〈표 2-11〉 정보통신기기 이용 실태(2015년)

단위:%

종류	집전화	손전화	컴퓨터	노트텔	녹화기	DVD 플레이어
응답률	47.3	55.5	27.4	41.8	66.4	45.2

2) 인트라넷 이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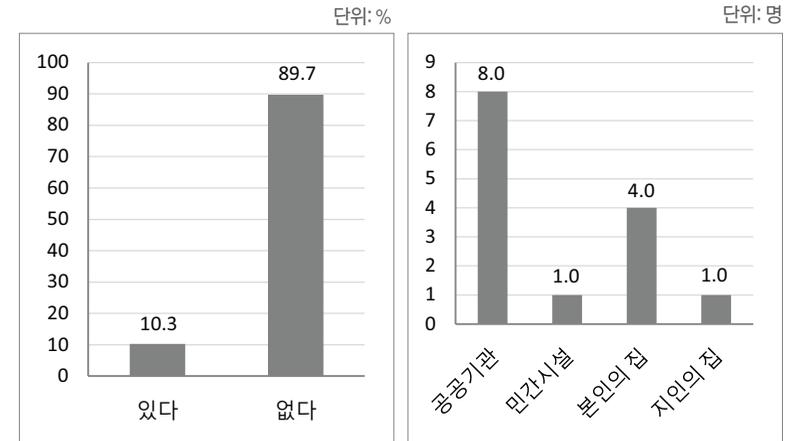
공식적으로 북한주민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지만, 내부 정보 네트워크망인 인트라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이미 2000년대 들어 정보화를 중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보환경 구축 측면에서 북한은 2000년경에 개설된 인트라넷 ‘광명’을 통해 주요 대학, 도서관, 기업소 등이 접속하여 정보 검색 및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¹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2004년 2월 22일자 인터넷판)는 “평양 네티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새 지식에 대한 탐구심”이라면서 “특히 컴퓨터 기술을 전공하는 새 세대들은 대화실을 이용해 프로그램의 공동개발을 진행하는 등 사이버 공간이 제공한 ‘만남’을 백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보화 추진에 대한 북한당국의 선전이 사실이라면 십수년이 지난 2014년 현재 북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정보화의 환경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조사 결과, 〈그림 2-17〉에서 보이듯 북한에

41 “北, 1천24개 인터넷주소 등록”, 연합뉴스(2010년 6월 15일), <<http://www.yonhapnews.co.kr/bullletin/2010/06/15/0200000000AKR20100615097700014.HTML?did=1179m>>.

서 거주할 당시 인트라넷을 이용해 본 북한 주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7〉 인트라넷 이용 경험

〈그림 2-18〉 인트라넷 이용 장소



인트라넷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3%인 반면에, 이용해 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률은 89.7%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10명 중 1명 정도만이 인트라넷을 이용해본 것이다. 그러나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응답자 대다수가 대도시가 아닌 접경지대의 소도시에 거주했다는 점과 응답자 대다수의 직업이 노동자, 농민, 장사, 주부 등으로 컴퓨터 사용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 종사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인트라넷 이용 경험에 대한 응답률은 과소 집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역으로, 북한의 정보화 환경은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소도시,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다. 인트라넷의 주요 이용 장소는 〈그림 2-18〉에 나타나듯 대다수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직장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직까지 북한의 정보화 환경이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에까지 확대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사적 영역에서 정보네트워크 수준이 낮은 데는 PC(Personal Computer)의 낮은 보급률과 더불어 사적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 영역에 제한하여 정보화 환경을 구축한 정책의 결과 때문이기도 하다.

5. 계층별 생활의 불평등⁴²

1) 계층 구분

한 사회에서 개인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분류되는 지위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분류되는 지위가 동시에 존재한다. 두 지위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측정할 때 하층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중간계층이라고 생각하여 중간계층의 여가생활이나 소비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 한 개인의 행동에는 그의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모두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주관적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요인 역시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미국사회의 경우 직업적 지위는 주관적 계층의식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이며, 교육, 숙련도, 소득, 작업 권

42 이 글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층의 용어는 응답자가 탈북직전 시기에 자신이 속했던 계층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주관적인 계층의식' 또는 '귀속적 계층'을 의미한다.

한과 재량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⁴³ 한국사회의 경우, 객관적 기준을 보여주는 주요 변수는 직업, 소득, 자산, 교육 등이 포함되며, 주관적 판별 기준으로는 귀속의식이 해당된다.⁴⁴

이 글에서는 북한주민의 계층을 객관적 지표로서 소득과 주관적 귀속의식으로 나누어 계층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북한사회의 객관적 지표로서 월평균 비공식 소득을 기준으로 계층 구분을 하였다.⁴⁵ 이 비공식 소득 자료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660명이 북한에 거주했을 때의 소득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전체의 실제 소득 자료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의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소득 통계자료를 획득할 수 없다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나마 북한주민의 소득 수준을 추정해보고, 그 소득 자료를 통해 북한의 계층분화 및 사회 불평등을 분석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북한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체 표본 660명의 소득에서 중위소득 값은 150,000원으로 측정되었다. OECD의 기준에 따라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50%~150%로 설정했을 때, 하층은 월평균 소득 75,000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며, 중층은 월평균 소득 75,000원~225,000원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상층은 월평균 소득 225,000원 초과일 경우에 해당된다. 그 결과, 상층은 37.1%, 중층은

43 Mary R. Jackman and Robert W. Jackman, *Class Awareness in the United States*(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p. 40.

44 홍두승, 『한국의 중산층』(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p. 97.

45 월평균 공식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중위소득이 110원으로 명목소득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여 이 글에서는 비공식 소득을 계층 구분의 자료로 사용했다.

20.2%, 하층은 32.3%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관적 귀속의식으로서 측정된 계층 분포는 소득에 의해 분류된 계층 분포와 상이한 모습을 띄고 있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에게 탈북 직전에 북한에서 자신이 속했던 계층을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660명 가운데 상층 5.0%, 중층 53.6%, 하층 24.7%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소득 기준에 의해 분류되는 계층은 표본 구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루지 않고 대신에 개인의 귀속의식으로 분류되는 계층에 따라 나타나는 북한주민의 생활 차이를 기술하고자 한다.

2) 계층별 생활 비교

(1) 계층별 식생활 비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이 하루 세끼 이상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식사횟수에서 계층간 차이는 크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질적인 측면에서 계층간 격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계층별 식생활 비교에서 주목해 볼 사항은 주식 구성과 고기섭취 빈도이다. 2015년 조사에서는 주식 구성에 대한 항목 구성을 기존 조사와 달리했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와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실시된 네 차례의 조사 결과를 통합한 통합 데이터가 아닌 2015년의 조사 데이터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표 2-12〉에서 보듯이 거의 입쌀로 밥을 먹었다는 응답률은 상층 100.0%, 중층 66.0%, 하층 29.0%로 나타나 계층간 격차를 보여준다.

하지만 지난 3년간의 통합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흥미로운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3년의 통합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상층의 경우 15.8%, 중층 18.2%, 하층 15.0%로 모든 계층에서 입쌀 섭취의 응답률이 증가했다. 특히 중층의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 소득 상승이 식생활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중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뚜렷하게 보인다. 또한 거의 강냉이로만 먹었다는 하층의 응답률 변화를 주목할 만하다. 지난 3년간 통합데이터에서 거의 강냉이로만 먹었다는 하층의 응답률은 53.5%였는데 비해 2015년 조사에서는 35.5%로 18.0% 감소했다. 그만큼 하층의 경우도 식생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상층의 100%가 거의 입쌀로 식사를 하는 반면에, 여전히 하층의 경우 35.5%가 강냉이로만 식사를 하고 있을 정도로 계층간 식생활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연도별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면, 상층의 경우 거의 입쌀로 먹었다는 비율이 2012년 81.8%, 2013년 80%, 2014년 100%, 2015년 100%로 나타나 식생활이 안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중층의 경우 거의 입쌀로 먹었다는 응답률이 2012년 41.3%, 2013년 43.0%, 2014년 56.7%, 2015년 66.0%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 빠른 속도로 중층의 식생활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하층의 경우 거의 입쌀로 밥을 먹었다는 응답률이 2012년 20.4%, 2013년 14.3%, 2014년 6.7%, 2015년 29.0%로 나타나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하층의 경우 식생활에서 취약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2-12〉 계층별 주식 구성 비교(2015년)

단위: 명, %

계층 구분 주식 구성	상층	중층	하층	합계
거의 입쌀	14(100.0)	66(66.0)	9(29.0)	89(61.4)
입쌀 위주, 강냉이 조금 섞음	0(0.0)	12(12.0)	8(25.8)	20(13.8)
입쌀과 강냉이 반반	0(0.0)	12(12.0)	1(3.2)	13(9.0)
강냉이 위주, 입쌀 조금 섞음	0(0.0)	6(6.0)	2(6.5)	8(5.5)
거의 강냉이	0(0.0)	4(4.0)	11(35.5)	15(10.3)
합계	14(100.0)	100(100.0)	31(100.0)	145(100.0)

$\chi^2=100.180, p<0.001$

다음으로 계층별 고기섭취의 횟수를 비교해보면, 〈표 2-13〉에 나타나듯 상층의 경우 ‘일주일에 한두번’, 중층의 경우 ‘한 달에 한두 번’, 하층의 경우 ‘일 년의 한두 번’ 고기를 섭취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패턴이 4년 연속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응답률을 보면, 상층의 경우 일주일에 한두 번 고기를 먹었다는 응답률이 51.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중층의 경우는 한 달에 한두 번 고기를 먹었다는 응답률이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층의 경우에는 일 년에 한두 번 고기를 먹었다는 응답률이 53.1%로 가장 높았다.

그런데 계층별 고기섭취 횟수에서 주목할 사항은 거의 매일 고기를 먹었다는 응답률의 결과이다. 특히 상층의 응답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

는데, 2014년 10.5%에서 2015년 33.3%로 증가했다. 중층의 응답률도 증가했는데 2014년 4.8%에서 2015년 10.2%로 나타났다. 반면에 하층의 경우는 2014년 0.8%에서 2015년 0.6%로 오히려 감소했다. 식생활의 질적 측면에서 계층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응답률의 변화를 보면, 상층의 경우 일주일에 한두 번 고기를 먹었다는 응답률은 2012년 81.8%, 2013년 40.0%, 2014년 66.7%, 2015년 28.6%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의 조사 결과만 보면 상층의 고기섭취 횟수가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볼 수 있으나, 상층의 경우는 거의 매일 고기를 먹었다는 응답률이 2014년 0.0%에서 2015년 64.3%로 급증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상층의 경우 고기섭취 횟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중층의 경우 일주일에 한두 번 고기를 먹었다는 응답률은 2012년 25.8%, 2013년 29.0%, 2014년 35.1%, 2015년 35.6%로 나타나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더불어 거의 매일 고기를 먹었다는 응답률도 2014년 5.2%에서 2015년 23.8%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하층의 경우는 일주일에 한두 번 고기를 먹었다는 응답률이 2012년 4.1%, 2013년 5.7%, 2014년 2.1%, 2015년 16.1%로 나타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층과 중층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2-13〉 계층별 고기섭취 횟수

단위: 명, %

계층 구분 고기섭취 횟수	상층	중층	하층	합계
거의 매일 섭취	11(33.3)	36(10.2)	1(0.6)	48(8.8)
일주일에 한두번 섭취	17(51.5)	113(32.0)	1(6.2)	140(25.5)
한달에 한두번 섭취	4(12.1)	166(47.0)	60(37.0)	230(42.0)
일년에 한두번 섭취	1(3.0)	38(10.8)	86(53.1)	125(22.8)
먹어본 적 없음	0(0.0)	0(0.0)	5(3.1)	5(0.9)
합계	33(100.0)	353(100.0)	162(100.0)	548(100.0)

$\chi^2=189.356, p=0.000$

(2) 계층별 의생활 비교

의류 구매횟수를 제외하고 의류 장만경로나 원산지의 경우는 계층과의 교차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계층별 의류 구매횟수를 중심으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표 2-14〉에서 보이듯 식생활과 마찬가지로 의생활에서도 계층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계절마다 한 두벌의 옷을 구입했다’는 응답 비율을 계층별로 보면 상층 81.8%, 중층 47.7%, 하층 11.2%로 나타나 계층간 큰 격차를 보였다. 이 응답률은 2014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상층은 2.9%, 중층은 4.2%, 하층은 1.2% 증가한 것이다. 반면에 ‘일년에 한두벌 옷을 구입했다’는 응답률은 상층의 경우 2014년 15.8%에서 2015년 12.1%로, 중층의 경우 2014년 40.3%에서 2015년 39.0%로 감소했다. 하층의 경우는 “몇 년에 한 두벌의 옷을 구입했다”는 응답률이

2014년 36.9%에서 2015년 32.9%로 감소했다. 이로써 전반적으로 모든 계층에서 북한주민의 의생활 소비수준이 2014년 조사에 비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층보다는 중층의 상승폭이 더 크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이것은 소득 증가로 인해 중층의 북한주민에게 옷이나 치장을 통해 상승 지향의 욕구가 강하게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14〉 계층별 의류 구매횟수 비교

단위: 명, %

계층 구분 의류 구매횟수	상층	중층	하층	합계
계절마다 한두벌 구입	27(81.8)	169(47.7)	18(11.2)	214(39.1)
일년에 한두벌 구입	4(12.1)	138(39.0)	61(37.9)	203(37.0)
몇 년에 한두벌 구입	1(3.0)	39(11)	53(32.9)	93(17.0)
남한테 얻어 입음	0(0.0)	4(1.1)	26(16.1)	30(5.5)
기타	1(3.0)	4(1.1)	3(1.9)	8(1.5)
합계	33(100.0)	354(100.0)	161(100.0)	548(100.0)

$\chi^2=144.077, p=0.000$

(3) 계층별 주거생활 비교

주거생활에서 나타나는 계층간 차이는 뚜렷하다. 계층별 살림집 유형을 비교해보면, 〈표 2-15〉에 나타나듯 상층의 경우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응답률이 중층과 하층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중층의 경우는 연립주택과 아파트의 비중이 높고, 하층은 연립주택의 비중이 매우 높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층의 경우 아파트 45.5%, 단독주택 39.4%, 연립주택이 9.1%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중층은 연립주택

48.6%, 아파트 25.4%, 단독주택 21.2%의 순서로 나타났다. 하층은 연립주택 63.8%, 아파트 16.6%, 단독주택 16.0%의 순서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아파트의 거주 비율이 높고,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연립주택의 거주 비율이 높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북한사회에서 아파트가 계층 상승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 또는 문화자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주목할 점은 계층간 주택유형의 차이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조사에서는 아파트의 거주 비율이 상층과 중층이 각각 26.3%, 22.9%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2015년 조사에서 상층의 경우 2014년 조사에 비해 19.2% 증가한 반면에 중층은 2014년 조사에 비해 2.5% 증가하였다. 하층의 경우는 2014년 조사에 비해 1.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결과는 소득 증가로 인해 상층의 북한주민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2014년 조사에서는 식생활과 의생활에 비해 주거생활에서 나타나는 계층간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으나, 2015년 조사에서는 주거생활에서도 계층간 격차가 뚜렷하게 발견되었다. 주택의 사적 거래가 늘어나고 심지어 주택건설에서 사적 자본의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북한에서도 주거 양식이 계층 분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회적 지표로 부상하고 있다.

〈표 2-15〉 계층별 살림집 유형 비교

단위: 명, %

계층 구분 주택 유형	상층	중층	하층	합계
아파트	15(45.5)	90(25.4)	27(16.6)	132(24.0)
연립주택	3(9.1)	172(48.6)	104(63.8)	279(50.7)
단독주택	13(39.4)	75(21.2)	26(16.0)	114(20.7)
기타	2(6.1)	17(4.8)	6(3.7)	25(4.5)
합계	33(100.0)	354(100.0)	163(100.0)	550(100.0)

$\chi^2=35.338, p=0.000$

(4) 계층별 정보화 환경 비교

북한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2000년대 이후 북한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변화들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을 꼽으라면 아마도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시장화와 정보화를 꼽을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 정보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요한 상품이다.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저장 매체와 함께 저장된 정보를 구현하는 장치의 보급은 시장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시장이 발달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사회적 유동이 증가하면서 주민들 간에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도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휴대전화의 보급을 촉진시켰다. 하지만 어느 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사회에서 정보화가 균등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표 2-16〉은 계층 간에 나타나는 정보화 환경의 불평등을 보여준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집전화의 경우 상층의 보유율은 92.9%인 반면에 중

층은 49.5%, 하층은 19.4%로 매우 큰 격차를 보인다. 반면에 휴대전화의 경우는 집전화에 비해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상층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85.7%이고, 중층은 62.4%이다. 이 결과의 차이는 집전화의 경우 반드시 정부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보유할 수 있는 반면에, 휴대전화의 경우는 불법이지만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것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이 계층간 격차를 줄이는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층은 저소득으로 인해 불법적인 형태로라도 휴대전화를 갖기 힘들다.

흥미롭게도 노트북이나 녹화기와 같은 영상기기의 경우 계층간 격차는 훨씬 줄어든다. <표 2-16>에서 보이듯 노트북의 보유율은 상층 57.1%, 중층 47.5%, 하층 16.1%로 나타났으며, 녹화기의 보유율은 상층 71.4%, 중층 71.3%, 하층 48.4%로 나타났다. 특히 상층과 중층의 격차가 크지 않다. 이것은 중층이 문화적 소비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중국사회에서 중산층이 소비문화를 주도하는 특성이 나타듯이,⁴⁶ 북한사회에서도 중층은 미래에 정보화를 포함하여 문화적 소비를 촉진하는 잠재적 요소를 갖고 있다.

<표 2-16> 계층별 정보통신기기 보유율 비교

단위: 명, %

정보통신기기 유형 \ 계층 구분	상층	중층	하층
집전화	13(92.9)	50(49.5)	5(19.4)
휴대전화	12(85.7)	63(62.4)	6(19.4)
컴퓨터	8(57.1)	31(30.7)	1(3.2)
노트텔	8(57.1)	48(47.5)	5(16.1)
녹화기	10(71.4)	72(71.3)	14(48.4)

6. 평가와 시사점

지난 4년 동안 진행된 북한사회변동조사를 통해 파악된 북한주민의 기초적인 생활은 점점 개선되고 있다. 그 변화의 주요 동인이 북한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이나 정부당국의 정책적 노력인지 아니면 북한 주민들의 근면과 활력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 하지만 세 요소 모두가 북한주민의 생활 향상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북한주민의 생활 향상과 더불어 고착화되고 있는 사회 불평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불평등은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주식에서 쌀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고기섭취의 횟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지만, 상층과 하층 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 의복의 경우도 상층일 수록 중국산보다는 남한산 또는 일본산의 구매 선호가 뚜렷하고 백화점이나 해외직구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소득 증가와 함께 아파트 거주비율도 크게 늘었다. 특히 식의주 생활 모든 면에서 중층의 약진이 뚜렷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중층은 분명히 북한사회에서 소비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잠재성을 내재하고 있다. 고소득층일수록 남한상품을 소비하는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자녀 사교육 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어 사교육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은 북한사회 변화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계층간 사교육의 격차가

46_ 서석홍, "중국 도시지역 중산층의 성장과 소비구조의 전환," 『현대중국연구』, 7권 2호 (2006), pp. 6-18.

매우 크다는 것은 ‘계층상승의 사다리’로서 교육의 사회적 기능이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현상이다.

2015년 조사에 처음으로 포함된 정보화 수준을 보면 핸드폰 보유율이 상당히 높으며, 영상기기의 보유율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컴퓨터의 보유율은 확실히 낮은 수준이다. 정보화 환경 측면에서도 평양과 지방,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보네트워크망은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폐쇄적 형태로 구축되어 있어 북한사회에서 정보화가 진행되더라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의 실현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2016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인민생활문제를 ‘제일국사’라 하며 농산, 축산, 수산 부문에서의 증산을 통해 인민생활을 개선시키고, 경공업을 현대화하고 국산화를 이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할 것을 독려했다. 또한 건설은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자 인민적 시책”이라며 생산시설, 교육문화시설, 살림집 등을 최상의 수준으로 건설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신년사 발표 직후에 감행한 ‘수소탄’ 실험으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경제제재와 압박을 받는 처지를 스스로 자초하였다. 신년사에서 5월에 개최될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 ‘휘황한 설계도’를 제시하겠다는 호언(豪言)은 실제로 5월 6~9일간 개최된 7차 당대회를 통해 허언(虛言)임이 입증되었다.

4년간의 북한사회변동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것처럼 북한사회는 급속히 불평등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는 인민생활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는 국가적 과제와 더불어 김정은 정권이 반

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 문제임에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북한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제 13기 4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성이 부여되었듯이 5년 후 북한사회의 모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제3장

**경제의 시장화와
소득, 연령대, 지역 분화**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3장 경제의 시장화와 소득, 연령대, 지역 분화

1. 서론

북한경제의 시장화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시장화는 크게 소비재 유통부문에서 국영유통망 대신 종합시장을 비롯한 사적 경제활동의 진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생산과 관련된 시장으로 자본재-생산수단 시장과 노동시장 등 생산요소를 거래하는 시장의 활성화를 의미하기도 하며 금융과 관련해서 자본시장의 형성과 발달을 의미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 자원배분 메커니즘으로서 시장원리가 확산되는 것을 시장화의 진전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사적 경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이나 거래뿐 아니라 국가의 계획경제영역에서 시행 중인 주문계약제도⁴⁷

47. 북한이 경제관리방법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하고 있는 주문계약제는 “수요단위가 생산단위에 주문을 제기하고 수요자와 생산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고 주문에 따라 생산과 공급이 계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북한은 이를 “인민경제 계획사업의 개선”이라며, 국가가 자재를 공급해주고 계획과제를 시달하는 지표들을 제외한 모든 지표들은 해당 생산단위가 내부 예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해 생산해야 하며 이를 주문계약에 기초한 방법으로 해당 생산단위가 계획화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주문의 우선 순위를 올바르게 규정해야 국가의 통일적 지도가 가능하다고 성-지방-기업소 순서로 주문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하며, 수요와 공급 통로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생산제품목록과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자나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작해서 보급하거나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는 광고도 해야 한다고 한다(김성철,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일 수 있게 인민경제계획사업을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3호(2015), pp. 6-7).

내부 예비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 합의에 따라 거래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나마 시장경제원리가 국영경제영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정보의 부족 등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북한경제의 시장화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종합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시장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한편 사적 경제활동의 활성화는 다양한 사회적 분화를 가져온다. 일차적으로 소득의 분화와 그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발생시킨다. 이는 정치적인 위계질서에 따라 편제된 계층질서가 사회경제적 분화에 따라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소득 분화와 그에 따른 의식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북한에서 사회경제적 계층화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자 근본적으로 사회경제적 계층이 사회적 범주로 자리잡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적 경제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들은 또한 연령대에 따른 경제활동의 내용과 인식의 분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북한주민들이 사회에 진출하던 시기의 상황을 중심으로 연령대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경제활동과 인식의 분화를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적 경제활동 활성화에 따른 부의 이동이 지역적으로는 어떤 분화를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2. 경제의 시장화

1) 사적 경제활동

(1) 장사경험

먼저 장사경험은 주민들이 생계유지 차원에서 시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일 수 있다.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장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2015년의 경우 응답자의 76.7%가 장사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14년에 비해 6.9% 증가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72.7%가 장사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70% 이상이 장사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장사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전체
2012년	88	38	126
	69.8	30.2	100.0
2013년	99	34	133
	74.4	25.6	100.0
2014년	104	45	149
	69.8	30.2	100.0
2015년	112	34	146
	76.7	23.3	100.0
전체	403	151	554
	72.7	27.3	100.0

“북한에서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2015년의 경우 응답자의 20.7%가 장사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장사를 전업으로 하였다는 응답비중을 의미한다. 전업장사 비중은 2012년 11.2%, 2013년 13.5%로 증가하다가 2014년 4.7%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 20.0% 이상으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2.5%를 차지하였다.

〈표 3-2〉 전업장사 비중

단위: 명, %

구분	노동자	농민	사무원	전문가	학생	군인	외화별이	장사	가정부인	무직기타	전체
2012년	47	11	6	9	8	5	3	14	14	8	125
	37.6	8.8	4.8	7.2	6.4	4.0	2.4	11.2	11.2	6.4	100.0
2013년	42	5	13	11	8	6	3	18	22	5	133
	31.6	3.8	9.8	8.3	6.0	4.5	2.3	13.5	16.5	3.8	100.0
2014년	46	11	18	5	11	7	0	7	28	15	148
	31.1	7.4	12.2	3.4	7.4	4.7	0.0	4.7	18.9	10.1	100.0
2015년	38	7	13	8	7	7	6	30	17	12	145
	26.2	4.8	9.0	5.5	4.8	4.8	4.1	20.7	11.7	8.3	100.0
전체	173	34	50	33	34	25	12	69	81	40	551
	31.4	6.2	9.1	6.0	6.2	4.5	2.2	12.5	14.7	7.3	100.0

장사를 전업으로 했다는 응답자들의 공식적인 직업을 보면 가정부인이 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25.0%를 차지한 노동자들이었으며 기타.무직이 13.5%, 사무원, 피부양자, 학생이 각각 2.8%로 나타났다.

이는 장사경험자의 비중이 70.0%를 넘지만 장사를 통해 생활을 영위하는 층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장사를 전업으로 하는 집단 또한 주로 가정부인들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시장화를 장사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성별 장사경험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사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남성의 경우 64.1%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77.9%로 남성보다 13.8%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 성별 장사 경험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전체
남성	64.1	35.9	100.0
여성	77.9	22.1	100.0
전체	72.5	27.5	100.0

공식적인 직업별로 장사경험 비중을 살펴보면 대체로 90.0%인 가정부인을 제외하면 무직이나 기타 층이 78.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노동자층과 사무원 층으로 각각 75.8%와 73.3%를 차지하였다. 반면 경제 활동을 하는 농민 층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이나 군인과 비슷하게 장사경험이 있는 층의 비중이 50.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공식 직업별 장사경험 비중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전체
노동자	72	23	95
	75.8	24.2	100.0
농민	10	11	21
	47.6	52.4	100.0
사무원	33	12	45
	73.3	26.7	100.0
피부양자	2	1	3
	66.7	33.3	100.0
학생	9	11	20
	45.0	55.0	100.0
군인	6	7	13
	46.2	53.8	100.0
가정부인	54	6	60
	90.0	10.0	100.0
무직 및 기타	26	7	33
	78.8	21.2	100.0
전체	212	78	290
	73.1	26.9	100.0

교육수준에 따른 장사경험을 살펴보면 전문학교와 고등중학교 졸업자들이 각각 75.5%와 74.3%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대학교 졸업자는 69.0%로 전문학교나 고등중학교 졸업자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나타냈

다. 빈도수가 많지 않은 인민학교나 무학을 제외하면 실제 학력수준에 따른 장사경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5〉 교육수준별 장사 경험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전체
대학교	58	26	84
	69.0	31.0	100.0
전문학교	71	23	94
	75.5	24.5	100.0
고등중학교	266	92	358
	74.3	25.7	100.0
인민학교	3	7	10
	30.0	70.0%	100.0
무학	2	2	4
	50.0	50.0	100.0
전체	400	150	550
	72.7	27.3	100.0

대체로 학력수준에 따른 장사경험자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대학교 졸업자 중 장사경험자의 비중을 조사연도별로 살펴보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사경험자의 비중이 2012년에는 38.5%로 40.0%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2013년 68.2%로 급증한 후 2014년 75.0%, 2015년 79.3%로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3-6〉 대학교 졸업자 중 장사경험자 비중 추세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전체
2012년	5	8	13
	38.5	61.5	100.0
2013년	15	7	22
	68.2	31.8	100.0
2014년	15	5	20
	75.0	25.0	100.0
2015년	23	6	29
	79.3	20.7	100.0
전체	58	26	84
	69.0	31.0	100.0

한편 당원 여부에 따른 장사경험을 살펴보면 장사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당원의 경우 68.8%이고 비당원의 경우 73.3%로 비당원이 당원보다 4.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당원까지 당원에 포함하면 당원의 장사경험이 67.7%로 비당원의 73.3%보다 5.6%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70.0% 전후의 장사경험을 보인다는 점에서 당원 여부별 차이가 큰 의미를 지니기 어려울 수 있으나, 당원의 장사경험이 비당원보다 약간이나마 낮게 나타난 점은 김정은 정권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당의 지도적 위상이나 역할 제고와 관련하여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표 3-7〉 당원 여부별 장사경험자 비중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전체
당원	64	29	93
	68.8	31.2	100.0
후보당원	1	2	3
	33.3	66.7	100.0
비당원	404	147	551
	73.3	26.7	100.0
전체	469	178	647
	72.5	27.5	100.0

(2)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북한에 거주할 당시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를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소매장사가 2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26.6%를 차지한 기타 범주였으며 외화벌이가 15.6%, 되거리장사가 13.3%, 돈장사가 7.8%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매장사가 33.3%로 가장 높고 기타 범주가 21.8%였으며 되거리장사와 외화벌이가 각각 11.5%와 11.1%를 차지하였으며 샅벌이가 6.1%, 돈장사가 5.7%를 차지하였다. 개인편의봉사나 개인(임)가공, 식당상점 임대운영은 각각 4.0%, 2.9%, 2.5%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2년 이후 조사결과를 연도별로 비교하면 가장 주목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소매장사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소매장사의 경우

조사가 시작된 2012년에 36.8%였고 2013년에는 38.5%로 1.7% 증가한 다음 2014년 31.7%로 6.8% 하락하였고 2015년에는 27.3%로 4.4% 하락하였다. 2015년의 경우 2012년에 비해 8.5% 하락하였다. 기타 범주를 제외하면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외화벌이의 경우 2012년 10.4%에서 2015년 15.6%로 5.2% 증가하였다.

〈표 3-8〉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단위: 명, %

구분	소매장사	개인 편의 봉사	개인(임)가공	식당·상점 임대 운영	되거리장사	외화벌이	돈장사	샅벌이	해외 파견	기타	전체
2012년	39	5	2	2	11	11	7	4	1	24	106
	36.8	4.7	1.9	1.9	10.4	10.4	6.6	3.8	0.9	22.6	100.0
2013년	45	7	5	0	7	14	6	12	2	19	117
	38.5	6.0	4.3	0.0	6.0	12.0	5.1	10.3	1.7	16.2	100.0
2014년	40	7	4	4	20	8	4	10	2	27	126
	31.7	5.6	3.2	3.2	15.9	6.3	3.2	7.9	1.6	21.4	100.0
2015년	35	0	3	6	17	20	10	3	0	34	128
	27.3	0.0	2.3	4.7	13.3	15.6	7.8	2.3	0.0	26.6	100.0
전체	159	19	14	12	55	53	27	29	5	104	477
	33.3	4.0	2.9	2.5	11.5	11.1	5.7	6.1	1.0	21.8	100.0

북한에 거주할 당시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한 기간을 살펴 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1년 이상~3년 미만인 6.3% 증가하였고 5년 이상이 10.3%나 감소하였다. 대체로 5년 이상 종사자들이 상대

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5년 이하 종사자들이 늘어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가 이후에도 지속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5년 이상이 46.4%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 가운데 1년 이상~3년 미만은 19.8%로 1/5정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3년 이상~5년 미만으로 17.5%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6개월 미만은 포함해 1년 미만은 16.3% 정도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3-9〉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기간

단위: 명, %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 이상	전체
2012년	16	6	29	16	36	103
	15.5	5.8	28.2	15.5	35.0	100.0
2013년	9	9	20	19	62	119
	7.6	7.6	16.8	16.0	52.1	100.0
2014년	10	6	18	23	66	123
	8.1	4.9	14.6	18.7	53.7	100.0
2015년	12	9	27	25	56	129
	9.3	7.0	20.9	19.4	43.4	100.0
전체	47	30	94	83	220	474
	9.9	6.3	19.8	17.5	46.4	100.0

(3) 원부자재와 상품 출처

북한에서 거주할 당시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하면서 사용한 원부자재나 상품의 출처를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북한산의 비중이 4.4% 증가하고 중국산의 비중이 6.6% 감소하였다. 남한산의 경우도 2.4% 증가하였다. 2015년 조사에서 남한산을 사용한 경우는 돈장사가 50.0%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밀수와 같은 기타 범주로 33.3%였고, 마지막으로 되거리 장사가 16.7%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산의 비중이 2012년 73.0%에서 2015년 59.2%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6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산의 경우는 2012년 22.5%에서 2015년 34.2%로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3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 들어 자강력을 강조하면서 상품과 원부자재의 국산화를 강조함으로써 북한산의 사용비중이 다소 늘어나고 있을 가능성과 동시에 국산화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표 3-10〉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원부자재와 상품 출처

단위: 명, %

구분	북한	중국	남한	일본	기타 나라들	전체
2012년	20	65	4	0	0	89
	22.5	73.0	4.5	0.0	0.0	100.0
2013년	42	74	2	1	0	119
	35.3	62.2	1.7	0.8	0.0	100.0
2014년	34	75	3	1	1	114
	29.8	65.8	2.6	0.9	0.9	100.0
2015년	41	71	6	1	1	120
	34.2	59.2	5.0	0.8	0.8	100.0
전체	137	285	15	3	2	442
	31.0	64.5	3.4	0.7	0.5	100.0

북한에 거주하면서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별로 사용한 원부자재나 상품의 출처를 살펴보면 먼저 소매장사나 개인편의봉사, 식당이나 상점의 임대운영이 70.0% 초반대의 중국산 사용비중을 보였다. 소매장사는 중국산을 사용한 비중이 72.1%인 반면 북한산은 27.3%를 차지하였다. 개인편의봉사도 소매장사와 비슷하게 중국산을 사용한 비중이 73.7%이고 북한산은 21.1%를 차지하였다. 식당이나 상점을 임대하여 운영한 경우도 중국산이 72.7%로 소매장사나 개인편의봉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북한산은 18.2%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소매장사나 개인편의봉사 등에 비해 사업의 규모가 큰 되거리장사나 외화벌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북한산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비중이 70.0%대였던 소매장사나 개인편의봉사 등에 비해 되거리장사의 경우 중국산의 비중은 60.0%, 북한산의 비중은 36.0%를 차지하였다. 외화벌이의 경우는 중국산의 비중이 51.9%로 절반 정도로 떨어진 반면 북한산의 비중은 46.2%로 늘어났다.

한편 남한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일거리가 돈장사로 나타났다. 돈장사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중국산의 비중이 65.4%로 가장 크지만, 남한산의 비중이 26.9%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보였으며 북한산은 7.7%로 전체 일거리에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돈장사에 필요한 자본이 중국에서 들어온 경우가 가장 많고 남한에서 송금된 자본이 그 다음을 차지한 반면, 북한 내에서 자생적으로 축적된 자본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시사할 수도 있다.

〈표 3-11〉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별 원부자재·상품 출처

단위: 명, %

구분	북한	중국	남한	일본	기타	전체
소매장사	42	111	1	0	0	154
	27.3	72.1	0.6	0.0	0.0	100.0
개인편의봉사	4	14	1	0	0	19
	21.1	73.7	5.3	0.0	0.0	100.0
개인(임)가공	2	11	0	0	0	13
	15.4	84.6	0.0	0.0	0.0	100.0
식당·상점 임대 운영	2	8	1	0	0	11
	18.2	72.7	9.1	0.0	0.0	100.0
되거리장사	18	30	2	0	0	50
	36.0	60.0	4.0	0.0	0.0	100.0
외화벌이	24	27	0	1	0	52
	46.2	51.9	0.0	1.9	0.0	100.0
돈장사	2	17	7	0	0	26
	7.7	65.4	26.9	0.0	0.0	100.0
샅벌이	9	16	0	0	1	26
	34.6	61.5	0.0	0.0	3.8	100.0
해외 파견	1	4	0	0	0	5
	20.0	80.0	0.0	0.0	0.0	100.0
기타	30	44	3	2	1	80
	37.5	55.0	3.8	2.5	1.3	100.0
전체	134	282	15	3	2	436
	30.7	64.7	3.4	0.7	0.5	100.0

장사나 부업을 통해 얻은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원부자재나 상품의 출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북한산을 사용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중국산을 사용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산의 경우 소득이 2만원 미만인 층에서는 19.6%였으나 소득이 90만원 이상인 층에서는 이보다 27.3% 증가한 46.9%로 나타난 반면 중국산의 경우는 소득이 2만원 미만인 층에서 76.8%였으나 소득이 90만원 이상인 층에서는 이보다 33.6% 감소한 43.2%로 나타났다. 동시에 주목되는 현상으로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남한산의 비중도 크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3-12〉 장사나 부업으로 얻은 월평균 가구소득(5분위)별 원부자재·상품 출처

단위: 명, %

구분	북한	중국	남한	일본	기타	전체
2만원 미만	11	43	1	1	0	56
	19.6	76.8	1.8	1.8	0.0	100.0
2만원~10만원	23	64	2	0	0	89
	25.8	71.9	2.2	0.0	0.0	100.0
10만원 초과~30만원	22	60	1	1	0	84
	26.2	71.4	1.2	1.2	0.0	100.0
30만원 초과~90만원 미만	25	58	3	0	1	87
	28.7	66.7	3.4	0.0	1.1	100.0
90만원 이상	38	35	6	1	1	81
	46.9	43.2	7.4	1.2	1.2	100.0
전체	119	260	13	3	2	397
	30.0	65.5	3.3	0.8	0.5	100.0

(4) 애로사항 및 뇌물

북한에 거주할 당시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하면서 겪은 애로사항 1순위를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사업자금 마련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도로나 철도, 전기 사정도 다소 감소한 반면 단속이나 뇌물 비중이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사업자금 마련의 경우 2014년 26.0%에서 2015년 15.0%로 11.0% 감소하였고 도로와 철도사정은 2014년 8.1%에서 2015년 4.7%로, 전기사정은 2014년 13.0%에서 2015년 7.9%로 감소하였다. 반면 단속이나 뇌물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는 응답은 2014년 30.9%에서 2015년 52.8%로 21.9% 늘어났다. 그 다음으로 상품이나 원자재 확보가 2014년 5.7%에서 2015년 11.0%로 5.3% 늘어났다.

이는 도로나 철도사정과 같은 물류 문제가 자동차 이용의 증가로 일정 정도 해소되고 전기사정도 상대적으로 나아지고 있을 가능성과 함께 정부 당국의 각종 규제나 단속과 연관된 뇌물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의 부정부패 문제로 발전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 마련 문제가 3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각종 단속과 뇌물 문제가 25.0%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상품이나 원자재 확보, 도로나 철도사정, 전기사정이 10.0% 전후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판매경쟁은 4.5%로 기타를 제외하면 가장 작은 비중을 보였다.

〈표 3-13〉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애로사항(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업 수완 부족	사업 자금 마련	상품· 원자재 확보	판매 경쟁	도로· 철도 사정	전기 사정	단속· 뇌물	기타	전체
2012년	6	47	16	6	7	7	10	0	99
	6.1	47.5	16.2	6.1	7.1	7.1	10.1	0.0	100.0
2013년	10	62	13	4	18	10	2	0	119
	8.4	52.1	10.9	3.4	15.1	8.4	1.7	0.0	100.0
2014년	6	32	7	6	10	16	38	8	123
	4.9	26.0	5.7	4.9	8.1	13.0	30.9	6.5	100.0
2015년	3	19	14	5	6	10	67	3	127
	2.4	15.0	11.0	3.9	4.7	7.9	52.8	2.4	100.0
전체	25	160	50	21	41	43	117	11	468
	5.3	34.2	10.7	4.5	8.8	9.2	25.0	2.4	100.0

북한에 거주할 당시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하면서 겪은 애로사항 2순위를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사업자금 마련이 8.2% 증가한 21.3%를 차지하였고 각종 단속이나 뇌물제공 문제는 10.2% 감소한 19.7%를 차지하였다. 이는 1순위에서 사업자금 마련 문제 비중이 줄어들고 각종 단속과 뇌물제공 문제 비중이 늘어나면서 2순위에서 나타난 증가와 감소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애로사항 2순위에서는 각종 단속과 뇌물제공 문제가 4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도로나 철도사정, 상품이나 원자재 확보, 전기사정과 사업자금 마련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애로사항(2순위)

단위: 명, %

구분	사업 수완 부족	사업 자금 마련	상품· 원자재 확보	판매 경쟁	도로· 철도 사정	전기 사정	단속· 뇌물	기타	전체
2012년	0	2	8	2	7	7	47	3	76
	0.0	2.6	10.5	2.6	9.2	9.2	61.8	3.9	100.0
2013년	0	1	11	8	13	12	68	4	117
	0.0	0.9	9.4	6.8	11.1	10.3	58.1	3.4	100.0
2014년	4	14	17	8	17	12	32	3	107
	3.7	13.1	15.9	7.5	15.9	11.2	29.9	2.8	100.0
2015년	5	26	16	12	22	12	24	5	122
	4.1	21.3	13.1	9.8	18.0	9.8	19.7	4.1	100.0
전체	9	43	52	30	59	43	171	15	422
	2.1	10.2	12.3	7.1	14.0	10.2	40.5	3.6	100.0

2015년 조사에서 각종 단속과 뇌물제공이 1순위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상황에서 사적 경제활동을 한 주민들이 전체 수입에서 뇌물로 제공한 비중을 살펴보면 뇌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013년 이후 다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85.0% 정도가 다소 간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부정부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10% 이하라는 응답이 7.6% 증가한 25.0%로 2012년이나 2013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10% 초과~20% 이하라는 응답이 19.4%로 2013년이나 2014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그 다음을 차지하였고, 전체 수입의 20%를 초과

하는 금액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응답도 모두 합하면 36.8%를 차지하였다. 반면 뇌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8.8%를 차지하였다. 뇌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012년 13.9%에서 2015년 18.8%로 4.9% 늘어났다.

〈표 3-15〉 전체 수입 중 뇌물 비중

단위: 명, %

구분	10% 이하	2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50% 초과	전혀 없음	전체
2012년	30	20	23	12	6	14	17	122
	24.6	16.4	18.9	9.8	4.9	11.5	13.9	100.0
2013년	35	24	23	13	14	9	13	131
	26.7	18.3	17.6	9.9	10.7	6.9	9.9	100.0
2014년	26	30	33	14	7	15	24	149
	17.4	20.1	22.1	9.4	4.7	10.1	16.1	100.0
2015년	36	28	17	13	9	14	27	144
	25.0	19.4	11.8	9.0	6.3	9.7	18.8	100.0
전체	127	102	96	52	36	52	81	546
	23.3	18.7	17.6	9.5	6.6	9.5	14.8	100.0

(5) 가족 이외 타인 고용

북한에 거주하면서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할 때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고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2015년의 경우 34.9%가 있다고 응답하여 2014년보다 11.3%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고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8.7%로 1/3에도 미

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의 70.0% 이상이 가족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3-16〉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타인고용 여부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전체
2012년	25	75	100
	25.0	75.0	100.0
2013년	35	84	119
	29.4	70.6	100.0
2014년	29	94	123
	23.6	76.4	100.0
2015년	51	95	146
	34.9	65.1	100.0
전체	140	348	488
	28.7	71.3	100.0

북한에서 주된 소득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하면서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규모를 살펴보면 5명 미만이 60.0% 이상을 차지하여 사업규모가 영세함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5명 미만이 8.2% 증가한 7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5명 이상~10명 미만과 20명 이상이 각각 11.5%를 차지하였으며, 10명 이상~15명 미만은 2014년보다 11.0% 감소한 3.8%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5명 미만이 65.2%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는 가운데 5명 이상~10명 미만이 13.3%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20명 이상은 11.1%의 비중을 나타낸 가운데 조사가 시작된 2012년 9.5%에서 2015년 11.5%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5명 미만의 영세한 규모가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20명 이상의 비중도 크게 변하지 않는 상대적 정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표 3-17〉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타인 고용 규모

단위: 명, %

구분	5명 미만	10명 미만	15명 미만	20명 미만	20명 이상	전체
2012년	14	2	3	0	2	21
	66.7	9.5	14.3	0.0	9.5	100.0
2013년	20	8	3	0	4	35
	57.1	22.9	8.6	0.0	11.4	100.0
2014년	17	2	4	1	3	27
	63.0	7.4	14.8	3.7	11.1	100.0
2015년	37	6	2	1	6	52
	71.2	11.5	3.8	1.9	11.5	100.0
전체	88	18	12	2	15	135
	65.2	13.3	8.9	1.5	11.1	100.0

북한에서 거주할 당시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하면서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을 고용한 기간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1개월 미만과 1개월~3개월 미만이 각각 15.7%와 12.8% 감소한 반

면 3개월~6개월 미만은 32.6% 증가하였고 6개월~12개월 미만이나 1년 이상은 사실상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6개월~12개월 미만이 2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1년 이상이 22.0%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고 6개월 미만은 10.0% 중반대를 보이고 있다. 1년 이상 고용이 2013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적 경제활동이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바탕으로 한 확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표 3-18〉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타인 고용 기간

단위: 명, %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미만	6개월~12개월 미만	1년 이상	전체
2012년	4	3	3	8	0	18
	22.2	16.7	16.7	44.4	0.0	100.0
2013년	8	4	4	10	8	34
	23.5	11.8	11.8	29.4	23.5	100.0
2014년	5	7	0	6	7	25
	20.0	28.0	0.0	24.0	28.0	100.0
2015년	2	7	15	10	12	46
	4.3	15.2	32.6	21.7	26.0	100.0
전체	19	21	22	34	27	123
	15.4	17.1	17.9	27.6	22.0	100.0

2) 경제개혁 인식

(1) 우선적 상거래 대상

북한 주민들의 사유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식을 보면 1순위에서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기업소 명의로 등록된 개인소유 화물차나 발동선은 자유로운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9.0% 증가한 14.4%를 보인 점이 주목된다. 반면 소토지나 시장매대가 자유로운 매매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각각 6.0%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순위에서 소토지나 시장매대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지방산업 공장이나 기업소 명의로 등록된 개인소유 생산설비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인식은 증가하고 있다. 소토지의 경우 전체적으로 24.1%를 차지하여 두번째로 큰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2012년 28.2%에서 2015년 17.8%로 10.4% 감소하였고 시장매대도 전체적으로 27.1%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최고치인 2013년 36.1%에서 2015년 17.1%로 19.0%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소규모 지방산업공장은 2012년 1.7%에서 2015년 6.8%로 증가하였고 기업소 명의로 개인 소유 화물차나 발동선은 2012년 6.8%에서 2015년 14.4%로 7.6% 증가하였다.

북한에 거주할 당시 우선적으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해야 할 대상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2012년 6.8%에서 2015년 15.8%로 증가하였으나 소규모 생산설비에 대한 사유화 인식이 증가하

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표 3-19〉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식(1순위)

단위: 명, %

구분	소토지	살림집	시장매대	개인운영 국가상점	농장 분조 경작지	소규모 지방산업공장	기업소 명의 개인 소유 화물차·발동선	생각해 본 적이 없음	전체
2012년	33	14	38	5	9	2	8	8	117
	28.2	12.0	32.5	4.3	7.7	1.7	6.8	6.8	100.0
2013년	37	18	48	14	5	5	5	1	133
	27.8	13.5	36.1	10.5	3.8	3.8	3.8	0.8	100.0
2014년	35	19	36	14	10	8	8	17	147
	23.8	12.9	24.5	9.5	6.8	5.4	5.4	11.6	100.0
2015년	26	20	25	12	9	10	21	23	146
	17.8	13.7	17.1	8.2	6.2	6.8	14.4	15.8	100.0
전체	131	71	147	45	33	25	42	49	543
	24.1	13.1	27.1	8.3	6.1	4.6	7.7	9.0	100.0

우선적 상거래 대상 2순위를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살림집이 10.0% 감소한 11.8%를 차지하였고 소토지도 3.6% 감소한 9.2%를 보인 반면 시장매대나 개인운영 국가상점, 소규모 지방산업공장은 각각 4.1%, 5.6%, 4.0%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순위에서는 우선적 상거래 대상으로 소토지가 2012년 15.1%에서 2015년 9.2%로 5.9% 감소하고, 살림집도 전체적

으로 22.8%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2012년 26.4%에서 2015년 11.8%로 14.6% 감소하였다. 반면 소규모 지방산업공장은 2012년 9.4%에서 2015년 16.0%로 6.6% 증가하였다.

〈표 3-20〉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식(2순위)

단위: 명, %

구분	소토지	살림집	시장매대	개인운영국가상점	농장분조경작지	소규모지방산업공장	기업소명의개인소유화물차발등선	생각해본적없음	전체
2012년	16	28	13	14	8	10	13	4	106
	15.1	26.4	12.3	13.2	7.5	9.4	12.3	3.8	100.0
2013년	14	41	32	23	3	4	9	7	133
	10.5	30.8	24.1	17.3	2.3	3.0	6.8	5.3	100.0
2014년	17	29	18	16	12	16	19	6	133
	12.8	21.8	13.5	12.0	9.0	12.0	14.3	4.5	100.0
2015년	11	14	21	21	11	19	17	5	119
	9.2	11.8	17.6	17.6	9.2	16.0	14.3	4.2	100.0
전체	58	112	84	74	34	49	58	22	491
	11.8	22.8	17.1	15.1	6.9	10.0	11.8	4.5	100.0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상은 대체로 시장매대나 소토지 그리고 살림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점차 소규모 생산설비도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우선적 상거래 대상 인식(1순위)을 살펴보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생산설비를 자유롭게 거래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농장의 경작지에 대해 대학교 학력수준에서는 11.9%가 상거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한 반면 전문학교와 고등중학교 학력에서는 각각 3.2%와 5.5%가 상거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소규모 지방산업공장의 경우도 대학교 학력수준에서는 8.3%가 상거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 반면 전문학교와 고등중학교 학력수준에서는 각각 1.1%와 4.9%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소토지나 시장매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비중을 보였다. 시장매대의 경우는 대학교 학력수준에서 16.7%가 우선적 상거래 대상이라고 본 반면 전문학교와 고등중학교 학력수준에서는 각각 30.1%와 29.0%가 우선적 상거래 대상이라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교육수준별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식(1순위)

단위: 명, %

구분	소 토 지	살 림 집	시장 매대	개인 운영 국가 상점	농장 분조 경작지	소규모 지방산 업공장	기업소 명의 개인 소유 화물차 · 발동선	생각해 본 적 없음	전체
대학교	21	11	14	6	10	7	7	8	84
	25.0	13.1	16.7	7.1	11.9	8.3	8.3	9.5	100.0
전문 학교	22	13	28	10	3	1	8	8	93
	23.7	14.0	30.1	10.8	3.2	1.1	8.6	8.6	100.0
고등 중학교	80	47	101	29	19	17	27	28	348
	23.0	13.5	29.0	8.3	5.5	4.9	7.8	8.0	100.0
인민 학교	4	0	2	0	0	0	0	4	10
	40.0	0.0	20.0	0.0	0.0	0.0	0.0	40.0	100.0
무학	2	0	1	0	0	0	0	1	4
	50.0	0.0	25.0	0.0	0.0	0.0	0.0	25.0	100.0
전체	129	71	146	45	32	25	42	49	539
	23.9	13.2	27.1	8.3	5.9	4.6	7.8	9.1	100.0

(2) 경제난 책임소재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내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는지에 대해 먼저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최고영도자라는 응답은 3.7% 감소한 70.8%로 나타났고 당지도부와 군부라는 응답은 미세하지만 각각 3.2%와 2.1%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내각이나 공장.기업소 관리자, 근로자들이라는 응답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최고영도자 때문이라는 응답이 72.7%로 가장 높은 가운데 당지도부라는 응답이 13.7%로 그 다음을 차지한 반면 군부 때문이라는 응답은 1.7%로 내각이나 관리자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표 3-22〉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책임소재/1순위)

단위: 명, %

구분	근로자	관리자	내각	당 지도부	군부	최고영도자	전체
2014년	3	5	11	18	1	111	149
	2.0	3.4	7.4	12.1	0.7	74.5	100.0
2015년	3	3	10	22	4	102	144
	2.1	2.1	6.9	15.3	2.8	70.8	100.0
전체	6	8	21	40	5	213	293
	2.0	2.7	7.2	13.7	1.7	72.7	100.0

북한경제가 어려운 내부 이유 2순위를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당지도부라는 응답이 12.8% 증가한 5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내각은 7.8% 감소한 22.5%였고 군부나 관리자도 각각 3.4%와 2.5% 감소한 4.9%와 10.6%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2순위에서는 당지도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내각과 관리자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고, 군부는 1순위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3-23〉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책임소재/2순위)

단위: 명, %

구분	근로자	관리자	내각	당 지도부	군부	최고 영도자	기타	전체
2014년	1	19	44	58	12	9	2	145
	0.7	13.1	30.3	40.0	8.3	6.2	1.4	100.0
2015년	1	15	32	75	7	6	6	142
	0.7	10.6	22.5	52.8	4.9	4.2	4.2	100.0
전체	2	34	76	133	19	15	8	287
	0.7	11.8	26.5	46.3	6.6	5.2	2.8	100.0

이는 북한 주민들이 경제난의 책임을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는 내각이나 중간관리자에게 묻기보다는 최고영도자와 당 지도부에 묻고 있으며, 특히 북한정권이 '선군'을 강조하지만 군부가 아니라 최고영도자와 당지도부에 경제난의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당원 여부에 따라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먼저 1순위에서 당원(후보당원 제외)의 82.6%가 최고영도자 탓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비당원의 경우는 이보다 12.2% 낮은 70.4%가 최고영도자 탓이라고 지적하였다. 반면 당지도부 탓이라는 인식은 당원의 경우 8.7%를 보였는데 비해 비당원의 경우는 이보다 6.1% 높은 14.8%를 나타냈다. 군부 탓이라는 인식은 당원이 비당원보다 3.1% 높게 나타났다.

〈표 3-24〉 당원 여부별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책임소재/1순위)

단위: 명, %

구분	근로자	관리자	내각	당 지도부	군부	최고 영도자	전체
당원	0	1	1	4	2	38	46
	0.0	2.2	2.2	8.7	4.3	82.6	100.0
후보당원	0	0	0	0	0	2	2
	0.0	0.0	0.0	0.0	0.0	100.0	100.0
비당원	6	7	20	36	3	171	243
	2.5	2.9	8.2	14.8	1.2	70.4	100.0
전체	6	8	21	40	5	211	291
	2.1	2.7	7.2	13.7	1.7	72.5	100.0

한편 2순위에서는 당지도부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이 당원의 경우 56.8%로 비당원의 44.8%보다 12.0% 높게 나타난 반면 내각 때문이라는 인식은 비당원이 28.0%로 당원의 15.9%보다 12.1% 높게 나타났다. 군부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은 당원과 비당원이 각각 6.8%와 6.7%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미미한 차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관리자 탓이라는 인식은 비당원에서 높고, 근로자 탓이라는 인식은 당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당원 여부별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책임소재/2순위)

단위: 명, %

구분	근로자	관리자	내각	당 지도부	군부	최고 영도자	기타	전체
당원	1	4	7	25	3	4	0	44
	2.3	9.1	15.9	56.8	6.8	9.1	0.0	100.0
후보당원	0	1	0	1	0	0	0	2
	0.0	50.0	0.0	50.0	0.0	0.0	0.0	100.0
비당원	1	29	67	107	16	11	8	239
	0.4	12.1	28.0	44.8	6.7	4.6	3.3	100.0
전체	2	34	74	133	19	15	8	285
	0.7	11.9	26.0	46.7	6.7	5.3	2.8	100.0

따라서 당원의 경우는 대체로 최고영도자와 당 지도부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반면 비당원의 경우는 당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당 지도부와 내각 탓이라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잘 살기 위한 정책 인식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이 잘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였는지(1순위)에 대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10.9% 증가한 3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사상성 강화라는 응답은 4.6% 감소한 1.4%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부분적인 개혁이 아니라 전면적인 전환의 함의를 지닌 자본주의

도입이 30.1%로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내부의 부분적인 개혁의 함의를 지닌 경제관리방법 개선이 25.3%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이 잘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자본주의 도입이라는 응답이 각각 32.2%와 31.2%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내부의 부분적인 개혁인 경제관리방법 개선으로 26.1%를 차지하였으며 북한 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발전이나 사상성 강화는 각각 5.4%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당국이 강조하는 과학기술발전이나 사상성 강화보다 경제개방과 개혁을 포함해 경제체제 자체가 변화되어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26〉 북한이 잘 살기 위한 정책(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상성 강화	과학기술 발전	경제관리 방법 개선	외국과 경제협력 확대	자본주의 도입	기타	전체
2014년	9	8	40	40	48	4	149
	6.0	5.4	26.8	26.8	32.2	2.7	100.0
2015년	2	8	37	55	44	0	146
	1.4	5.5	25.3	37.7	30.1	0.0	100.0
전체	11	16	77	95	92	4	295
	3.7	5.4	26.1	32.2	31.2	1.4	100.0

북한이 잘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였는지에 대한 2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2014년에 비해 4.8% 감소하였으나, 4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제관리방법 개선과 자본주의 도입이 각각 전년과 비슷한 20.1%와 18.8%를 차지하였다. 북한 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발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5.6% 증가한 15.3%를 차지하였고 사상성 강화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 미만에 그쳤다. 2순위이기는 하지만, 2015년 조사에서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감소한 반면 과학기술발전이 증가한 것이 북한 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자력자강과 국산화,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결과일 가능성이 주목된다.

〈표 3-27〉 북한이 잘 살기 위한 정책(2순위)

단위: 명, %

구분	사상성 강화	과학기술 발전	경제관리 방법 개선	외국과 경제협력 확대	자본주의 도입	기타	전체
2014년	0	14	30	70	27	3	144
	0.0	9.7	20.8	48.6	18.8	2.1	100.0
2015년	1	22	29	63	27	2	144
	0.7	15.3	20.1	43.8	18.8	1.4	100.0
전체	1	36	59	133	54	5	288
	0.3	12.5	20.5	46.2	18.8	1.7	100.0

북한이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에 대한 교육수준별 인식을 살펴보면 대학교 학력수준에서는 자본주의 도입이 3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을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경제관리방법 개선이 각각 30.6%와 28.6%를 차지하였다. 사상성 강화는 0.0%였고 과학

기술발전은 8.2%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문학교 학력수준에서는 내부의 부분 개혁 함의를 지닌 경제관리방법 개선이 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제체제 전환의 함의를 지닌 자본주의 도입이 26.8%를 차지하였으며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는 21.4%를 차지하였다. 대학교 학력수준과 달리 사상성 강화가 5.4%를 차지하였고 과학기술발전은 가장 작은 1.8%로 나타났다.

고등중학교 학력수준에서는 대외개방 확대를 의미하는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3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자본주의 도입과 경제관리방법 개선이 각각 32.0%와 22.1%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사상성 강화와 과학기술발전은 각각 3.9%와 6.1%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체제전환까지 포함하는 경제체제의 변화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경제체제의 변화보다는 개방을 통한 대외협력 확대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28〉 교육수준별 북한이 잘 살기 위한 정책 인식(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상성 강화	과학기술 발전	경제관리방법 개선	외국과 경제협력 확대	자본주의 도입	기타	전체
대학교	0	4	14	15	16	0	49
	0.0	8.2	28.6	30.6	32.7	0.0	100.0
전문학교	3	1	22	12	15	3	56
	5.4	1.8	39.3	21.4	26.8	5.4	100.0
고등중학교	7	11	40	64	58	1	181
	3.9	6.1	22.1	35.4	32.0	0.6	100.0
인민학교	0	0	1	3	2	0	6
	0.0	0.0	16.7	50.0	33.3	0.0	100.0
무학	0	0	0	1	0	0	1
	0.0	0.0	0.0	100.0	0.0	0.0	100.0
전체	10	16	77	95	91	4	293
	3.4	5.5	26.3	32.4	31.1	1.4	100.0

한편 대학교 학력수준에서 북한이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인식이 2014년 조사에 비해 2015년 조사에서 어떻게 달라졌는가는 살펴 보면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라는 인식은 2014년 30.0%에서 2015년 31.0%로 1.0% 증가하여 비슷한 비중을 유지한 반면 내부 개혁의 함의를 지닌 경제관리방법 개선이라는 인식은 2014년 50.0%에서 2015년 13.8%로 36.2% 감소하고 자본주의 도입이라는 인식은 2014년 10.0%에서 2015년 48.3%로 38.3% 증가하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경제

관리방법 개선에서 자본주의 도입으로 변한 가운데 대외개방을 의미하는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는 두 번째 큰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조사대상자의 수가 적은 데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북한 내부의 변화를 넘어 경제체제의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인지에 대해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표 3-29〉 대학교 학력자들의 북한이 잘 살기 위한 정책 인식(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상성 강화	과학기술 발전	경제관리 방법 개선	외국과 경제협력 확대	자본주의 도입	기타	전체
2014년	0	2	10	6	2	0	20
	0.0	10.0	50.0	30.0	10.0	0.0	100.0
2015년	0	2	4	9	14	0	29
	0.0	6.9	13.8	31.0	48.3	0.0	100.0
전체	0	4	14	15	16	0	49
	0.0	8.2	28.6	30.6	32.7	0.0	100.0

3. 사회적 분화

1) 소득 분화

(1) 국가지급 월평균 가구 생활비

먼저 북한에 거주할 당시 국가로부터 받은 가구 생활비의 총합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생활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4% 감소한 50.7%로 나타났고 1천원에서 3천원 미만 정도 받았다는 응답은 6.8% 증가하였다. 월평균 가구 생활비로 5만원 이상 받았다는 응답은 4.2%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1천원에서 3천원 미만을 받았다는 응답이 25.8%, 3천원에서 5천원 미만을 받았다는 응답이 9.9%를 각각 차지하였다. 따라서 절반에 가까운 다수는 여전히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더라도 그 다수는 1천원에서 5천원 미만인 가운데, 5% 정도는 5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받음으로써 직장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생활비에서 상당한 격차와 분화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30〉 국가지급 월평균 가구 생활비 총합

단위: 명, %

구분	0원	1천원 미만	3천원 미만	5천원 미만	1만원 미만	5만원 미만	10만원 미만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전체
2012년	41	3	23	16	8	9	5	2	3	110
	37.3	2.7	20.9	14.5	7.3	8.2	4.5	1.8	2.7	100.0
2013년	60	2	38	14	6	6	1	2	4	133
	45.1	1.5	28.6	10.5	4.5	4.5	0.8	1.5	3.0	100.0
2014년	81	8	34	10	7	3	3	0	1	147
	55.1	5.4	23.1	6.8	4.8	2.0	2.0	0.0	0.7	100.0
2015년	73	3	43	13	4	2	3	0	3	144
	50.7	2.1	29.9	9.0	2.8	1.4	2.1	0.0	2.1	100.0
전체	255	16	138	53	25	20	12	4	11	534
	47.8	3.0	25.8	9.9	4.7	3.7	2.2	0.7	2.1	100.0

북한에 거주할 당시의 공식 직업에 따른 국가지급 가구생활비 총합을 보면 노동자 가구의 경우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58.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사무원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노동자 가구의 절반 정도 수준인 29.5%로 나타났다. 이는 공장이나 기업소의 생산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직보다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국가의 기능수행이라는 측면이나 정책적 우선 순위에 따른 자원배분에서 일반 공장, 기업소의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3-31〉 공식 직업별 국가지급 가구생활비 총합

단위: 명, %

구분	0원	5천원 미만	1만원 미만	1만원 이상	전체
노동자	54	30	4	5	93
	58.1	32.3	4.3	5.4	100.0
농민	13	7	0	1	21
	61.9	33.3	0.0	4.8	100.0
사무원	13	26	3	2	44
	29.5	59.1	6.8	4.5	100.0
피부양자	2	0	0	1	3
	66.7	0.0	0.0	33.3	100.0
학생	8	9	0	2	19
	42.1	47.4	0.0	10.5	100.0
군인	4	5	2	2	13
	30.8	38.5	15.4	15.4	100.0
가정부인	35	22	1	2	60
	58.3	36.7	1.7	3.3	100.0
무직 및 기타	20	12	1	0	33
	60.6	36.4	3.0	0.0	100.0
전체	149	111	11	15	286
	52.1	38.8	3.8	5.2	100.0

(2)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

북한에 거주할 당시 장사나 부업을 통해 벌어들인 가구소득의 총합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

이 9.6% 감소한 2.8%를 차지하였고 1만원 미만이나 1만원에서 10만원 미만, 1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이 각각 2.7%, 10.3%, 14.4% 감소한 2.8%, 5.6%, 13.2%를 차지하였다. 반면 30만원에서 50만원 미만이나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은 각각 2.2%, 16.1%, 18.8% 증가한 12.5%, 30.6%, 32.6%를 차지하였다. 그 결과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이 3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2014년 38.6%에서 2015년 75.7%로 36.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조사 대상자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상대적으로 고소득 층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다소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지만 고소득 층의 증가가 북한 내 소득분화와 불평등의 심화를 시사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이 2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100만원 이상과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이 각각 18.6%와 16.7%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30만원 이상이 절반에 가까운 46.9%를 차지하였다.

〈표 3-32〉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명, %

구분	0원	1만원 미만	10만원 미만	3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전체
2012년	19	15	16	32	9	9	5	105
	18.1	14.3	15.2	30.5	8.6	8.6	4.8	100.0
2013년	16	5	19	33	19	14	26	132
	12.1	3.8	14.4	25.0	14.4	10.6	19.7	100.0
2014년	18	8	23	40	15	21	20	145
	12.4	5.5	15.9	27.6	10.3	14.5	13.8	100.0
2015년	4	4	8	19	18	44	47	144
	2.8	2.8	5.6	13.2	12.5	30.6	32.6	100.0
전체	57	32	66	124	61	88	98	526
	10.8	6.1	12.5	23.6	11.6	16.7	18.6	100.0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가구소득 분포를 보면 북한 내에서 소득불평등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평화연구원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한 북한사회변동 조사를 종합해서 장사나 부업과 같은 사적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정도를 살펴보면, 소득 5분위에서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만원 미만인데 반해 상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9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분위 소득으로 살펴보면 소득의 하위 10%는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반면 상위 10%는 월평균 1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 장사나 부업을 통한 가구소득(5분위)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2만원 미만	95	19.3
2만원~10만원	99	20.1
10만원 초과~30만원	99	20.1
30만원 초과~90만원 미만	102	20.7
90만원 이상	98	19.9
합계	493	100.0

〈표 3-34〉 장사나 부업을 통한 가구소득(10분위)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0원	56	11.4
150만원 미만	379	76.9
150만원 이상	58	11.8
합계	493	100.0

이러한 소득불평등 정도는 소득의 5분위 배율로 살펴보면 45배 정도로 나타난다. 이는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의 45배 정도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사나 부업을 통한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을 살펴보면 중위소득인 월평균 가구소득 20만원의 50%인 1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비율이 29.4% 정도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된

조사이기에 다소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고 특히 북한 전체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조사결과는 북한 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소득불평 등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⁴⁸

장사나 부업과 같은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주된 일거리를 살펴보면 소득이 올라갈수록 소매장사의 비중은 감소하고 되거리장사나 외화별이와 같이 규모가 큰 사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소매장사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2만원 미만인 경우가 32.8%였으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90만원 이상인 경우는 21.3%로 11.5% 감소하였다. 반면 되거리장사와 외화별이의 경우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2만원 미만인 층에서는 모두 6.3%였으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90만원 이상인 층에서는 각각 19.1%와 16.9%로 12.8%와 10.6% 증가하였다. 한편 월평균 가구소득이 90만원 이상인 층에서 기타 업종이 3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 기타 업종의 절반 이상은 밀수 등 중국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차지하고 그 외에 농업이나 이동전화 장사, 택시, 과외 등도 기타 업종에 포함된다.

48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와 조사대상 기간 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장사나 부업을 통해 얻은 월평균가구소득을 물었고, 남한의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득조사 자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재산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에 두 가지 조사결과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북한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득불평등의 심화 정도를 가능하기 위한 개략적인 비교수치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남한의 소득분배지표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남한의 소득 5분위 비율은 5.41배였고, 상대적 소득 빈곤율은 14.4%였다.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2016 1/4분기 가계 동향," 2016년 5월 27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4/1/index.board?bmode=read&aSeq=354143) (검색일: 2016년 6월 10일).

〈표 3-35〉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5분위)별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단위: 명, %

구분	소매장사	개인 편의 봉사	개인 (임) 가공	식당 상점 임대 운영	되거리 장사	외화 별이	돈 장사	삿별이	해의 파견	기타	전체
2만원 미만	21	4	2	2	4	4	2	7	3	15	64
	32.8	6.3	3.1	3.1	6.3	6.3	3.1	10.9	4.7	23.4	100.0
2만원~10만원	40	4	3	2	8	6	4	6	1	15	89
	44.9	4.5	3.4	2.2	9.0	6.7	4.5	6.7	1.1	16.9	100.0
10만원 초과~30만원	37	6	5	2	10	6	2	9	0	16	93
	39.8	6.5	5.4	2.2	10.8	6.5	2.2	9.7	0.0	17.2	100.0
30만원 초과~90만원 미만	25	1	2	5	9	17	10	4	1	18	92
	27.2	1.1	2.2	5.4	9.8	18.5	10.9	4.3	1.1	19.6	100.0
90만원 이상	19	0	0	1	17	15	6	2	0	29	89
	21.3	0.0	0.0	1.1	19.1	16.9	6.7	2.2	0.0	32.6	100.0
전체	142	15	12	12	48	48	24	28	5	93	427
	33.3	3.5	2.8	2.8	11.2	11.2	5.6	6.6	1.2	21.8	100.0

(3) 잘 사는 직업에 대한 인식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직업에 대한 인식 1순위를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중앙당 간부라는 응답이 7.3% 증가한 8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법기관 간부라는 인식은 6.8% 감소한 11.6%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잘 사는 직업이 중앙당 간부라는 응답이 78.9%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법기관 간부라는 응답이 14.3%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중앙당

간부를 가장 잘 사는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추세는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36〉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직업(1순위)

단위: 명, %

구분	중앙당 간부	지방당 간부	법기관 간부	인민위원회 간부	외화벌이	군관	시장 상인	전체
2012년	91	3	16	1	6	0	1	118
	77.1	2.5	13.6	0.8	5.1	0.0	0.8	100.0
2013년	112	0	18	0	3	0	0	133
	84.2	0.0	13.5	0.0	2.3	0.0	0.0	100.0
2014년	108	5	27	0	6	1	0	147
	73.5	3.4	18.4	0.0	4.1	0.7	0.0	100.0
2015년	118	1	17	0	7	0	3	146
	80.8	0.7	11.6	0.0	4.8	0.0	2.1	100.0
전체	429	9	78	1	22	1	4	544
	78.9	1.7	14.3	0.2	4.0	0.2	0.7	100.0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직업에 대한 인식 2순위를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법기관 간부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지방당 간부가 17.4%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고 외화벌이라는 응답은 2014년보다 4.6% 감소한 14.6%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법기관 간부라는 인식이 51.7%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외화벌이와 지방당 간부가 각각 16.1%와 15.5%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표 3-37〉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직업(2순위)

단위: 명, %

구분	중앙당 간부	지방당 간부	법기관 간부	인민위원회 간부	외화벌이	군관	시장 상인	기업소 공장 간부	기업소 공장 노동자	농장 관리 일꾼	전체
2012년	7	15	64	1	17	1	2	0	1	0	108
	6.5	13.9	59.3	0.9	15.7	0.9	1.9	0.0	0.9	0.0	100.0
2013년	12	18	67	3	19	2	5	2	1	1	130
	9.2	13.8	51.5	2.3	14.6	1.5	3.8	1.5	0.8	0.8	100.0
2014년	13	24	70	2	28	3	5	1	0	0	146
	8.9	16.4	47.9	1.4	19.2	2.1	3.4	0.7	0.0	0.0	100.0
2015년	10	25	72	5	21	2	8	1	0	0	144
	6.9	17.4	50.0	3.5	14.6	1.4	5.6	0.7	0.0	0.0	100.0
전체	42	82	273	11	85	8	20	4	2	1	528
	8.0	15.5	51.7	2.1	16.1	1.5	3.8	0.8	0.4	0.2	100.0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중앙당 간부를 가장 잘 사는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을 법기관 간부들이 잘 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중간 정도 잘 사는 직업에 대한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지방당 간부라는 응답이 11.1% 증가한 3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법기관 간부로 25.0%를 차지하였으며 외화벌이라는 응답은 3.5% 감소한 19.4%로 세 번째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당 간부라는 인식이 25.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법기관 간부와 외화벌이가 각각 23.2%와 23.4%로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고 있다.

〈표 3-38〉 북한에서 중간 정도 잘 사는 직업(1순위)

단위: 명, %

구분	중앙당 간부	지방당 간부	법기관 간부	인민 위원회 간부	전 문 직	외화 벌이	군 관	시장 상인	기업소 ·공장 간부	농장 관리 일꾼	농 장 원	전체
2012년	3	23	23	16	3	35	4	7	7	1	0	122
	2.5	18.9	18.9	13.1	2.5	28.7	3.3	5.7	5.7	0.8	0.0	100.0
2013년	1	36	31	12	4	31	6	4	5	2	1	133
	0.8	27.1	23.3	9.0	3.0	23.3	4.5	3.0	3.8	1.5	0.8	100.0
2014년	11	32	36	15	4	33	4	4	4	1	0	144
	7.6	22.2	25.0	10.4	2.8	22.9	2.8	2.8	2.8	0.7	0.0	100.0
2015년	5	48	36	6	5	28	4	10	1	1	0	144
	3.5	33.3	25.0	4.2	3.5	19.4	2.8	6.9	0.7	0.7	0.0	100.0
전체	20	139	126	49	16	127	18	25	17	5	1	543
	3.7	25.6	23.2	9.0	2.9	23.4	3.3	4.6	3.1	0.9	0.2	100.0

북한에서 중간 정도 잘 사는 직업 인식 2순위를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외화벌이라는 응답이 10.3% 증가한 26.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시장상인이라는 응답이 18.1%, 인민위원회 간부라는 응답이 17.4%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외화벌이와 시장상인이라는 응답이 각각 20.4%와 19.3%로 비슷한 수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인민위원회 간부라는 응답이 16.0%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표 3-39〉 북한에서 중간 정도 잘 사는 직업(2순위)

단위: 명, %

구분	중앙당 간부	지방당 간부	법기관 간부	인민 위원회 간부	전 문 직	외화 벌이	군 관	시장 상인	기업소 ·공장 간부	기업소 ·공장 노동자	농장 관리 일꾼	전체
2012년	3	17	9	18	9	16	4	21	8	0	3	108
	2.8	15.7	8.3	16.7	8.3	14.8	3.7	19.4	7.4	0.0	2.8	100.0
2013년	1	9	9	21	8	30	6	25	14	0	6	129
	0.8	7.0	7.0	16.3	6.2	23.3	4.7	19.4	10.9	0.0	4.7	100.0
2014년	1	28	4	20	7	23	7	29	15	0	9	143
	0.7	19.6	2.8	14.0	4.9	16.1	4.9	20.3	10.5	0.0	6.3	100.0
2015년	0	16	5	25	5	38	5	26	12	1	11	144
	0.0	11.1	3.5	17.4	3.5	26.4	3.5	18.1	8.3	0.7	7.6	100.0
전체	5	70	27	84	29	107	22	101	49	1	29	524
	1.0	13.4	5.2	16.0	5.5	20.4	4.2	19.3	9.4	0.2	5.5	100.0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중간 정도 잘 사는 직업으로 지방당 간부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외화벌이와 시장상인 그리고 인민위원회 간부를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 가장 못 사는 직업에 대한 인식 1순위를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농장원이라는 응답이 4.2% 증가한 6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공장이나 기업소의 노동자라는 응답이 3.2% 감소한 13.7%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군관이 가장 못 산다는 응답도 6.2% 증가한 8.9%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장원이 가장 못 산다는 인식이 57.1%로 가장 많고 공장이나 기업소의 노동자라는 응답이

21.6%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농장원이 가장 못 산다는 응답은 2012년 51.2%에서 2015년 62.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노동자들이 가장 못 산다는 응답은 2012년 32.5%에서 2015년 13.7%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공장이나 기업소의 점진적인 생산정상화를 배경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들이 장사나 부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경향이 농민들보다 큰 데서 비롯된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표 3-40〉 북한에서 가장 못 사는 직업(1순위)

단위: 명, %

구분	지방당 간부	법기관 간부	인민위원회 간부	전문직	외화 벌이	군 관	시장 상인	기업소·공장 간부	기업소·공장 노동자	농장 관리 일꾼	농장 원	전체
2012년	0	0	1	5	1	7	1	0	40	5	63	123
	0.0	0.0	0.8	4.1	0.8	5.7	0.8	0.0	32.5	4.0	51.2	100.0
2013년	1	0	4	5	1	1	1	3	34	9	74	133
	0.8	0.0	3.0	3.8	0.8	0.8	0.8	2.3	25.6	6.8	55.6	100.0
2014년	3	1	6	10	3	4	1	2	25	7	86	148
	2.0	0.7	4.1	6.8	2.0	2.7	0.7	1.4	16.9	4.7	58.1	100.0
2015년	3	2	3	5	0	13	1	0	20	8	91	146
	2.1	1.4	2.1	3.4	0.0	8.9	0.7	0.0	13.7	5.5	62.3	100.0
전체	7	3	14	25	5	25	4	5	119	29	314	550
	1.3	0.5	2.5	4.5	0.9	4.5	0.7	0.9	21.6	5.3	57.1	100.0

북한에서 가장 못 사는 직업에 대한 인식 2순위를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공장이나 기업소의 노동자들이 가장 못 산다는 응답이 8.6% 증가한 4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농장원이 30.8%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장이나 기업소의 노동자들이 가장 못 산다는 응답이 38.4%로 가장 많았고 농장원이 35.0%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한편 군관이 가장 못 산다는 응답도 9.9%를 차지하였는데 사적 경제활동 대신 국가의 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군관들은 선군정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표 3-41〉 북한에서 가장 못 사는 직업(2순위)

단위: 명, %

구분	지방당 간부	인민위원회 간부	전문직	외화 벌이	군 관	시장 상인	기업소·공장 간부	기업소·공장 노동자	농장 관리 일꾼	농장 원	전체
2012년	0	1	2	0	8	2	1	39	7	53	113
	0.0	0.9	1.8	0.0	7.1	1.8	0.9	34.5	6.2	46.9	100.0
2013년	0	3	4	0	15	4	1	44	12	46	129
	0.0	2.3	3.1	0.0	11.6	3.1	0.8	34.1	9.3	35.7	100.0
2014년	1	1	7	2	16	3	4	53	13	41	141
	0.7	0.7	5.0	1.4	11.3	2.1	2.8	37.6	9.2	29.1	100.0
2015년	0	0	3	0	13	1	5	66	11	44	143
	0.0	0.0	2.1	0.0	9.1	0.7	3.5	46.2	7.7	30.8	100.0
전체	1	5	16	2	52	10	11	202	43	184	526
	0.2	1.0	3.0	0.4	9.9	1.9	2.1	38.4	8.2	35.0	100.0

이제까지 살펴본 잘 사는 직업과 중간 정도 사는 직업, 가장 못 사는 직업에 대한 인식을 종합하면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직업이 중앙당 간부이고 그 다음이 법기관 간부이며, 지방당 간부, 외화벌이 그리고 시장 상인이 비슷한 수준에서 중간 정도로 잘 살고, 농장원들이 가장 못 사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농장원들보다는 잘 사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권력에 따른 위계적 질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만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 외화벌이나 시장상인들이 중간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는 사적 경제활동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뇌물 제공과 같은 부정부패가 늘어나면서 법기관 간부와 같이 이에 기생하는 집단도 부를 축적해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4) 경제적 계층 분화 이유에 대한 인식

북한에서 부자는 왜 부자이고 가난한 자는 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먼저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본인직위라는 응답이 13.5% 증가한 43.2%로 가장 많고 정치사상성, 권력층 안면관계나 출신성분이라는 응답이 각각 17.1%, 15.8%와 15.1%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권력층 안면관계는 2014년보다 6.5%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본인직위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정치사상성이라는 응답은 2013년 이후 감소하는 가운데 권력층 안면관계나 출신성분도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인직위나 정치사상성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차지한 것은 정치적 위계에 따른 계층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권력층 안면관계는 사적 경제활동 활성화 등에 따른 연줄과 부패구조의 일단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표 3-42〉 경제적 계층 분화 인식(1순위)

단위: 명, %

구분	정치 사상성	본인 직위	교육 수준	가족 관계	권력층 안면 관계	사는 지역	개인 성격 노력	출신 성분	운수 소관	전체
2012년	29	56	1	2	20	0	7	8	0	123
	23.6	45.5	0.8	1.6	16.3	0.0	5.7	6.5	0.0	100.0
2013년	42	43	0	1	24	0	4	19	0	133
	31.6	32.3	0.0	0.8	18.0	0.0	3.0	14.3	0.0	100.0
2014년	41	44	1	1	33	0	6	22	0	148
	27.7	29.7	0.7	0.7	22.3	0.0	4.1	14.9	0.0	100.0
2015년	25	63	1	0	23	1	7	22	4	146
	17.1	43.2	0.7	0.0	15.8	0.7	4.8	15.1	2.7	100.0
전체	137	206	3	4	100	1	24	71	4	550
	24.9	37.5	0.5	0.7	18.2	0.2	4.4	12.9	0.7	100.0

경제적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인식 2순위를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권력층 안면관계가 5.5% 증가한 37.5%로 가장 많고 1순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본인직위가 21.5%로 그 다음을 차지한 가운데 출신성분도 7.2% 감소하였으나 12.5%로 세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도 권력층 안면관계가 3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22.7%인 본인직위이며 출신성분도 16.1%로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3-43〉 경제적 계층 분화 이유(2순위)

단위: 명, %

구분	정치 사상성	본인 직위	교육 수준	가족 관계	권력층 안면 관계	사는 지역	개인 성격 노력	출신 성분	운수 소관	전체
2012년	3	28	2	3	47	4	13	22	1	123
	2.4	22.8	1.6	2.4	38.2	3.3	10.6	17.9	0.8	100.0
2013년	4	33	3	5	52	8	8	19	1	133
	3.0	24.8	2.3	3.8	39.1	6.0	6.0	14.3	0.8	100.0
2014년	11	32	7	3	47	9	6	29	3	147
	7.5	21.8	4.8	2.0	32.0	6.1	4.1	19.7	2.0	100.0
2015년	8	31	3	3	54	13	13	18	1	144
	5.6	21.5	2.1	2.1	37.5	9.0	9.0	12.5	0.7	100.0
전체	26	124	15	14	200	34	40	88	6	547
	4.8	22.7	2.7	2.6	36.6	6.2	7.3	16.1	1.1	100.0

경제적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인식 3순위를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개인의 성격이나 노력이라는 응답이 2.9% 증가한 22.8%로 가장 많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출신성분이라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사는 지역이라는 응답도 5.0% 증가한 16.6%를 차지하였다. 대신 권력층 안면관계라는 응답은 6.1% 감소한 9.7%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출신성분이라는 응답이 2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17.9%로 그 다음을 차지한 개인의 성격이나 노력이 2012년 13.9%에서 2015년 22.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표 3-44〉 경제적 계층 분화 이유(3순위)

단위: 명, %

구분	정치 사상성	본인 직위	교육 수준	가족 관계	권력층 안면 관계	사는 지역	개인 성격 노력	출신 성분	운수 소관	전체
2012년	6	12	5	3	21	16	17	30	12	122
	4.9	9.8	4.1	2.5	17.2	13.1	13.9	24.6	9.8	100.0
2013년	6	20	6	8	19	14	19	28	13	133
	4.5	15.0	4.5	6.0	14.3	10.5	14.3	21.1	9.8	100.0
2014년	6	21	8	6	23	17	29	27	9	146
	4.1	14.4	5.5	4.1	15.8	11.6	19.9	18.5	6.2	100.0
2015년	1	16	7	3	14	24	33	32	15	145
	0.7	11.0	4.8	2.1	9.7	16.6	22.8	22.1	10.3	100.0
전체	19	69	26	20	77	71	98	117	49	546
	3.5	12.6	4.8	3.7	14.1	13.0	17.9	21.4	9.0	100.0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1순위와 2순위에서 본인의 직위와 권력층 안면관계를 가장 큰 이유로 들고 3순위에 오면 개인의 성격이나 노력을 주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잘살고 못사는 것이 자신이 보유한 권력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층과의 연결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서 정치적인 위계질서에 따른 계층구조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부패현상과도 관련될 수 있는 권력층과의 연결망은 사적 경

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복합적인 특징일 수도 있다. 기존의 정치적 위계질서에 따른 권력의 중요성을 보여주지만, 촉진요인이든 장애요인이든 사적 경제활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정치적 위계질서가 변형되는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3순위이지만 개인의 성격이나 노력에 대한 지적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은 향후 주시해야 할 변화로 보인다. 이는 정치적 계층질서가 사적 활동에 기반한 사회경제적 계층질서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5) 소득격차에 따른 인식 분화

① 경제적 계층 분화 이유

먼저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정치사상성에 대한 지적이 높은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직위나 노력에 대한 지적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로 정치사상성을 든 응답의 비율을 보면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0원인 경우 33.9%였지만 150만원 이상인 경우는 이보다 9.8% 낮은 24.1%로 나타났다. 반면 본인직위라는 응답은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0원인 경우 25.0%였지만 150만원 이상인 경우는 이보다 9.5% 높은 34.5%로 나타났으며 개인의 성격과 노력 때문이라는 응답도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0원인 경우 1.8%에 불과하였으나 150만원 이상인 경우는 이보다 10.3% 높은 12.1%를 기록하였다.

한편 권력층과의 안면관계가 경제적 계층분화의 이유라고 생각하

는 응답을 보면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0원인 경우 21.4%였는데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는 이보다 9.3% 낮은 12.1%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직위가 경제적 계층분화의 이유라는 인식과 함께 북한에서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부의 축적이 정당한 것으로 인식되기보다는 권력을 이용한 축재로 인식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각종 단속과 뇌물제공 문제나 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잘사는 직업으로 인식되는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실제로도 권력형 축재가 상당히 폭넓게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주목된다.

〈표 3-45〉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 (10분위)별 경제적 계층분화 인식(1순위)

단위: 명, %

구분	정치 사상성	본인 직위	교육 수준	가족 관계	권력층 안면 관계	사는 지역	개인 성격 노력	출신 성분	운수 소관	전체
0원	19	14	0	1	12	0	1	9	0	56
	33.9	25.0	0.0	1.8	21.4	0.0	1.8	16.1	0.0	100.0
150만원 미만	89	144	1	2	69	0	15	52	3	375
	23.7	38.4	0.3	0.5	18.4	0.0	4.0	13.9	0.8	100.0
150만원 이상	14	20	1	0	7	1	7	7	1	58
	24.1	34.5	1.7	0.0	12.1	1.7	12.1	12.1	1.7	100.0
전체	122	178	2	3	88	1	23	68	4	489
	24.9	36.4	0.4	0.6	18.0	0.2	4.7	13.9	0.8	100.0

② 경제 개혁과 개방

사적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 격차가 북한이 잘살기 위한 정책에 대한 인식에서는 어떤 차이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소득이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자본주의 도입이나 경제관리방법 개선과 같은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사적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낮을수록 사상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과 대외경제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金正은 정권이 강조하고 있는 사상성 강화를 살펴보면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2만원 미만인 경우 14.3%였으나 90만원 이상인 경우는 2.9%로 11.4% 낮게 나타났다. 외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2만원 미만의 경우 42.9%였지만 90만원 이상에서는 이보다 17.2% 낮은 25.7%로 나타났다. 반면 내부 개혁과 변화를 강조하는 경제관리방법 개선의 경우 2만원 미만에서는 14.3%였지만 90만원 이상에서는 31.4%로 17.1% 높았고 자본주의 도입의 경우에도 2만원 미만에서는 22.9%였지만 90만원 이상에서는 35.7%로 12.8% 높게 나타났다.

〈표 3-46〉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5분위)
별 북한이 잘살기 위한 정책 인식(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상성 강화	과학기술 발전	경제관리 방법 개선	외국과 경제협력 확대	자본주의 도입	기타	전체
2만원 미만	5	1	5	15	8	1	35
	14.3	2.9	14.3	42.9	22.9	2.9	100.0
2만원~10만원	0	2	10	15	10	1	38
	0.0	5.3	26.3	39.5	26.3	2.6	100.0
10만원 초과 ~30만원	1	4	17	16	16	0	54
	1.9	7.4	31.5	29.6	29.6	0.0	100.0
30만원 초과 ~90만원 미만	2	6	16	25	23	1	73
	2.7	8.2	21.9	34.2	31.5	1.4	100.0
90만원 이상	2	3	22	18	25	0	70
	2.9	4.3	31.4	25.7	35.7	0.0	100.0
전체	10	16	70	89	82	3	270
	3.7	5.9	25.9	33.0	30.4	1.1	100.0

한편 국가가 지급한 월평균 가구생활비 수준의 차이에 따라 북한이 잘살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면 먼저 사상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가지급 월평균 가구생활비가 0원인 경우 5.2%에 불과하였으나 1만원 이상에서는 13.3%로 8.1% 높게 나타났고,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응답도 0원인 경우 28.6%였으나 1만원 이상에서는 53.3%로 24.7%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내부 개혁일 수 있는 경제관리방법 개선 응답은 0원의 경우 26.6%였으나 1만원 이상의 경

우는 0.0%로 나타났고 자본주의 도입 응답도 0원의 경우 32.5%였으나 1만원 이상의 경우는 20.0%로 12.5% 낮게 나타났다.

〈표 3-47〉 국가지급 월평균 가구생활비 수준별 북한이 잘살기 위한 정책 인식(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상성 강화	과학기술 발전	경제관리 방법 개선	외국과 경제 협력 확대	자본주의 도입	기타	전체
0원	8	7	41	44	50	4	154
	5.2	4.5	26.6	28.6	32.5	2.6	100.0
1만원 미만	1	7	34	41	39	0	122
	0.8	5.7	27.9	33.6	32.0	0.0	100.0
1만원 이상	2	2	0	8	3	0	15
	13.3	13.3	0.0	53.3	20.0	0.0	100.0
전체	11	16	75	93	92	4	291
	3.8	5.5	25.8	32.0	31.6	1.4	100.0

따라서 국가가 지급하는 월평균 생활비가 높을수록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가구소득수준과는 상반되는 인식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가지급 생활비 수준이 높을수록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수준이 낮은 층과 비슷한 인식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특히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해가고 있는 집단 간에는 경제 정책에 대한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③ 남한과 통일문제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의 분화는 통일문제나 남한에 대한 인식의 분화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기 전에 타지역으로의 이동 빈도나 외부소식 득문경로, 남한문화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소득수준의 격차로 인해 통일이나 남한에 대한 인식이 분화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개 요인들이기 때문이다.⁴⁹

먼저 소득에 따른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빈도를 살펴보면 다른 지역으로 자주 간다는 응답이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월평균 가구 소득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13.7%에 불과하였으나 90만원 이상의 최상층에서는 이보다 32.2% 높은 45.9%로 나타났다. 반면 거의 못 간다는 응답은 2만원 미만에서 44.2%인데 비해 90만원 이상에서는 이보다 25.8% 낮은 18.4%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빈도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는 물론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

49_ 이하 소득에 따른 인식의 분화는 동일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변동조사와 동시에 진행된 북한주민 통일인식조사 결과를 사회변동조사의 소득변수와 교차분석한 것이다. 북한주민 통일인식조사에 대해서는 정은미 외, 『북한주민 통일인식 2015』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참조.

〈표 3-48〉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5분위)별 타지역 이동 빈도

단위: 명, %

구분	자주 감	가끔 감	거의 못 감	전체
2만원 미만	13	40	42	95
	13.7	42.1	44.2	100.0
2만원~10만원	21	36	42	99
	21.2	36.4	42.4	100.0
10만원 초과~30만원	26	41	32	99
	26.3	41.4	32.3	100.0
30만원 초과~90만원 미만	30	44	28	102
	29.4	43.1	27.5	100.0
90만원 이상	45	35	18	98
	45.9	35.7	18.4	100.0
전체	135	196	162	493
	27.4	39.8	32.9	100.0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에 따라 외부소식을 듣는 경로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 소득 상위 10%인 월평균 150만원 이상의 경우 150만원 미만에 비해 주변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듣는다는 응답이 7.8% 높은 54.5%이고 외국매체라는 응답은 10.8% 높은 39.4%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북한의 신문, 방송, 강연, 학습 등 공식적인 매체나 경로를 통해 소식을 듣는다는 응답의 비율을 보면 소득이 150만원 미만의 경우 24.7%를 차지하였고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는 이보다 18.7% 낮은 6.0%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북한 당국이 전하는 소식보다 비공식적인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은 소식들을 듣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49〉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10분위)별 외부소식 득문 경로

단위: 명, %

구분	북한 신문	북한 방송	강연·학습	주변사람	외국 매체 (남한 포함)	전체
0원	0	2	0	2	0	4
	0.0	50.0	0.0	50.0	0.0	100.0
150만원 미만	6	6	14	49	30	105
	5.7	5.7	13.3	46.7	28.6	100.0
150만원 이상	0	1	1	18	13	33
	0.0	3.0	3.0	54.5	39.4	100.0
전체	6	9	15	69	43	142
	4.2	6.3	10.6	48.6	30.3	100.0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에 따른 남한문화경험을 살펴보면 남한 문화를 자주 접한다는 응답은 소득이 2만원 미만인 최하위 20%의 경우 27.4%였으나 소득이 90만원 이상인 최상위 20%의 경우는 이보다 38.9% 높은 66.3%로 나타났다. 반면 한 두 번 접하였거나 전혀 접하지 못하였다는 응답은 최하위 소득 20%의 경우 각각 53.7%와 18.9%였으나 최상위 소득 20%의 경우는 이보다 각각 24.1%와 14.5% 낮은 29.6%와 4.1%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남한문화를 더 많이 접하고 있으며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3-50〉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5분위)별 남한 문화 경험

단위: 명, %

구분	자주 접함	한 두 번 접함	전혀 못 접함	전체
2만원 미만	26	51	18	95
	27.4	53.7	18.9	100.0
2만원~10만원	34	51	14	99
	34.3	51.5	14.1	100.0
10만원 초과~30만원	47	39	13	99
	47.5	39.4	13.1	100.0
30만원 초과~90만원 미만	55	38	9	102
	53.9	37.3	8.8	100.0
90만원 이상	65	29	4	98
	66.3	29.6	4.1	100.0
전체	227	208	58	493
	46.0	42.2	11.8	100.0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에 따라 남한문화에 대한 친숙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면 최하위 소득 20%인 2만원 미만의 경우 매우 친숙하다나 약간 친숙하다는 응답이 각각 44.4%와 48.1%로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최상위 소득 20%인 90만원 이상의 경우 매우 친숙하다는 응답은 최하위 소득 20%보다 24.4% 높은 68.8%로 나타났고 대신 약간 친숙하다는 응답은 20.1% 낮은 28.0%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남한문화에 대한 친숙도가 높은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물론 앞에서 살펴본 남한문화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51〉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5분위)별 남한문화 친숙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친숙	약간 친숙	별로 친숙하지 않음	전혀 친숙하지 않음	전체
2만원 미만	36	39	3	3	81
	44.4	48.1	3.7	3.7	100.0
2만원~10만원	55	27	5	1	88
	62.5	30.7	5.7	1.1	100.0
10만원 초과~30만원	46	32	8	2	88
	52.3	36.4	9.1	2.3	100.0
30만원 초과~90만원 미만	61	25	8	0	94
	64.9	26.6	8.5	0.0	100.0
90만원 이상	64	26	3	0	93
	68.8	28.0	3.2	0.0	100.0
전체	262	149	27	6	444
	59.0	33.6	6.1	1.4	100.0

남한문화경험이나 남한문화에 대한 친숙 정도는 남한에 대한 인식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사적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 수준에 따라 남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면 우선 적대대상이라는 인식의 경우 최상위 소득 20%에서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7.7~10.3% 정도 낮은 수준을 보이며, 경계대상이라는 인식에서도 6.5~9.3% 정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최상위 소득 20%의 남한에 대한 적대인식이 다른 하위 소득집단보다 낮음을 보여준다. 한편 경쟁대상이라는 인식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

데, 협력대상이라는 인식에서 최상위 소득 20%는 최하위 소득 20%보다 12.7% 높은 70.1%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남한을 적대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협력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52〉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5분위)별 남한인식

단위: 명, %

구분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전체
2만원 미만	13	54	1	10	16	94
	13.8	57.4	1.1	10.6	17.0	100.0
2만원~10만원	9	56	2	13	17	97
	9.3	57.7	2.1	13.4	17.5	100.0
10만원 초과 ~30만원	6	62	1	11	17	97
	6.2	63.9	1.0	11.3	17.5	100.0
30만원 초과 ~90만원 미만	7	60	3	12	20	102
	6.9	58.8	2.9	11.8	19.6	100.0
90만원 이상	8	68	8	4	9	97
	8.2	70.1	8.2	4.1	9.3	100.0
전체	43	300	15	50	79	487
	8.8	61.6	3.1	10.3	16.2	100.0

사적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따라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면 남한에 대한 인식과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먼저 남한이 북한에 대해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많이 또는 약간 있다는 응답을 합한 '있다'를 살펴보면 최하위 소득 20%의 경우 67.0%로 절반을 훌쩍 넘어서고 있으나 최상위 소득 20%

의 경우는 이보다 27.2% 낮은 39.8%로 40%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으로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은 당연히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도발할 것이라는 북한 당국의 주장에 대한 수용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3-53〉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5분위)별 남한의 대북무력도발 인식

단위: 명, %

구분	많이 있다	약간 있다	*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없다	전체
2만원 미만	30	33	63	15	16	31	94
	31.9	35.1	67.0	16.0	17.0	33.0	100.0
2만원~10만원	33	30	63	20	16	36	99
	33.3	30.3	63.6	20.2	16.2	36.4	100.0
10만원 초과 ~30만원	23	28	51	32	16	48	99
	23.2	28.3	51.5	32.3	16.2	48.5	100.0
30만원 초과 ~90만원 미만	32	21	53	28	21	49	102
	31.4	20.6	52.0	27.5	20.6	48.0	100.0
90만원 이상	18	21	39	34	25	59	98
	18.4	21.4	39.8	34.7	25.5	60.2	100.0
전체	136	133	269	129	94	223	492
	27.6	27.0	54.7	26.2	19.1	45.3	100.0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에 따라 경제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면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도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전체적으로 북한에 살고 있을 때 자본주의를 지지했다는 응답을 살펴보면 최하위 소득 20%인 2만원 미만에서는 65.3%로 나타났지만 최상위 소득 20%인 90만원 이상에서는 이보다 20.4% 높은 85.7%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자본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한 '훨씬 더 지지' 비율을 살펴보면 최하위 소득 20%에서는 30.5%였지만 최상위 소득 20%에서는 이보다 27.7% 높은 58.2%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생각했던 자본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주의 경제시스템보다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경제 개혁에 대한 잠재적 요구가 상당히 폭넓게 존재함을 시사한다.

〈표 3-54〉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5분위)별 경제시스템 지지도

단위: 명, %

구분	사회주의 훨씬 더 지지	사회주의 약간 더 지지	비슷하게 지지	자본주의 약간 더 지지	자본주의 훨씬 더 지지	* 자본주의 지지	전체
2만원 미만	10	6	17	33	29	62	95
	10.5	6.3	17.9	34.7	30.5	65.3	100.0
2만원~10만원	11	13	9	32	34	66	99
	11.1	13.1	9.1	32.3	34.3	66.7	100.0
10만원 초과~30만원	7	7	13	32	40	72	99
	7.1	7.1	13.1	32.3	40.4	72.7	100.0
30만원 초과~90만원 미만	7	8	15	26	46	72	102
	6.9	7.8	14.7	25.5	45.1	70.6	100.0
90만원 이상	3	3	8	27	57	84	98
	3.1	3.1	8.2	27.6	58.2	85.7	100.0
전체	38	37	62	150	206	356	493
	7.7	7.5	12.6	30.4	41.8	72.2	100.0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에 따라 통일의 방식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면 먼저 현 남한체제로의 통일에 대한 응답을 보면 최상위 소득 10%에서는 52.4%로 나타났으나 최하위 소득 10%에서는 이보다 33.4% 낮은 19.0%로 나타났고 그 중간의 소득층에서도 최상위 10%보다 6.8% 낮은 45.6%로 나타났다. 반면 통일만 되면 상관없다는 응답은 최하위층에서 57.1%로 절반을 넘었으나 최상위층에서는 21.4%로 최하위층보다 35.7%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남한체제로의 통일을 선호하고 소득이 낮아질수록 방식 자체에 무관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55〉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10분위)별 통일방식 인식

단위: 명, %

구분	현 북한 체제	남북 절충	남북 두 체제 유지	현 남한 체제	통일만 되면 상관없다	전체
0원	1	4	0	4	12	21
	4.8	19.0	0.0	19.0	57.1	100.0
150만원 미만	5	43	13	94	51	206
	2.4	20.9	6.3	45.6	24.8	100.0
150만원 이상	2	6	3	22	9	42
	4.8	14.3	7.1	52.4	21.4	100.0
전체	8	53	16	120	72	269
	3.0	19.7	5.9	44.6	26.8	100.0

2) 연령대별 분화

소득의 분화와 함께 연령대에 따른 경제활동과 인식의 분화도 주목된다. 각 연령대별로 현재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고, 특히 북한주민들이 사회에 진출하던 시기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이 아무리 획일화된 사회라 할지라도 연령대에 따라 삶의 방식과 인식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적인 경제활동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개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는 이전보다 빠르고 폭넓게 나타날 수도 있다.

먼저 이 글에서 주목하는 연령대의 기준은 북한주민들이 사회에 진출한 시기이다. 일반적인 분류에 따라 청년층을 20~35세 정도로 보면⁵⁰ 이들은 20세 전후인 2000년대에 사회에 진출한 연령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고난의 행군시기에 학창시절을 보냈을 수는 있어도 실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시기는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경제가 다소 나아지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35~45세는 흔히 주목하는 고난의 행군시기였던 1990년대 중후반에 사회에 진출한 연령대이다. 한편 시장화의 측면에서 1984년 실시된 8.3인민소비품증산운동(8.3조치)도 주목된다. 이 시기를 전후로 사회에 진출한 연령대는 대체로 45~55세 정도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인 55세 이상은 대체로 북한 체제가

50_ 20~35세에 해당하는 북한의 청년 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선행 조사연구로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조사가 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김정은 정권과 청년 세대의 다중적 정체성』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5) 참조.

가장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1970년대나 그 이전에 사회에 진출한 연령대이다. 이번 조사에 참가한 전체 대상자들을 상기 연령대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⁵¹

〈표 3-56〉 연령대 및 성별 구성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35세 미만	116	140	256
	45.3	54.7	100.0
35~45세 미만	44	73	117
	37.6	62.4	100.0
45~55세 미만	43	79	122
	35.2	64.8	100.0
55세 이상	19	41	60
	31.7	68.3	100.0
전체	222	333	555
	40.0	60.0	100.0

(1) 사적 경제활동

연령대에 따른 장사경험을 보면 35세 미만의 청년층과 55세 이상의 경우 각각 65.1%와 56.7%로 60.0% 전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51_ 이하 연령대에 따른 인식의 분화 가운데 대남, 통일, 대내정치 인식 등은 북한주민 통일외교조사자료를 사용하였다. 북한주민 통일외교조사에 대해서는 정은미 외, 『북한주민 통일외교 2015』(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참조.

35~45세 미만이나 45~55세 미만의 경우 각각 83.8%와 86.1%로 청년층이나 55세 이상보다 18.7~29.4% 정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35~55세 미만 층이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층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계획경제가 붕괴된 고난의 행군시기나 80년대 중반 8.3조치가 시행될 시기에 사회에 진출함으로써 일찍부터 사적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었던 연령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표 3-57〉연령대별 장사경험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전체
35세 미만	166	89	255
	65.1	34.9	100.0
35~45세 미만	98	19	117
	83.8	16.2	100.0
45~55세 미만	105	17	122
	86.1	13.9	100.0
55세 이상	34	26	60
	56.7	43.3	100.0
전체	403	151	554
	72.7	27.3	100.0

연령대별로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를 살펴보면 소매장사의 경우 35세 미만 청년층의 비율이 30.0%로 가장 낮고 35~45세 미만 층이 38.2%로 가장 높은 양상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은 층이 55세 이상으로 36.5%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편의봉사의 경우는 55세 이상 층에서

다른 층보다 6.0~6.6% 정도 높은 9.6%를 차지한 점이 주목된다. 되거리 장사의 경우 45~55세 미만 층이 14.3%로 가장 높은 가운데 35세 미만 층이 12.8%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외화벌이의 경우는 35~45세 미만 층이 15.5%로 가장 높은 가운데 35세 미만 층이 13.3%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돈장사의 경우는 35세 미만 층이 8.9%로 다른 연령대보다 4.4~7.0%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소매장사를 제외하면 35세 미만 청년층의 경우 위험성이 크지만 비교적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되거리 장사나 외화벌이, 돈장사 등에 상대적으로 다수가 종사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비해 35~45세 미만의 경우는 외화벌이 계통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45~55세 미만의 경우는 되거리 장사를 많이 하였으며 55세 이상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개인편의봉사나 샷별이 그리고 기타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3-58〉 연령대별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단위: 명, %

구분	소매장사	개인 편의 봉사	개인 (임) 가공	식당 상점 임대 운영	퇴거 리 장사	외화 벌이 계통	돈 장 사	삯 별 이	해외 파견	기타	전체
35세 미만	61	6	4	3	26	27	18	13	1	44	203
	30.0	3.0	2.0	1.5	12.8	13.3	8.9	6.4	0.5	21.7	100.0
35~45세 미만	42	4	3	2	8	17	3	7	1	23	110
	38.2	3.6	2.7	1.8	7.3	15.5	2.7	6.4	0.9	20.9	100.0
45~55세 미만	37	4	5	6	16	7	5	4	3	25	112
	33.0	3.6	4.5	5.4	14.3	6.3	4.5	3.6	2.7	22.3	100.0
55세 이상	19	5	2	1	5	2	1	5	0	12	52
	36.5	9.6	3.8	1.9	9.6	3.8	1.9	9.6	0.0	23.1	100.0
전체	159	19	14	12	55	53	27	29	5	104	477
	33.3	4.0	2.9	2.5	11.5	11.1	5.7	6.1	1.0	21.8	100.0

연령대별로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한 기간을 살펴보면 우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5년 이상 종사한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5년 이상 종사한 비중을 보면 55세 이상의 경우 83.4%에 달한 반면 45~55세 미만에서는 59.8%로 55세 이상보다 23.6% 낮고 35~45세 미만의 경우는 이보다 7.1% 낮은 52.7%를 보였으며 35세 미만에서는 이보다 26.0% 낮은 26.7%를 나타냈다. 55세 이상이 35세 미만보다 56.6% 높은 수준이다. 5년 미만의 경우는 대체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비중이 높은 경향을 모든 구간에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업 자체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변화를 도모하기보다는 기존의 경제활동 공간에 안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모두 주목된다.

〈표 3-59〉 연령대별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기간

단위: 명, %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전체
35세 미만	33	22	51	42	54	202
	16.3	10.9	25.2	20.8	26.7	100.0
35~45세 미만	6	6	21	20	59	112
	5.4	5.4	18.8	17.9	52.7	100.0
45~55세 미만	7	2	17	19	67	112
	6.3	1.8	15.2	17.0	59.8	100.0
55세 이상	1	0	5	2	40	48
	2.1	0.0	10.4	4.2	83.3	100.0
전체	47	30	94	83	220	474
	9.9	6.3	19.8	17.5	46.4	100.0

연령대별 수입 분포를 살펴보면⁵² 먼저 0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세 미만은 27.5%, 55세 이상은 34.0%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비공식적인 경제활동 자체가 다른 연령대보다 낮아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그 다음으로 34.5%로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52_ 앞에서 소득분화를 살펴볼 때는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수입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연령대별 수입에서는 북한주민 통일외식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에 거주할 당시 공식 월급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고 있는 10만원 초과~50만원 이하의 소득 구간을 보면 35~45세 미만이 45.5%로 가장 큰 비율을 보이고 45~55세 미만이 36.8%로 그 다음을 차지한 가운데 35세 미만이 30.4%, 55세 이상이 26.4%를 보이고 있다.

한편 10만원 초과를 기준으로 보면 35~45세 미만이 74.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45~55세 미만의 64.1%이며 35세 이하 청년층이 60.3%인 가운데 55세 이상은 45.3%로 다른 연령대보다 15.0~29.2%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연령대별 비공식 수입을 보면 대체로 고난의 행군시기 전후에 사회에 진출한 35~45세 미만 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80년대 중반 8.3조치가 시행되었던 시기 전후에 사회에 진출한 45~55세 미만 층이며 70년대나 그 이전에 사회에 진출한 55세 이상 층이 가장 적다고 볼 수 있다. 사회진출 시기의 환경과 경험이 비공식적인 경제활동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35세 미만 층이나 55세 이상 층의 경우 0원인 경우와 1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구간에 분화가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심화되어 있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70년대나 그 이전에 사회에 진출한 55세 이상 층이 상대적으로 시장의 확산이라는 환경변화에 주도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시사한다.

〈표 3-60〉 연령대별 (장사나 부업 등을 통한) 비공식수입

단위: 명, %

구분	0원	1천원 이하	5천원 이하	1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전체
35세 미만	68	3	1	3	23	75	39	35	247
	27.5	1.2	0.4	1.2	9.3	30.4	15.8	14.2	100.0
35~45세 미만	12	0	0	1	15	50	18	14	110
	10.9	0.0	0.0	0.9	13.6	45.5	16.4	12.7	100.0
45~55세 미만	12	3	2	3	22	43	14	18	117
	10.3	2.6	1.7	2.6	18.8	36.8	12.0	15.4	100.0
55세 이상	18	1	1	0	9	14	2	8	53
	34.0	1.9	1.9	0.0	17.0	26.4	3.8	15.1	100.0
전체	110	7	4	7	69	182	73	75	527
	20.9	1.3	0.8	1.3	13.1	34.5	13.9	14.2	100.0

(2) 경제개혁 인식

북한에서 부자는 왜 부자이고 가난한 자는 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1순위)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치사상성의 차이 때문이라는 응답은 55세 이상이 29.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35세 미만으로 25.2%를 차지하였으며 35~45세 미만과 45~55세 미만도 35세 미만과 비슷한 24.1%와 23.0%를 각각 차지하였다. 본인 직위 탓이라는 응답을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중이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55세 이상은 53.4%로 절반을 넘었고, 45~55세 미만은 42.6%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35~45세 미만과 35세 미만은 각각 39.7%와 30.3%로 그 다

음을 차지하였다. 이는 본인의 공식적인 직위나 그에 따른 권력의 전용 등을 통해 부를 분배 받거나 축적하는 사회에서의 경험과 연륜의 차이가 낳은 인식의 차이일 수 있다. 권력층과의 안면관계를 지적한 응답은 35세 미만과 45~55세 미만에서 20%대로 다른 연령대보다 조금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출신성분이라는 응답은 55세 미만에서는 모두 10.0% 중반대의 응답을 보인 반면 55세 이상에서 3.4%로 낮게 나온 점이 주목된다. 한편 교육수준, 가족관계, 사는 지역, 운수소관은 매우 낮은 응답비율로 인해 현실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지만 개인의 성격이나 노력과 관련하여 35세 미만의 청년층 응답이 6.7%로 가장 높은 반면 55세 이상은 0.0%로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정치적 사고에서 벗어나 개인적 성취를 위한 적극적인 사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 3-61〉연령대별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 인식(1순위)

단위: 명, %

구분	정치 사상성	본인 직위	교육 수준	가족 관계	권력층 안면 관계	사는 지역	개인 성격 노력	출신 성분	운수 소관	전체
35세 미만	64	77	2	2	53	0	17	35	4	254
	25.2	30.3	0.8	0.8	20.9	0.0	6.7	13.8	1.6	100.0
35~45세 미만	28	46	0	2	14	1	6	19	0	116
	24.1	39.7	0.0	1.7	12.1	0.9	5.2	16.4	0.0	100.0
45~55세 미만	28	52	1	0	25	0	1	15	0	122
	23.0	42.6	0.8	0.0	20.5	0.0	0.8	12.3	0.0	100.0
55세 이상	17	31	0	0	8	0	0	2	0	58
	29.3	53.4	0.0	0.0	13.8	0.0	0.0	3.4	0.0	100.0
전체	137	206	3	4	100	1	24	71	4	550
	24.9	37.5	0.5	0.7	18.2	0.2	4.4	12.9	0.7	100.0

연령대별로 우선적인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매대의 경우 45~55세 미만에서 가장 높은 3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55세 이상의 28.8%이며 그 다음으로 35~45세 미만이 26.1%를 차지한 가운데 35세 미만 청년층의 경우 23.3%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 소토지의 경우 55세 이상이 37.3%로 가장 높고 35세 미만이 19.3%로 가장 낮은 가운데 35~45세 미만과 45~55세 미만이 각각 28.7%와 23.3%로 중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시장매대나 소토지를 상거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55세 이상이 가장 높고 35세 미만이 가장 낮지만 개인이 임대해서 운영하는 국가상점이나 기업소 명의로 등록된 개인소유의 화물차나 발동선에 대해서는 35세 미만에서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소규모지방산업공장에 대해서도 35세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물론 되거리장사나 외화벌이에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종사하는 것과도 관련될 수 있다.

〈표 3-62〉 연령대별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식(1순위)

단위: 명, %

구분	소토지	살림집	시장매대	개인운영국가상점	농장분조경작지	소규모지방산업공장	기업소 명의 개인 소유 화물차 발동선	생각해본 적이 없음	전체
35세 미만	48	34	58	31	9	14	27	28	249
	19.3	13.7	23.3	12.4	3.6	5.6	10.8	11.2	100.0
35~45세 미만	33	17	30	7	13	4	7	4	115
	28.7	14.8	26.1	6.1	11.3	3.5	6.1	3.5	100.0
45~55세 미만	28	13	42	6	9	4	8	10	120
	23.3	10.8	35.0	5.0	7.5	3.3	6.7	8.3	100.0
55세 이상	22	7	17	1	2	3	0	7	59
	37.3	11.9	28.8	1.7	3.4	5.1	0.0	11.9	100.0
전체	131	71	147	45	33	25	42	49	543
	24.1	13.1	27.1	8.3	6.1	4.6	7.7	9.0	100.0

연령대별로 북한이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인식(1순위)을 살펴보면 35세 미만에서는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경제시스템 전환인 자본주의 도입이 35.0%로 같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분개혁인 경제관리방법 개선이 20.4%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35~45세 미만에서는 경제관리방법 개선이 45.0%로 가장 높은 가운데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자본주의 도입이 각각 26.7%와 18.3%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45~55세 미만의 경우는 자본주의 도입이 가장 높은 38.8%를 차지한 가운데 외국과의 경제협력확대와 경제관리방법개선이 각각 32.8%와 20.9%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55세 이상의 경우는 외국

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29.0%로 가장 높은 가운데 경제관리방법 개선과 자본주의 도입이 각각 25.8%와 22.6%를 차지하였으며 과학기술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12.9%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경제개혁에 대한 인식은 35세 미만과 45~55세 미만이 자본주의 도입이라는 경제시스템 전환과 대외경제협력 확대라는 개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호하는 반면 35~45세 미만이나 55세 이상에서는 경제시스템 전환보다는 부분적인 개혁과 대외개방 확대를 선호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63〉 연령대별 북한이 잘 살기 위한 정책 인식(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상성 강화	과학기술 발전	경제관리 방법 개선	외국과 경제협력 확대	자본주의 도입	기타	전체
35세 미만	5	7	28	48	48	1	137
	3.6	5.1	20.4	35.0	35.0	0.7	100.0
35~45세 미만	4	1	27	16	11	1	60
	6.7	1.7	45.0	26.7	18.3	1.7	100.0
45~55세 미만	0	4	14	22	26	1	67
	0.0	6.0	20.9	32.8	38.8	1.5	100.0
55세 이상	2	4	8	9	7	1	31
	6.5	12.9	25.8	29.0	22.6	3.2	100.0
전체	11	16	77	95	92	4	295
	3.7	5.4	26.1	32.2	31.2	1.4	100.0

(3) 남한과 통일문제

연령대별 남한문화경험을 살펴보면 자주 접하였다는 응답의 경우 35세 미만의 청년층이 56.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45~55세 미만으로 49.2%를 차지하였으며 35~45세 미만과 55세 이상에서는 각각 35.9%와 18.3%를 차지하여 35세 미만이 가장 높고 55세 이상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자주 접하였다는 응답은 35세 미만이 55세 이상보다 38.0%나 높게 나타났다. 55세 이상의 경우는 전혀 접하지 못하였다는 응답도 28.3%로 다른 연령대보다 2.2~3.1배 정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3-64〉 연령대별 남한문화 경험

단위: 명, %

구분	자주 접함	한두번 접함	전혀 못 접함	전체
35세 미만	144	89	23	256
	56.3	34.8	9.0	100.0
35~45세 미만	42	60	15	117
	35.9	51.3	12.8	100.0
45~55세 미만	60	50	12	122
	49.2	41.0	9.8	100.0
55세 이상	11	32	17	60
	18.3	53.3	28.3	100.0
전체	257	231	67	555
	46.3	41.6	12.1	100.0

연령대별로 남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이라는 인식은 55세 이상에서 19.0%로 가장 높고 45세 미만에서 6.0%대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협력대상이라는 인식은 45~55세 미만에서 69.2%로 가장 높고 55세 이상에서 55.2%로 가장 낮다. 적대대상이라는 인식은 35세 미만에서 20.1%로 다른 연령대보다 5.9~7.2% 정도 높게 나타났다. 경계와 적대라는 부정적 인식을 합해보면 35세 미만에서 30.3%로 가장 높고 45~55세 미만에서 19.2%로 가장 낮다. 대체로 남한문화 경험이 많을수록 남한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인 경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남한문화 경험이 많은 35세 미만에서 부정적 대남인식이 큰 이유는 자주 접했다는 응답 층보다 한 두 번 접해보았다는 응답 층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계나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남한문화에 대한 수용성에서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일 수 있음도 시사한다.

〈표 3-65〉 연령대별 남한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전체
35세 미만	16	150	11	26	51	254
	6.3	59.1	4.3	10.2	20.1	100.0
35~45세 미만	8	75	2	16	15	116
	6.9	64.7	1.7	13.8	12.9	100.0
45~55세 미만	12	83	2	6	17	120
	10.0	69.2	1.7	5.0	14.2	100.0
55세 이상	11	32	1	6	8	58
	19.0	55.2	1.7	10.3	13.8	100.0
전체	47	340	16	54	91	548
	8.6	62.0	2.9	9.9	16.6	100.0

연령대별로 경제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면 북한에 거주할 당시 사회주의를 훨씬 더 또는 약간 더 지지했다는 응답은 35세 미만이 18.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55세 이상이 15.0%, 35~45세 미만이 13.7%를 차지하여 대체로 10.0% 중반대를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45~55세 미만의 경우는 8.2%로 다른 연령대보다 5.5~9.8% 낮게 나타났다. 이는 비슷하게 지지했다는 응답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45~55세 미만 연령대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자본주의를 훨씬 더 또는 약간 더 지지했다는 응답을 보면 45~55세 미만이 가장 높은 84.4%를 기록하였고 그 다음이 74.4%를 기록한 35~45세 미만이였다. 이에 비해 35세 미만은 66.4%로 가장 낮았고 55세 이상도 68.3%로 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경제시스템에 대한 인식에서는 35세 미만과 55세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사회주의를 더 지지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45~55세 미만 연령대가 자본주의를 가장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66〉 연령대별 경제시스템 지지도

단위: 명, %

구분	사회주의 훨씬 더 지지	사회주의 약간 더 지지	비슷하게 지지	자본주의 약간 더 지지	자본주의 훨씬 더 지지	전체
35세 미만	24	22	40	67	103	256
	9.4	8.6	15.6	26.2	40.2	100.0
35~45세 미만	9	7	14	33	54	117
	7.7	6.0	12.0	28.2	46.2	100.0
45~55세 미만	5	5	9	51	52	122
	4.1	4.1	7.4	41.8	42.6	100.0
55세 이상	3	6	10	18	23	60
	5.0	10.0	16.7	30.0	38.3	100.0
전체	41	40	73	169	232	555
	7.4	7.2	13.2	30.5	41.8	100.0

김정은 국무위원장(조사 당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에 대한 연령대별 응답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50.0% 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응답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5세 미만의 경우 65.5%로 가장 높고 35~45세 미만의 경우도 35세 미만과 비슷한 64.8%를 보였다. 이에 비해 45~55세 미만의 경우는 55.3%였으며 55세 이상은 51.2%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35세 미만이 55세 이상보다 14.3% 높게 나타났다.

〈표 3-67〉 연령대별 김정은에 대한 주민 지지 정도 평가

단위: 명, %

구분	10% 미만	20%	30%	40%	50%	60%	70%	80%	90% 이상	* 50% 이상	전체
35세 미만	19	19	22	9	33	20	14	29	35		200
	9.5	9.5	11.0	4.5	16.5	10.0	7.0	14.5	17.5	65.5	100.0
35~45세 미만	9	9	11	3	21	7	5	11	15		91
	9.9	9.9	12.1	3.3	23.1	7.7	5.5	12.1	16.5	64.8	100.0
45~55세 미만	11	8	14	9	25	14	1	6	6		94
	11.7	8.5	14.9	9.6	26.6	14.9	1.1	6.4	6.4	55.3	100.0
55세 이상	7	2	8	3	10	1	1	2	7		41
	17.1	4.9	19.5	7.3	24.4	2.4	2.4	4.9	17.1	51.2	100.0
전체	46	38	55	24	89	42	21	48	63		426
	10.8	8.9	12.9	5.6	20.9	9.9	4.9	11.3	14.8	61.7	100.0

연령대별로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10년 이내일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0년 이내일 것이라는 응답은 55세 이상의 경우 47.6%를 차지하였으며 45~55세 미만도 이와 비슷한 45.7%를 차지하였다. 반면 35~45세 미만의 경우는 29.7%였고 35세 미만은 이보다 약간 낮은 27.9%를 차지하였다. 한편 김정은 정권의 예상유지 기간을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5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10년 이내일 것이라는 응답이 20대는 22.0%, 30대는 30.4%, 40대는 42.1%, 50대는 47.1%, 60대 이상은 50.0%로 나타난다.

따라서 젊은 층일수록 김정은 정권이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될 가능

성을 주목하는 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김정은 정권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김정은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 정도 평가와 일치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는데, 45세 미만의 경우 고난의 행군기 또는 그 이후 시기에 사회에 진출하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경험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할 가능성과 45세 이상의 경우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위기 이전에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던 북한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상대적으로 크게 갖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표 3-68〉 연령대별 김정은 정권의 예상 유지 기간 인식

단위: 명, %

구분	5년 미만	5~10년	* 10년 이내	10~15년	15~20년	20~30년	30년 이상	생각해본 적이 없다	전체
35세 미만	14	42		25	15	14	34	57	201
	7.0	20.9	27.9	12.4	7.5	7.0	16.9	28.4	100.0
35~45세 미만	7	20		12	5	5	20	22	91
	7.7	22.0	29.7	13.2	5.5	5.5	22.0	24.2	100.0
45~55세 미만	18	25		10	3	8	14	16	94
	19.1	26.6	45.7	10.6	3.2	8.5	14.9	17.0	100.0
55세 이상	12	8		3	0	1	7	11	42
	28.6	19.0	47.6	7.1	0.0	2.4	16.7	26.2	100.0
전체	51	95		50	23	28	75	106	428
	11.9	22.2	34.1	11.7	5.4	6.5	17.5	24.8	100.0

김정은 정권이 정당화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인식이 연령대별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면 70년대 이전에 사회에 진출한 55세 이상 연령대와 다른 연령대가 확연히 다른 인식을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 먼저 찬성의 경우 45~55세 미만에서 55.2%로 가장 높았고 35세 미만에서도 51.8%로 절반을 넘어섰으며 35~45세 미만의 경우도 48.3%로 거의 절반에 근접하였다. 특히 20대의 경우만 살펴보면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였다는 응답이 59.6%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반면 55세 이상에서는 29.0%로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대의 경우를 보면 55세 이상이 54.8%로 절반을 넘어선 반면 35세 미만은 18.2%로 가장 낮았고 35~45세 미만이나 45~55세 미만의 경우도 각각 26.7%와 20.9%로 20%대를 차지하였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보유전략이 55세 이하 청장년 층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대내 정치적인 정당화 효과를 발휘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45~55세 미만 연령대의 경우 앞서 살펴본 김정은 정권의 지속가능 기간에 대한 인식에서 45.7%가 10년 이내일 것이라고 응답한 점을 고려하면 핵무기 보유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도 그에 따른 부정적 여파와 다양한 불안정 요소들도 복합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표 3-69〉 연령대별 핵무기 보유 인식

단위: 명, %

구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 찬성	반반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반대	전체
35세 미만	39	32		41	11	14		137
	28.5	23.4	51.8	29.9	8.0	10.2	18.2	100.0
35~45세 미만	22	7		15	8	8		60
	36.7	11.7	48.3	25.0	13.3	13.3	26.7	100.0
45~55세 미만	20	17		16	5	9		67
	29.9	25.4	55.2	23.9	7.5	13.4	20.9	100.0
55세 이상	9	0		5	4	13		31
	29.0	0.0	29.0	16.1	12.9	41.9	54.8	100.0
전체	90	56		77	28	44		295
	30.5	19.0	49.5	26.1	9.5	14.9	24.4	100.0

3) 지역 분화

(1) 잘 사는 지역(도)

사적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적으로도 경제적 분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과 중간 정도 그리고 가장 못하는 지역은 어디라고 인식하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광역단위(도)로 가장 잘 사는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면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래 평안남도라는 인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평안남도가 가장 잘 산다는 인식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함경북도가 가장 잘 산다는 인식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평안북도와 양강도가 가장 잘 사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표 3-70〉 북한에서 가장 잘사는 지역(도)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평안 남도	평안 북도	함경 남도	함경 북도	자강도	양강도	황해 남도	황해 북도	강원도	전체
2012년	43	14	8	32	6	8	0	1	0	112
	38.4	12.5	7.1	28.6	5.4	7.1	0.0	0.9	0.0	100.0
2013년	55	9	5	31	10	20	1	1	1	133
	41.4	6.8	3.8	23.3	7.5	15.0	0.8	0.8	0.8	100.0
2014년	47	32	2	29	6	29	3	0	0	148
	31.8	21.6	1.4	19.6	4.1	19.6	2.0	0.0	0.0	100.0
2015년	44	34	3	26	3	26	3	1	1	141
	31.2	24.1	2.1	18.4	2.1	18.4	2.1	0.7	0.7	100.0
전체	189	89	18	118	25	83	7	3	2	534
	35.4	16.7	3.4	22.1	4.7	15.5	1.3	0.6	0.4	100.0

광역단위(도)로 중간 정도 사는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함경북도라는 인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을 양강도가 차지하고 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함경북도가 중간 정도 사는 지역이라는 인식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양강도가 중간 정도로 사는 지역이라는 인식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앞서 살펴본 가장 잘 사는 지역이라는 인식에서 함경북도가 감소하고 양강도가 증가하는 경향과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표 3-71〉 북한에서 중간 정도 사는 지역(도)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평안 남도	평안 북도	함경 남도	함경 북도	자강도	양강도	황해 남도	황해 북도	강원도	전체
2012년	12	10	13	25	9	31	5	10	4	119
	10.1	8.4	10.9	21.0	7.6	26.1	4.2	8.4	3.4	100.0
2013년	14	13	17	30	12	32	7	2	6	133
	10.5	9.8	12.8	22.6	9.0	24.1	5.3	1.5	4.5	100.0
2014년	12	25	15	33	11	37	6	2	4	145
	8.3	17.2	10.3	22.8	7.6	25.5	4.1	1.4	2.8	100.0
2015년	25	9	17	44	11	28	4	2	4	144
	17.4	6.3	11.8	30.6	7.6	19.4	2.8	1.4	2.8	100.0
전체	63	57	62	132	43	128	22	16	18	541
	11.6	10.5	11.5	24.4	7.9	23.7	4.1	3.0	3.3	100.0

광역단위(도)로 북한에서 가장 못사는 지역이 어디라고 인식하는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강원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황해남도와 자강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추세를 살펴보면 강원도가 가장 못사는 지역이라는 인식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황해남도와 황해북도가 가장 못사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강도가 가장 못사는 지역이라는 인식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표 3-72〉 북한에서 가장 못사는 지역(도)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평안 남도	평안 북도	함경 남도	함경 북도	자강도	양강도	황해 남도	황해 북도	강원도	전체
2012년	3	1	15	12	10	8	13	7	46	115
	2.6	0.9	13.0	10.4	8.7	7.0	11.3	6.1	40.0	100.0
2013년	0	0	12	5	19	12	17	10	57	132
	0.0	0.0	9.1	3.8	14.4	9.1	12.9	7.6	43.2	100.0
2014년	2	1	15	9	20	16	15	15	51	144
	1.4	0.7	10.4	6.3	13.9	11.1	10.4	10.4	35.4	100.0
2015년	1	2	8	4	21	12	30	22	41	141
	0.7	1.4	5.7	2.8	14.9	8.5	21.3	15.6	29.1	100.0
전체	6	4	50	30	70	48	75	54	195	532
	1.1	0.8	9.4	5.6	13.2	9.0	14.1	10.2	36.7	100.0

대체적으로 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평안남도가 가장 잘 산다는 인식이 높지만, 중국과 국경을 접하면서 무역이나 사적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평안북도나 양강도가 잘 사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의 강원도가 가장 못사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등 최근 들어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강원도가 가장 못 사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감소하는 가운데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가 가장 못사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증가하는 점도 주목된다. 황해남북도의 경우 북한 당국의 과도한 식량공출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살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인식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특히 중국 국경과는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반면

남한과는 단절된 지역으로 대외무역이나 사적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덜 활발한데 따른 결과일 수 있다.

(2) 잘 사는 도시(도 인민위원회 소재지와 특별행정구역)

평양을 제외하고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라선시가 가장 잘 사는 도시로 인식되고 있으며 신의주가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성의 경우 평양의 관문으로서 평성 시장 등 사적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라선시나 신의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못사는 도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73〉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평양 제외)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신의주	청진	리선	혜산	원산	남포	평성	사리원	개성	전체
2012년	34	7	43	6	2	5	16	0	3	116
	29.3	6.0	37.1	5.2	1.7	4.3	13.8	0.0	2.6	100.0
2013년	36	9	45	14	4	4	19	0	1	132
	27.3	6.8	34.1	10.6	3.0	3.0	14.4	0.0	0.8	100.0
2014년	52	6	45	17	3	3	18	2	0	146
	35.6	4.1	30.8	11.6	2.1	2.1	12.3	1.4	0.0	100.0
2015년	41	11	57	12	5	0	13	1	6	146
	28.1	7.5	39.0	8.2	3.4	0.0	8.9	0.7	4.1	100.0
전체	163	33	190	49	14	12	66	3	10	540
	30.2	6.1	35.2	9.1	2.6	2.2	12.2	0.6	1.9	100.0

북한에서 중간 정도 사는 도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청진과 혜산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평성도 청진과 라선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앞서 가장 잘 사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라선이나 신의주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다만 뚜렷하게 부각되는 도시가 부재한 가운데 청진, 혜산, 평성, 라선, 신의주 등이 대체로 10.0%대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74〉 북한에서 중간 정도 사는 도시(평양 제외)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신의주	청진	라선	혜산	원산	남포	평성	사리원	개성	전체
2012년	19	23	24	16	11	4	18	3	4	122
	15.6	18.9	19.7	13.1	9.0	3.3	14.8	2.5	3.3	100.0
2013년	19	29	12	22	8	7	26	4	5	132
	14.4	22.0	9.1	16.7	6.1	5.3	19.7	3.0	3.8	100.0
2014년	21	24	21	36	8	9	17	5	6	147
	14.3	16.3	14.3	24.5	5.4	6.1	11.6	3.4	4.1	100.0
2015년	18	31	22	24	7	7	27	6	2	144
	12.5	21.5	15.3	16.7	4.9	4.9	18.8	4.2	1.4	100.0
전체	77	107	79	98	34	27	88	18	17	545
	14.1	19.6	14.5	18.0	6.2	5.0	16.1	3.3	3.1	100.0

북한에서 가장 못 사는 도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황해북도 인민위원회 소재지인 사리원이 가장 못 산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원산이 못 사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혜산에 이어 개성이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조사를 2014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혜산의 경우 중간 정도 사는 도시라는 응답이 7.8% 감소한 반면 가장 못 사는 도시라는 응답이 9.3% 증가한 점과 원산의 경우 가장 못 사는 도시라는 응답이 6.7% 감소한 점이 주목된다.

〈표 3-75〉 북한에서 가장 못 사는 도시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신의주	청진	라선	혜산	원산	남포	평성	사리원	개성	전체
2012년	2	7	4	15	20	6	6	33	16	109
	1.8	6.4	3.7	13.8	18.3	5.5	5.5	30.3	14.7	100.0
2013년	0	12	1	23	18	18	1	34	24	131
	0.0	9.2	0.8	17.6	13.7	13.7	0.8	26.0	18.3	100.0
2014년	2	17	4	16	35	13	2	36	18	143
	1.4	11.9	2.8	11.2	24.5	9.1	1.4	25.2	12.6	100.0
2015년	3	8	1	30	26	20	5	39	14	146
	2.1	5.5	0.7	20.5	17.8	13.7	3.4	26.7	9.6	100.0
전체	7	44	10	84	99	57	14	142	72	529
	1.3	8.3	1.9	15.9	18.7	10.8	2.6	26.8	13.6	100.0

4. 평가와 시사점

2015년 조사에서 시장화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점은 북한산 원부재자나 상품의 사용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중국산이 6.6% 감소하고 북한산이 4.4% 증가하였으며, 무엇보다 2012년 조사에서 73.0%에 달하였던 중국산의 비중이 2015년 조사에서는 59.2%로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는 64.5%가 중국산이기에 여전히 중국산의 비중이 크고 특히 소매장사나 개인입가공, 편의봉사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부문에서 중국산의 비중이 크지만, 김정은 정권이 강조하는 국산화가 제한적이거나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주목된다.

사적 경제활동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으로 각종 단속과 뇌물제공이 52.8%로 절반을 넘어선 점도 주목된다. 2012년 조사에서 4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사업자금마련은 2015년 조사에서 15.0%로 떨어진 반면 2012년 조사에서 10.1%를 차지하였던 각종 단속과 뇌물제공은 절반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는 북한에서 각종 단속이나 뇌물과 관련된 부정부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이 확대 재생산되기보다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을 가능성도 나타났다. 2015년 조사에서 2014년 조사보다 가족 이외의 타인을 고용한 경우가 증가하였으나 고용 규모는 정체된 양상이고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인식에서 여전히 최고영도자와 당

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잘 살기 위한 정책으로 북한 당국이 강조하는 사상성 강화는 감소한 대신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증가한 점도 주목된다. 특히 2015년 조사에서 대학학력 수준에서 내부의 부분적인 개혁인 경제관리방법 개선 대신 체제전환의 함의를 담은 자본주의 도입이 크게 증가한 점도 향후 추세를 주시해볼 만한 사항이다. 전반적으로 북한 정권이 강조하는 사상성 강화나 과학기술발전을 통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인 반면 자본주의 도입이나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경제관리방법 개선 등 개혁개방에 대한 선히가 상당히 폭넓게 존재하는 가운데 특히 지식인 층의 인식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인 상거래 대상으로 지방산업 시설이나 소규모 생산설비 등을 지적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2015년 조사에서 소득의 분화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점은 북한 내에서 사적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소득 불평등이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을 가능성이다.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절반을 넘는 가운데,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최하위 20%와 최상위 20% 간에 45배 이상으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하위 20%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만원 미만인 반면 최상위 20%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9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중위소득의 50% 미만 비율인 상대적 빈곤률도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북한 내에서의 소득불평등이 남한보다 커지고 있을 가능성도 시사한다.

이러한 소득 분화는 대내외 인식의 차이로도 이어져 소득에 따른 계

층분화가 사회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장사나 부업 등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나 남한문화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남한문화에 더 친숙하며, 남한의 대북무력도발 가능성도 더 낮게 인식하고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를 훨씬 더 지지했다는 응답이 더 많은 가운데, 남한체제로의 통일에 대한 선호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연령대에 따른 경제활동과 인식의 분화도 나타나고 있다. 사회 진출 시기를 중심으로 연령대를 크게 네 구간으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장사경험은 35~55세 미만에서 가장 많은 가운데 잘 살기 위한 정책 인식에서 35~45세 미만은 부분개혁인 경제관리개선을 선호하는 반면 45~55세 미만은 체제전환 성격의 자본주의 도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인식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35세 미만 청년 층의 보수적인 경향이다. 35세 미만에서는 남한이 적대대상이라는 인식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고 자본주의를 더 지지했다는 응답도 가장 낮으며 무엇보다 대내인식과 관련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 정도가 절반 이상일 것이라는 응답이 높고 북한 정권의 예상유지 기간이 10년 이내일 것이라는 응답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노선인 경제와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과 관련하여 핵무기 보유에 대해 찬성하였다는 응답이 55세 미만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20대에서 59.6%로 가장 높게 나온 점도 정권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주목된다.⁵³

마지막으로 부의 이동에 따른 지역별 분화를 보면 도 단위로는 전체

적으로 평안남도가 가장 잘 사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2014년 이후 평안북도가 잘 산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가장 못사는 도로는 강원도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5년 조사에서 황해남도과 황해북도라는 응답이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

53_ 35세 미만 청년층의 보수적인 정치성향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선행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최봉대, “북한 청년층과 정치적 세대구성 문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김정은 정권과 청년 세대의 다중적 정체성』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5) 참조.

제4장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4장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

2012년 이후 네 번째 실시된 2015년 사회변동조사와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득의 불평등과 그에 따른 계층 간 격차가 매우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사적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다. 북한이 아무리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사적 경제주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식적인 경제영역과 비공식적인 경제영역을 넘나드는 사적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더 이상 막을 수 없고 특히 체계적인 과세제도 등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공적 규제나 관리수단 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적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먼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월평균 가구 생활비나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을 보면 소득 격차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한 반면 최상위 5% 정도는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월평균 가구생활비가 5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장기업소 등의 경영 자율성이 커지면서 공식적인 경제영역에서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위 잘 나

가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국가적으로 우선 순위가 높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간에 다양한 편차들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에서의 분화와 격차는 국가가 지급하는 생활비에서의 차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확대되고 있다.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분화에서 최하위 20%가 월평균 가구소득이 2만원 미만인 반면 최상위 20%는 9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분위 소득배율로 보면 45를 넘는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도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비교될 수 없겠지만, 북한 내 소득 불평등이 남한사회보다 더 심해지고 있을 가능성마저 제기한다.

소득 불평등에 따른 계층 간 격차는 우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먼저 식생활을 보면 탈북직전 1년간 식생활에서 양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응답자가 10명 중 8명으로 나타났으나, 식생활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귀속적인 계층 구분에 따른 상층의 경우 쌀밥 식사가 100.0%,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고기섭취도 84.8%였으나 중층은 쌀밥 식사가 66.0%,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고기섭취는 42.2%였으며 하층의 경우는 쌀밥 식사가 29.0%,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고기섭취는 6.8%에 불과하였다.

둘째 의생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계절마다 한두 벌의 옷을 구입하였다는 응답 비율을 보면 귀속적인 계층 구분에 따른 상층의 경우 81.8%였고 중층의 경우 47.7%였으며 하층의 경우는 11.2%에 불과하였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상층의 경우는 주로 남한산이나 일본산 의류를 백화점이나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살림집이나 남한물건 이용경험에서도 소득 격차가 확인된다. 귀속적 계층에서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주로 아파트(45.5%)나 단독주택(39.4%)에서 거주한 반면 하층의 경우는 연립주택에 거주한 경우가 63.8%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물건을 이용한 경험에서도 계층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남한물건을 이용한 경험에 있다는 응답을 보면 귀속적 계층의 상층에서는 88.2%인 반면 중층에서는 76.8%, 하층에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9%를 차지하였다.

넷째 정보화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격차가 나타나지만 특히 중상층과 하층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귀속적 계층에 따른 격차를 살펴보면 휴대전화 보유의 경우 상층은 85.7%이고 중층은 62.4%로 절반을 훨씬 넘는 반면 하층은 19.4%에 불과하였고, 컴퓨터의 경우는 상층이 57.1%, 중층이 30.7%인 반면 하층은 3.2%였으며, 노트북의 경우는 상층이 57.1%, 중층이 47.5%인 반면 하층은 16.1%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화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격차가 확인된다.

다섯째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도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무엇보다 외부 소식을 접하는 수단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당국이 통제하는 공식적인 매체나 계기보다 주변사람이나 외국매체 등 비공식적인 통로를 더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지역으로 자주 간다는 응답은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이 2만원 미만인 최하층에서 13.7%였으나 90만원 이상의 최상층에서는 이보다 32.2% 높은 45.9%로 나타났다. 역으로 거의 못 간다는 응답은 2만원 미만의 최하층에서 44.2%인데 비해 90만원 이상의 최상층에서는 이보다 25.8% 낮은 18.4%로 나타났다. 외부소식을 접하는 통로를 보면 사적 경제활동을 통

한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으로 상위 10%인 150만원 이상의 경우 150만원 미만에 비해 주변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듣는다는 응답이 7.8% 높은 54.5%이고 외국매체라는 응답은 10.8% 높은 39.4%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신문, 방송, 강연, 학습 등 북한 당국이 통제하는 공식 매체나 계기를 통해 외부소식을 듣는다는 응답은 소득이 150만원 미만의 경우 24.7%를 차지하였지만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는 이보다 18.7% 낮은 6.0%로 나타났다.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의 분화는 의식의 분화로 이어지고 있다. 먼저 소득이 높을수록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는 경제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을 더 크게 갖고 있으며,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를 더 지지한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내부 개혁과 변화를 강조하는 경제관리방법 개선의 경우 최하위 20%인 2만원 미만에서는 14.3%였지만 최상위 20%인 90만원 이상에서는 31.4%로 최하위 20%보다 17.1% 높았고, 체제전환적 함의를 지닌 자본주의 도입의 경우에도 최하위 20%인 2만원 미만에서는 22.9%였지만 최상위 20%인 90만원 이상에서는 35.7%로 최하위 20%보다 12.8% 높게 나타났다. 북한 거주 당시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를 더 지지했다는 응답은 최하위 20%인 2만원 미만에서 65.3%였지만 최상위 20%인 90만원 이상에서는 이보다 20.4% 높은 85.7%로 나타났다.

둘째 남한문화에 대한 경험이나 친숙도도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올라갈수록 남한문화 경험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남한문화에도 더 친숙한 것으로 나타난다. 남한문화 경험을 살펴보면 먼저 자주 접한다는 응답의 경우 소득이 2만원 미만인 최하위 20%에서 27.4%였으나 소득이 90만원 이상인

최상위 20%에서는 이보다 38.9% 높은 66.3%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 두 번 또는 전혀 접하지 못하였다는 응답은 최하위 소득 20%의 경우 각각 53.7%와 18.9%였으나 최상위 소득 20%의 경우는 이보다 각각 24.1%와 14.5% 낮은 29.6%와 4.1%로 나타났다. 남한문화에 대한 친숙도의 경우도 최하위 소득 20%인 2만원 미만에서 매우 친숙 또는 약간 친숙하다는 응답이 각각 44.4%와 48.1%로 비슷한 반면 최상위 소득 20%인 90만원 이상에서는 매우 친숙하다는 응답이 최하위 소득 20%보다 24.4% 높은 68.8%였고 대신 약간 친숙하다는 응답은 20.1% 낮은 28.0%로 나타났다.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높을수록 매우 친숙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70.0%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

셋째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수준에 따라 남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상위 소득 20%에서 적대대상이라는 인식은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7.7~10.3% 정도 낮고, 경제대상이라는 인식은 6.5~9.3% 정도 낮은 반면 협력대상이라는 인식은 최하위 소득 20%보다 12.7%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높을수록 남한이 북한에 대해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을 더 낮게 보고 통일방식에서도 남한체제로의 통일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한의 대북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최하위 소득 20%의 경우 67.0%였지만 최상위 소득 20%에서는 이보다 27.2% 낮은 39.8%로 나타났다. 통일방식에서도 현 남한체제로의 통일에 대한 지지를 보면 최상위 소득 10%에서는 52.4%로 나타났으나 최하위 소득 10%에서는 이보다 33.4% 낮은 19.0%로 나타났다.

이제까지 살펴본 사적 경제활동 소득에 따른 계층 분화는 북한에서

새로운 사회적 범주가 등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계층구조는 중장기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서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높을수록 개혁적이고 개방적이며 대남친화적인 인식이 커진다는 사실은 북한사회가 어디로 갈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동시에 소득 격차의 확대 자체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확대재생산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이념과 그의 실현을 공언하는 정권의 정당성을 허물 수 있다. 사적 경제활동과 그로 인한 사회의 개방성과 다원성 증가나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 긴장의 증대에 대해 북한 정권이 어떻게 적응해 갈지 주목된다. 단기적이고 단선적으로 나타날 현상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중장기적인 변화의 갈래에는 정치적 자유화뿐 아니라 정권 자체의 변화도 포함될 수 있다. 이는 북한사회의 변화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관찰이 정치적인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26

북한사회변동 2015

발행 2016. 08. 31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인 정근식
저자 장용석 · 정은미 · 박명규 · 김경민
등록 119-82-67975 (2006.7.7)
주소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전화 02) 880-4052-4, 874-7304
팩스 02) 874-7305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
디자인 [주]다해미디어 (02-722-7123)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북한사회변동 2015 :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저자: 장용석, 정은미, 박명규, 김경민.
--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p. ; cm.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 26)
ISBN 979-11-955093-5-5 93340 : 비매품
북한 사회[北韓社會]
309.111-KDC6
301.095193-DDC23 CIP2016024504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